

주요국 예산안 2014

2014.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승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정인 · 최주연 · 한혜란 (총 론)

이정인 · 이지혜 (미 국)

서주영 (캐나다)

이정은 (일 본)

김진아 (프랑스)

김선미 (독 일)

하에스더 (영 국)

김은숙 (호 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부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전망	3
가. 세계경제전망	3
나.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7
2. 세계재정전망	10
가. 세계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10
나. 주요 국가별 재정전망	15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18
가. 통화정책	18
나. 재정정책	18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7개국 종합 -	20
1. 미국 (FY2015: 2014. 10 ~ 2015. 9)	23
2. 캐나다 (FY2013-14: 2013. 4 ~ 2014. 3)	25
3. 일본 (FY2014: 2014. 4 ~ 2015. 3)	27
4. 프랑스(FY2014: 2014. 1 ~ 2014. 12)	30
5. 독일(FY2014: 2014. 1 ~ 2014. 12)	32
6. 영국(FY2014-15: 2014. 4 ~ 2015. 3)	35
7. 호주(FY2013-14: 2013. 7 ~ 2014. 6)	38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국	43
1. 경제 및 재정전망	47
가. 경제전망	47
나. 재정전망	48
2. 예산기조	51
3. 예산안 내용	51
가. 세입	52
나. 세출	52
4. 주요 재정정책	55
가. 재정건전화	55
나. 성장(Growth), 기회(Opportunity), 재정책임(Fiscal Responsibility)의 로드맵	56
II. 캐나다	58
1. 경제 및 재정전망	62
가. 경제전망	62
나. 재정전망	63
2. 예산기조(Budget 2013)	66
3. 예산안 내용	68
가. 세입	68
나. 세출	70
4. 주요 재정정책	73
가. 재정건전화	73
나. 경기부양책	75
다. 기타	76

III. 일본	81
1. 경제 및 재정전망	85
가. 경제전망	85
나. 재정전망	87
2. 예산기조	88
3. 예산안 내용	90
가. 세입	91
나. 세출	92
4. 주요 재정정책	97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97
나. 재정건전화	98
IV. 프랑스	103
1. 경제 및 재정전망	107
가. 경제전망	107
나. 재정전망	108
2. 예산기조	111
3. 예산안 내용	112
가. 세입내역	112
나. 세출내역	113
4. 주요 재정정책	117
가. 복지지출 관리 정책	117
나. 재정건전화	118
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19
V. 독 일	121
1. 경제 및 재정전망	125
가. 경제전망	125
나. 재정전망	126

2. 예산기조	129
3. 예산안	132
가. 재정수입	132
나. 재정지출	133
4. 주요 재정정책	136
가. 재정건전화	136
나. 에너지정책의 변화	138
다. 성장친화적 환경 조성	141
VI. 영 국	143
1. 경제 및 재정전망	146
가. 경제전망	146
나. 재정전망	147
2. 예산기조	150
3. 예산안 내용	151
가. 세입	151
나. 세출	155
4. 주요 재정정책	160
가. 재정건전화	160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62
VII. 호주	165
1. 경제 및 재정전망	169
가. 경제전망	169
나. 재정전망	171
2. 예산기조	176
3. 예산안 내용	178
가. 재정수입	178
나. 재정지출	181

4. 주요 재정정책	184
가. 재정건전화	184
나. 경제활성화	186
다. 공정사회구현	188

표목차

1부 총론

〈표 I-1〉 세계경제전망	3
〈표 I-2〉 WEO 세계경제전망(GDP 성장률)	4
〈표 I-3〉 주요국의 경제전망	9
〈표 I-4〉 국가별 재정지표	10
〈표 I-5〉 2010~2013년 조세정책	13
〈표 I-6〉 주요국의 재정전망	17
〈표 II-1〉 각국 예산안 일정	20
〈표 II-2〉 2014 주요국 재정전망	21
〈표 II-3〉 미국 경제전망	23
〈표 II-4〉 미국 재정전망	23
〈표 II-5〉 캐나다 경제전망(2013년 11월 기준)	25
〈표 II-6〉 캐나다 재정전망(2013년 11월 기준)	25
〈표 II-7〉 일본 경제전망	27
〈표 II-8〉 일본 주요 재정지표	28
〈표 II-9〉 프랑스 2014년 주요 경제 및 재정전망	30
〈표 II-10〉 경제전망	32
〈표 II-11〉 재정전망	32
〈표 II-12〉 영국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35
〈표 II-13〉 경제전망	38
〈표 II-14〉 재정전망	39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미국 경제전망	48
〈표 I-2〉 미국 재정전망	49
〈표 I-3〉 분야별 세입전망	52
〈표 I-4〉 항목별 지출전망	53
〈표 I-5〉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54
〈표 II-1〉 캐나다 경제전망(2013년 11월 기준)	63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3년 11월 기준)	64
〈표 II-3〉 Budget 2013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65
〈표 II-4〉 세입전망	69
〈표 II-5〉 프로그램 지출 전망	71
〈표 II-6〉 균형예산 달성계획(Plan to Return to Budget Balance)	74
〈표 II-7〉 FY2013-14 시장채무(Market Debt)	75
〈표 II-8〉 캐나다 2013년 예산안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예산	75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86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87
〈표 III-3〉 FY2014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90
〈표 III-4〉 FY2014 조세 및 인지수입	91
〈표 III-5〉 FY2014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93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전망	107
〈표 IV-2〉 프랑스 FY2014 재정전망	108
〈표 IV-3〉 FY2014 재정수지 전망	109
〈표 IV-4〉 2012~2017 재정수지 전망	110
〈표 IV-5〉 2012-2017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 추이	111

〈표 IV-6〉 FY2014 세입전망	113
〈표 IV-7〉 2014 미션별 세출 내역	114
〈표 IV-8〉 FY2013 수정예산안	116
〈표 IV-9〉 사회보장부문 예산수지 전망	118
〈표 V-1〉 기관별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126
〈표 V-2〉 중기재정계획(2013-2017)	127
〈표 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128
〈표 V-4〉 기관별 연방정부 부채규모 전망	129
〈표 V-5〉 FY2013 잠정결산	131
〈표 V-6〉 재정수입의 항목별 규모	132
〈표 V-7〉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추이	133
〈표 V-8〉 2013년 독일안정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37
〈표 V-9〉 에너지 및 기후기금 재정계획	138
〈표 V-10〉 연방정부 EKF 재원투입 계획	139
〈표 V-11〉 에너지 및 기후기금 재정계획 수정안	140
〈표 VI-1〉 2013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146
〈표 VI-2〉 영국 경제전망	147
〈표 VI-3〉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149
〈표 VI-4〉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152
〈표 VI-5〉 경상세입 전망	153
〈표 VI-6〉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156
〈표 VI-7〉 총관리지출 전망	158
〈표 VI-8〉 재정건전화 총규모 전망	160
〈표 VI-9〉 부처별 지출한도(DEL) 감축	161
〈표 VI-10〉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변화	162
〈표 VI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170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172
〈표 VII-3〉 주요 경제지표 전망	173
〈표 VII-4〉 예산총량 전망	174
〈표 VII-5〉 FY2013-14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179
〈표 VII-6〉 FY2013-14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재정수입 비교	180
〈표 VII-7〉 FY2013-14 예산안 재정지출 규모	182
〈표 VII-8〉 FY2013-14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비교	183
〈표 VII-9〉 주요 예산절감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85

그림목차

1부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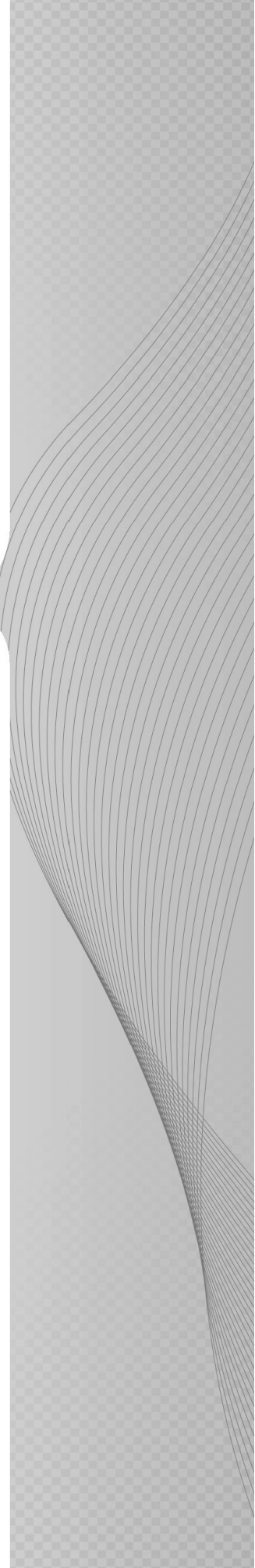
[그림 I-1] 국제 인플레이션 전망	5
[그림 I-2] EU 경제성장률	6
[그림 I-3] 미국, 일본, 유로존 국가의 재정상황	14
[그림 I-4] EU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15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기준선전망과 대통령예산안의 재정전망 비교	55
[그림 II-1] G7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net debt) 비율(2013년 기준)	65
[그림 II-2]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순채무-연방정부	77
[그림 II-3]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순채무-지방정부	77
[그림 II-4] 재정갭 전망 결과	77
[그림 III-1]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	100
[그림 IV-1] 재정적자 변화 추이	109
[그림 IV-2]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추이 및 2014년 목표	117
[그림 IV-3] 미래투자프로그램 투자 내역	120
[그림 V-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갭 변화 추이	130
[그림 V-2] 구조적 재정적자 추이	131
[그림 V-3] 2014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비중	134

[그림 V-4] 연방정부 재정지출 추이	138
[그림 V-5] 교육·연구분야의 지출 비중 추이	141
[그림 VI-1] 공공부문 순부채(PSND) 전망	149
[그림 VI-2] FY2014-15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 규모	155
[그림 VI-3] 총관리지출(TME)의 구성 변화	157
[그림 VI-4] FY2014-15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159
[그림 VI-5] 법인세 인하에 따른 GDP 증가	164
[그림 VII-1] 실질 GDP 성장률 주요 선진국 간 비교	170
[그림 VII-2]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75
[그림 VII-3]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176
[그림 VII-4] FY2013-14 예산안 조세수입 구성	179
[그림 VII-5] FY2013-14 예산안 재정지출 재원배분	182
[그림 VII-6] 장기 예산절감(Long-term Savings)과 순채무	186

제 1 부
총 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¹⁾

1. 세계 거시경제전망

가. 세계경제전망

- IMF, OECD, EU 등 주요 국제기구는 2014년도 세계경제가 선진국 경제를 원동력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표 I-1〉 세계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실질 GDP(IMF 전망)				실질 GDP(OECD 전망)				실질 GDP(EU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미국	2.8	1.9	2.8	3.0	2.8	1.7	2.9	3.4	2.8	1.6	2.6	3.1
유로지역	-0.7	-0.4	1.0	1.4	-0.6	-0.4	1.0	1.6	-0.4	0.0	1.4	1.9
일본	1.4	1.7	1.7	1.0	1.9	1.8	1.5	1.0	2.0	2.1	2.0	1.3
중국	7.7	7.7	7.5	7.3	7.7	7.7	8.2	7.5	7.8	7.5	7.4	7.4
인도	3.2	4.4	5.4	6.4	3.3	3.4	5.1	5.7	3.8	2.9	4.0	5.3
세계	3.1	3.0	3.7	3.9	3.1	2.7	3.6	3.9	3.1	2.8	3.6	3.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4

OECD, *Worl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3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3*

- (IMF 전망) IMF WEO Update(2014.1)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013년 10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
 - (경제성장률)²⁾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7%p 상승한 3.7%(2013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승, 7월 전망 대비 0.1%p 하락), 2015년은 3.9%로 전망

1) 본 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4.1, IMF, *Fiscal Monitor Update*, 2013.10, OECD, *Economic Outlook*, 2013.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3*, 2013.11을 발췌한 것임

2) WEO Update(2014.1)를 기준으로 함

- (선진국) 선진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0.9%p 상승한 2.2%(2013년 10월 전망 대비 0.2%p 상승, 7월 전망 대비 0.1%p 상승), 2015년을 2.3%로 전망
- (신흥개도국) 신흥개도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0.4%p 상승한 5.1% (2013년 10월 전망과 동일, 7월 전망 대비 0.3%p 하락), 2015년을 5.4%로 전망

〈표 I-2〉 WEO 세계경제전망(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4월 2013 WEO		7월 2013 WEO Update		10월 2013 WEO		1월 2014 WEO Update		
	'13	'14	'13	'14	'13	'14	'13	'14	'15
세계경제 ¹⁾	3.3	4.0	3.1	3.8	2.9	3.6	3.0	3.7	3.9
선진국	1.2	2.2	1.2	2.1	1.2	2.0	1.3	2.2	2.3
미국 ²⁾	1.9	3.0	1.7	2.7	1.6	2.6	1.9	2.8	3.0
유로존	-0.3	1.1	-0.6	0.9	-0.4	1.0	-0.4	1.0	1.4
일본	1.6	1.4	2.0	1.2	2.0	1.2	1.7	1.7	1.0
그 외 선진국 ³⁾	2.5	3.4	2.3	3.3	2.3	3.1	2.2	3.0	3.2
신흥국 및 개도국 ⁴⁾	5.3	5.7	5.0	5.4	4.5	5.1	4.7	5.1	5.4
아시아	7.1	7.3	6.9	7.0	6.3	6.5	6.5	6.7	6.8
중국	8.0	8.2	7.8	7.7	7.6	7.3	7.7	7.5	7.3
인도 ⁵⁾	5.7	6.2	5.6	6.3	3.8	5.1	4.4	5.4	6.4
아세안-5 ⁶⁾	5.9	5.5	5.6	5.7	5.0	5.4	5.0	5.1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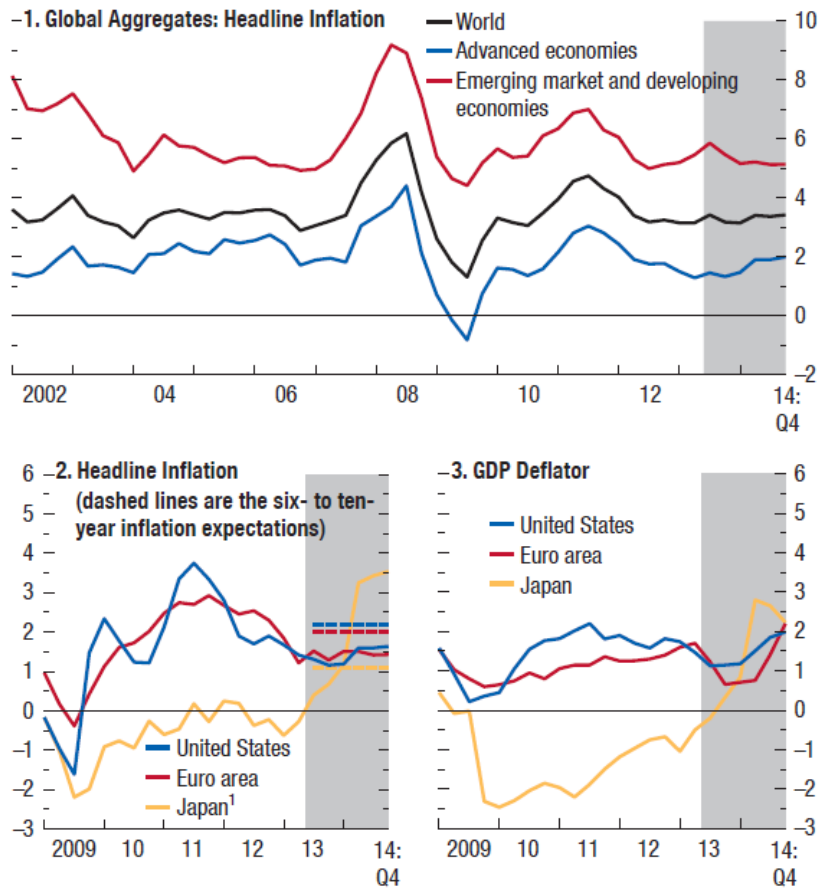
- 주: 1)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세계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비중의 90%를 설명
 2) 미국 데이터는 경제분석국의 국민소득과 상품계정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10월 2013 WEO 해당)
 3) G7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와 유로지역 국가는 제외
 4)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신흥개발도상국의 약 80%를 설명
 5)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 기준(7월과 10월 2013 WEO 해당)
 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3*, Update July 2013, October 2013, Update January 2014 편집

- (인플레이션) WEO(2013.10)는 선진국의 생산갭이 여전히 존재하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 유로지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의 목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경우 소비세 인상과 새로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물가 상승 요인임

- (신흥국) 원자재 가격 하락과 성장 둔화는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지만 생산 능력 제약과 환율 약세로 인한 가격전가 효과가 하방압력을 상쇄해 인플레이션은 약 5~6%로 전망

[그림 1-1] 국제 인플레이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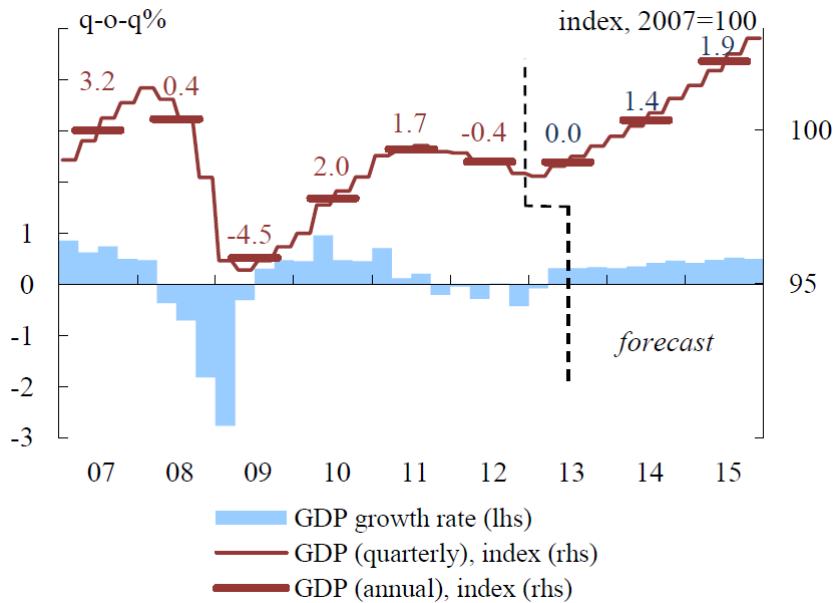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Figure 1.6

- (실업률) 여러 신흥국(특히 중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선진국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주요 리스크) *WEO Update(2014.1)*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예상보다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 신흥개도국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됨

- (OECD 전망) *OECD Economic Outlook*(2013.11)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여 '14년 경제성장률을 3.6%(13년 2.7%)로 전망
 - OECD 내 경제성장 모멘텀이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임에도 아직 상당한 하방위험이 있어 완전한 성장궤도로 진입은 불확실
 - 유로지역 은행부문의 취약성 및 일본의 재정상황과 같은 장기 위험요인이며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출구전략 등에 따른 금융혼란으로 심화될 가능성 존재
 - 경제성장 둔화추세에도 신흥국들은 각각 차이를 보이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
- (EU 전망)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3*(2013.11)에 따르면 EU지역의 2013년 2분기 전년분기 대비 GDP가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침체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2] EU 경제성장률



주: 그래프 위의 숫자는 연간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3*

- 2013년 5월 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성장회복이 국내 수요 확대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
- EU회원국 전체의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0.0%, 유로존(EA18)의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0.4%를 기록할 전망

- EU회원국 전체와 유로존(EA18)의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1.4%, 1.1%, 2015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1.9%, 1.7%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최근 몇 년간의 중요한 구조적 개혁과 재정건전화 시행에 의해 유럽에서의 내부 및 외부 조정이 계속되어 내수 조건 개선

나.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 (IMF 전망)³⁾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는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 국가 및 지역별로 중요한 차이를 보임
 - (미국) *WEO Update*(2014.1)는 최근 예산 합의로 인한 재정적 지연 개선 등으로 2014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8%(10월 전망 대비 0.2%p 상승), 2015년은 3.0%로 전망
 - (유로) 유로지역은 경기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4년 1.0%(10월 전망 대비 0.1%p 상승), 2015년은 1.4%로 전망됨
 - 다양한 재정 압력에 직면해 온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 국가들은 완만한 개선을 보일 전망
 - (일본) 일시적 경기부양이 소비세 인상 영향을 일부 상쇄하면서 일본의 2014년 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1.7%(10월 전망 대비 0.4%p 상승), 2015년은 1.0%로 전망
 - (중국) 투자 증대로 인한 2013년 하반기 경기 반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7.5%(10월 전망 대비 0.3%p 상승), 2015년은 7.3%로 전망
 - (러시아·브라질) 예상 대비 부진한 국내 수요로 인해 2014년 경제성장률은 10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되어 러시아는 2.0%, 브라질은 2.3%로 전망
 - (한국) 추경,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2012년 2% 경제성장률에서 벗어나 2013년은 2.8%, 2014년은 3.7%(2013년 10월 전망 기준)의 완만한 회복세 예상
- OECD의 주요국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13.11)
 - (미국) 일률삭감(sequestration)의 부실한 목표설정, 높은 장기금리, 부채한도 협상 난국이 경제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2014~15년에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으로 성장세 예상

3) 한국은 *WEO*, 2013.10을, 나머지 국가들은 *WEO Update*, 2014.1을 기준으로 함

- (유로지역) 대부분 국가의 성장이 재개되었고 신뢰도가 향상되었지만 유럽재정위기 이후 잔존하는 재정압력과 높은 실업률의 영향으로 더딘 경제성장 예상
 - 몇몇 취약한 유로국가의 부실한 은행 재정상태, 지속 불가능한 국가재정 및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으로 유로지역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음
- (일본) 2014~15년에는 2013년의 경기부양 통화정책, 민간부문의 신뢰 향상 및 양호한 재정상황과 노동시장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2014~15년 공공투자 감소와 소비세율의 상승, 재정건전화 조치로 경제 성장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전망
- (한국) 가계부채의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도 2014~15년에 4%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GDP의 5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여건과 환율에 취약함
- (신흥국) 국가마다 경제성장 정도는 다르며 OECD 내 신흥국은 대외수요 감소와 긴축적 재정상황에도 경제성장이 회복력이 있으며, BRIICs⁴⁾는 고인플레이션과 공급측면의 제약 및 긴축재정으로 경제성장이 주춤
 - (중국) 2014~15년에는 내수가 감소하여 GDP 성장률은 2014년 8%, 2015년 7.5%로 둔화될 전망

4)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을 지칭

〈표 I-3〉 주요국의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 GDP					
미국	1.8	2.8	1.7	2.9	3.4
일본	-0.6	1.9	1.8	1.5	1.0
유로지역	1.6	-0.6	-0.4	1.0	1.6
한국	3.7	2.0	2.7	3.8	4.0
실업률(Unemployment rate)					
OECD	8.0	8.0	8.0	7.8	7.5
미국	8.9	8.1	7.5	6.9	6.3
일본	4.6	4.3	4.0	3.9	3.8
유로지역	10.1	11.3	12.0	12.1	11.8
한국	3.4	3.2	3.2	3.1	3.0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미국	3.1	2.1	1.5	1.8	1.9
일본	-0.3	0.0	0.2	2.3	1.8
유로지역	2.7	2.5	1.4	1.2	1.2
한국	4.0	2.2	1.2	2.1	3.0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3*

- EU의 주요국 경제전망(*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3*)
- (미국)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6%, 2015년은 3.1%로 상승할 전망
 - 재정정책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제전망이 악화되어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5월 전망치보다 0.3%p 낮아진 1.6%로 전망
 - 신용, 지출, 투자의 회복과 함께 재정적 견인(fiscal drag)이 약화함에 따라 2014년에 2.6%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3년 5월 전망과 같은 수치임
 - (일본)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를 기록하고 2015년엔 그보다 낮은 1.3%를 기록할 전망
 -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2014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2013년 5월 전망치 1.6%에 비해 0.4%p 증가
 - (중국) 2014년과 2015년에 실질 GDP 성장률 7.4%를 기록할 전망
 - 기술추격의 약화, 한계투자수익의 감소, 총노동인구의 감소 시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국이 점차적으로 낮은 성장기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성장률 전망치 하락

2. 세계재정전망

가. 세계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 (IMF 전망)⁵⁾ 선진국의 공공 채무는 중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거의 유지하는 반면 신흥개도국은 GDP의 30% 정도로 떨어질 전망
 - (재정지표 전망) 선진국의 재정 적자는 감소하였으나 평균 채무비율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여 세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은 저조한 상태
 - (선진국) 2013년 선진국의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3.4%(경기조정수지)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2014년부터 재정건전화 속도는 둔화될 전망
 - 2013~2014년 선진국의 평균 채무비율은 GDP 대비 약 110%(2007년 대비 35%p 상승)로 여전히 높으나 2013~2014년 동안 완만한 안정세가 예상됨
 - (신흥개도국) 재정적 완충 능력이 약한 상태로 2013~2014년 동안 평균 채무비율은 지난 전망에 비해 증가할 전망
 - (저소득국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원조 감소로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

〈표 I-4〉 국가별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2011	2012	2013(전망)	2014(전망)
[재정수지(종합수지)]				
세계	-4.5	-4.3	-3.7	-3.0
선진국	-6.5	-5.9	-4.5	-3.6
미국 ¹⁾	-9.7	-8.3	-5.8	-4.6
유로존	-4.2	-3.7	-3.1	-2.5
일본	-9.9	-10.1	-9.5	-6.8
신흥경제국	-1.7	-2.1	-2.7	-2.5
중국	-1.3	-2.2	-2.5	-2.1
인도 ²⁾	-8.5	-8.0	-8.5	-8.5
저소득국가	-1.7	-2.6	-3.0	-3.2

5) 자세한 내용은 IMF의 *Fiscal Monitor*, 2013.10과 *WEO*, 2013.10을 참고

〈표 I-4〉의 계속

	2011	2012	2013(전망)	2014(전망)
[재정수지(경기조정수지)]				
선진국	-5.4	-4.8	-3.4	-2.7
미국 ¹⁾	-7.3	-6.3	-3.9	-3.2
유로존	-3.7	-2.7	-1.6	-1.2
일본	-8.5	-9.2	-9.2	-6.7
신흥경제국	-2.0	-2.1	-2.3	-2.1
중국	-0.2	-0.9	-1.2	-1.0
인도 ²⁾	-9.1	-8.1	-8.2	-8.2
[국가 채무(총채무)]				
세계	79.4	80.8	79.7	79.6
선진국	104.4	108.7	108.5	109.2
미국 ¹⁾	99.4	102.7	106.0	107.3
유로존	88.2	93.0	95.7	96.1
일본	230.3	238.0	243.5	242.3
신흥경제국	37.8	36.5	35.3	34.1
아시아	36.7	34.5	32.0	30.1
중국 ³⁾	28.7	26.1	22.9	20.9
인도 ²⁾	66.4	66.7	67.2	68.1
저소득국가	40.8	41.9	41.4	42.2

주: 1) 미국 데이터는 경제분석국의 국민소득과 상품계정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2019년 7월부터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을 회계연도에 근거하여 나타냄

3) 2010년에 채무데이터는 2011년 National Audit Report의 정부 하위부문의 채무데이터도 포함
출처: IMF, *Fiscal Monitor 2013 October*, Table 1, 2. 재구성

- (재정 기초) 2014년 선진국은 재정긴축 기초가 다소 완화되고 신흥개도국은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기초를 유지할 전망
 - 유로지역과 미국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의 긴축 기초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전화 위험 요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자율, 경제성장 하방위험, 우발부채 등을 지적
 - (이자율) 유로지역에 금융변동성 위험이 남아 있어 이자율 리스크가 증가하고, 신흥국에 대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파급 효과로 위험 증대

- (경제성장 하방위험) 유로지역의 경제성장 하방위험과 신흥개도국의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은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 (우발부채) 신흥개도국의 금융부문 우발부채는 재정건전성을 위협
- (재정건전화 관련 정책 권고) 각 국가들은 재정수지 강화, 신뢰 회복을 우선시해야 하고 장기 성장을 위해 채무비율 축소 및 공공지출에 대한 조정 필요
 - (선진국) 재정건전화는 중기 재정조정계획⁶⁾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하고, 재정조정 속도는 경제상황과 채무수준, 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
 - (신흥개도국) 공공지출의 목표를 성장과 사회적 지원으로 설정할 필요
 - (저소득국가) 전반적으로 재정 프레임워크의 재설계 및 개혁 필요

〈참고 1-1〉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 이후의 조세제도 개혁⁷⁾

- 세계 조세수입 추이
 - (선진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수확대 정책을 반영해 수입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반등
 - (신흥국·저소득 국가) 예상보다 수입이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지속적 지출 상승 압력을 해결하기 어려운 일시적 요인에서 유발
 - (개도국) 개발원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국가조세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
 - 경제위기 여파로 수입 증대와 동시에 조세 구조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조세개혁 시행
 - 조세로 인한 비효율성 최소화를 위해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원 확대, 부정적 외부효과 축소, 납세 순응 강화에 중점
 - 조세 왜곡의 해결, 조세수입 증대,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조세개혁 필요
 - 소득불평등에 대한 조세정책의 효과 평가는 부족한 상태

6) 중기 재정조정계획은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을 자동안정장치로 완화하기 위해 여력을 두는 계획을 의미
 7) IMF, *Fiscal Monitoring*, 2013.10의 일부 요약

〈표 I-5〉 2010~2013년 조세정책

Country	Personal Income Taxation		Corporate Income Taxation		Value-Added Tax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xcises		Property	
	Rate	Base	Rate	Base	Rate	Base	Rate	Base	Rate	Base	Rate	Base
Advanced economies												
Australia		↑		↓								
Austria		↑		↑								
Belgium	↑	↑		↑								
Canada	↑	↑	↓									
Czech Republic	↑	↑		↑	↑			↓	↓			
Denmark	↑	↑		↑						↑		
Finland	↑	↑	↓		↑							
France	↑	↑	↑		↑							
Germany		↓						↓				
Greece	↑	↑	↑		↑							
Hong Kong SAR												
Iceland		↑	↑									
Ireland	↑	↓			↑	↓		↓				
Israel	↑	↑		↓	↑			↑				
Italy	↑			↓	↑							↑
Japan												
Korea	↑	↑	↑									
Netherlands	↑	↓	↓		↑							↓
New Zealand	↓		↓		↑							
Norway												↑
Portugal	↑	↑	↑		↑							
Singapore			↓									
Slovak Republic	↑	↑	↑		↑							
Slovenia	↑		↓									
Spain	↑	↑		↑	↑							
Sweden		↓	↓									
Switzerland		↓	↓		↑							
United Kingdom	↓	↑	↓	↓	↑							
United States	↑	↑						↑				
Emerging market economies												
Brazil						↑		↓	↓	↓		
Bulgaria					↑	↑		↑				
Chile	↓		↑	↑								
China	↓	↓			↓	↑			↑		↑	↑
Estonia												
Hungary	↓	↓	↓		↑			↑		↑	↑	
Latvia	↓	↓			↑	↑			↑	↑	↑	↑
Lithuania	↓		↓	↓		↓			↑		↑	↑
Mexico	↓		↓									
Philippines						↓						
Poland					↑	↑		↑		↑		
Romania					↑							
South Africa				↑								
Turke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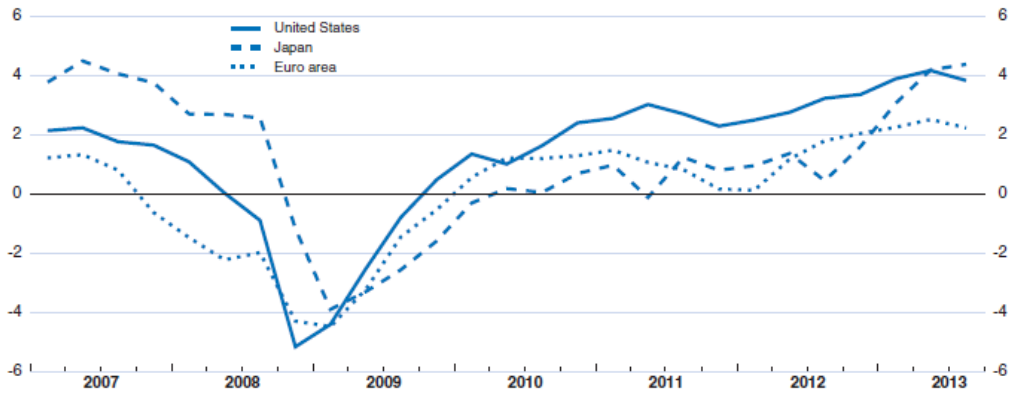
주: 위아래 화살표는 수입증가 및 감소 변화를 표시

출처: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3*, Table 9

- (OECD 전망) *OECD Economic Outlook*(2013.11)에서는 OECD국가들은 '13년 하반기부터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으로 인한 채권 매도의 영향으로 많은 OECD국가들의 주가, 국채, 화폐가치 등이 하락했다고 밝힘
- '13년 3분기 재정상황지표(Financial Conditions Indices)를 보면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은 긴축재정으로 나타나며 일본의 경우 확장적 재정상태로 나타남

[그림 I-3] 미국, 일본, 유로존 국가의 재정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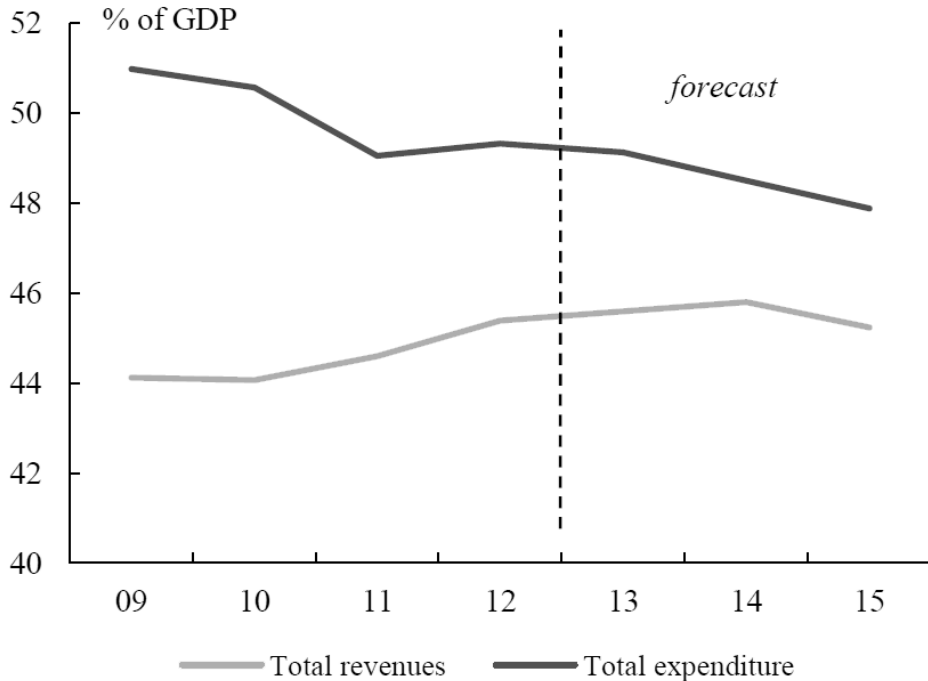
(단위: %)



주: 지표의 증가는 확장적 재정상황, 감소는 긴축 재정상황을 의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3*

- (EU 전망)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3*(2013.11)에 따르면, EU는 초과적자의 점진적 조정 등의 재정건전화를 계속 진행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
 - 201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유로존이 2.5%, 유로지역 전체가 2.7%를 기록할 전망
 -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정책 변화가 없음을 가정하면 2015년엔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14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부채 감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가 계속 증가해 유로존이 95.9%, 유로지역이 90.2%를 기록할 전망
 - 2013년 5월 전망과 비교해 다소 낮아진 수치로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

[그림 I-4] EU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3*

나. 주요 국가별 재정전망

- IMF의 주요국 재정전망(*Fiscal Monitor*(2013.10)와 *WEO*(2013.10))
 - (미국) 2013년 재정수지(경기조정수지)는 지출일률삭감(Sequester)과 세입 증대를 고려해 잠재 GDP 대비 -3.9%(전년 대비 2.4%p 개선), 2014년은 -3.2%로 전망
 - 미국의 지출일률삭감정책은 지나치게 빠른 정책 시행 및 조정으로 재정지출과 장기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독일) 2013년 이후에는 긴축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경기조정수지는 균형을 이룰 전망
 - debt brake의 목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목표보다 빨리 달성되고 있음
 - (그리스) 2013년 기초재정수지는 균형을 이룰 전망이다, 2016년까지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

- (일본) 재정건전화정책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4년 경기조정재정적자는 GDP 대비 6.7%(전년 대비 2.5%p 개선)로 전망
 - 2014~2015년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소비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정책이 예상되며, 재정적자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인도) 경제성장 둔화, 루피화 가치 하락, 유가 상승 등으로 2013~2014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8.5%까지 증가할 전망
- OECD의 주요국 재정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13.11)
- (미국) 지출삭감과 감세의 만기에 따라 재정상황은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할 시에 중립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전환 필요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4년과 2015년에 1% 감소가 예상되며 향후 재정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속적 재정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 (유로지역) 재정건전화 속도는 2014~15년에 크게 느려질 것으로 전망
 - (일본) 2015년 소비세율 인상으로 기초재정적자는 GDP 대비 5%로 감소 전망
 - 2020년 기초재정수지 균형 달성 목표를 위한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건전화 전략과 구조개혁이 필요
 - (한국) 균형재정달성 목표를 2014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함
 - 사회복지부문의 7% 지출 증가로 인해 2014년 정부지출이 증가할 전망
 - (중국)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전망
 -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자본시장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표 I-6〉 주요국의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2011	2012	2013	2014	201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OECD ¹⁾	-6.6	-5.9	-4.8	-4.0	-3.2
미국	-10.7	-9.3	-6.5	-5.8	-4.6
일본	-8.9	-9.5	-10.0	-8.5	-6.8
유로지역	-4.1	-3.7	-2.9	-2.5	-1.8
한국	2.0	1.7	1.3	1.3	1.7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OECD ²⁾	102.5	107.4	110.3	111.8	112.0
미국	98.8	102.1	104.1	106.3	106.5
일본	210.6	218.8	227.2	231.9	235.4
유로지역	95.8	104.3	106.4	107.1	106.8
한국	36.2	35.5	35.6	36.0	36.3

주: 1) 칠레와 멕시코 제외

2) 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3*

- EU의 주요국 재정전망(*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3.11)
 - (미국) 201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7%, 정부부채는 105.2%를 기록할 전망
 - 정책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부채 지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일본) 201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7.2%, 정부부채는 242.0%를 기록할 전망
 - 성장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조개혁과 재정건실화 노력이 필요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가. 통화정책

- *OECD Economic Outlook*(2013.11)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OECD국가는 수용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은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 (미국) 완전한 회복세를 고려하면 수용적 통화정책은 적절하지만 자산가격버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부양책은 점차 축소될 필요
 - (유로지역)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수용적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
 - 유럽중앙은행은 재할인 정책금리 유지와 함께 콜금리를 예금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함
 - (일본) 적절한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 정책의 기술적 개정은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과 수익률 변동성 감소에 효과적
 - (신흥국) 환율과 자본흐름 및 국내가격의 압력으로 인한 경기약화로 인해 통화정책 수립의 딜레마에 당면
 - (중국) 과도한 차익거래를 야기한 이자율의 부분적 규제완화는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은행이자율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함. 거시건전성을 포함한 안정성 문제도 더 고심해야 하며 상호 규제기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함

나. 재정정책

- *OECD Economic Outlook*(2013.11)에 따르면, 재정건전화의 전반적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 요구되는 재정정책은 상이함
 - (미국) 재정건전화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어야 함
 - 높은 부유세와 소득세, 완전한 경기회복, 지출 감축 등에 기인해 단기 예산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었고 의료비 부담 증가가 이전 전망보다 크지 않아 장기 예산상황도 개선됨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의 회복과 정책입안자에게 지출일률삭감으로 인한 단기건전성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더 보장해주기 위해 중기로드맵이 필요

- (유로지역) 2013년 구조적 재정건전화 이후 재정긴축의 속도는 둔화될 전망
 - 자동안정화장치가 완전히 작동되어도 유로국가의 정부는 EU 재정준칙이 요구하는 재정조정 노력을 활발히 해야 함
- (일본)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공부채는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신속한 재정건전화에 착수
 - 재정 패키지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비세 인상과 경기 둔화를 상쇄시키기 위한 세금감축과 추가 지출을 동반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고 2020년에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 중기재정계획 승인
- (신흥국) 포트폴리오 자본유출에 직면한 국가들의 적절한 재정정책 대응은 정책 신뢰성과 초기 재정적 위치에 따라 다름
 - (중국) 국무원은 공급측면을 개선시키고 시장의 역할을 발전시킬 목적의 재정부양 패키지 발표
 - 소기업의 세금유예와 수출업자에 대한 수수료와 행정부담 완화 및 철도건설의 새로운 자금출처 발굴을 내용으로 하며 추가적인 지출규모는 명시하지 않음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7개국 종합 -

- 〈각국 예산안 분석〉에서는 주요 7개국 -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 의 2013 또는 2014년 예산안을 분석
 - 예산주기의 차이로 인해 캐나다, 호주는 2013년 봄에 발표한 FY2013-14 예산안을 분석
 - 경제·재정전망의 경우 2013년 가을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를 활용
 - 따라서 캐나다, 호주의 경우 2014년 2월 현재 시점에서 실제 정부의 입장이 FY2013-14 예산안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 영국은 사전예산안(Pre-budget)을 대체한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를 기준으로 분석
 - 예산안은 통상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3월 말에 발표되지만, 예산안 발표 3~4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정책을 담은 가을보고서를 발표
 - 미국은 FY2015 대통령 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
 - 독일 예산안은 의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
 - 독일은 통상 11월 중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확정예산이 발표되지만, FY2014 예산은 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의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표 II-1〉 각국 예산안 일정

국가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시기
미국	FY2015	2014.10 - 2015.09	2014.03.04
캐나다*	FY2013-14	2013.04 - 2014.03	2013.03.21
일본	FY2014	2014.04 - 2015.03	2013.12.24
프랑스	FY2014	2014.01 - 2014.12	2013.09.25
독일	FY2014	2014.01 - 2014.12	2013.06.26
영국	FY2014-15	2014.04 - 2015.03	2013.12.05 (가을보고서)
호주*	FY2013-14	2013.07 - 2014.06	2013.05.14

주: *는 2013년에 발표한 FY2013-14 예산안을 위주로 분석하고 캐나다의 경우 추가로 FY2014-15 예산안을 〈참고 II-2〉에 수록하여 분석

- IMF Fiscal Monitor(2013.10)에 따르면 선진국의 재정적자는 감소하였으나 평균 채무 비율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여 세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은 저조한 상태임
 - 2014년 선진국은 재정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되고 신흥개도국은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할 전망

〈표 II-2〉 2014 주요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국가	재정수지 ¹⁾		국가채무 ²⁾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미국	-5.8	-4.6	106.0	107.3
캐나다	-3.4	-2.9	87.1	85.6
일본	-9.5	-6.8	243.5	242.3
프랑스	-4.0	-3.5	93.5	94.8
독일	-0.4	-0.1	80.4	78.1
영국	-6.1	-5.8	92.1	95.3
호주	-3.1	-2.3	29.1	29.1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Overall Balance)

2) 일반정부 총채무

출처: IMF, *Fiscal Monitor*, 2013.10

□ 국가별 개요

- (미국) FY2015에 6,490억달러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적자폭을 점차 줄여 FY2024에 4,3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의료비용 증가 억제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수입 창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적자 삭감에 초점을 맞춤
 - 기회(opportunity), 성장(growth), 안보(security)를 강조
- (캐나다) 글로벌 경제 약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점차 감소하여 FY2015-16 이후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재정건전화를 위해 Economic Action Plan 2013에서 정부 효율성 개선 방법 및 주요 부처의 운영 검토, 2015-1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했고 국내외 채무관리를 위한 FY2013-14 채무관리전략 수립
 -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지원, 제조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투자, 연구기술 혁신 및 개발 지원,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 (일본)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반동 감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견조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되며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 GDP 대비 재정적자는 7.6%를 기록할 전망
 -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과제를 중점화
 -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세출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소비 및 기업투자 증가에 힘입어 점차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지속적인 공공재정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을 지속하는 한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 180억유로 규모의 긴축재정정책 추진(세출감축 150억유로, 세입확충 30억유로)
 - 경제성장을 위해 미래투자프로그램에 2025년까지 연구개발, 에너지 전환, 기업 혁신 등 8개 전략분야에 총 120억유로 투자 계획
- (독일)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를 계획
 - 연방정부지출 증가속도를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유지
 - 에너지 및 기후의 기금 수입 감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예상
 -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
- (영국) 성장모멘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경제성장률 상승이 예상되며, 꾸준한 재정건전화정책을 통해 FY2017-18에 경기조정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할 전망
 - 예산기조는 장기경제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의 회복, 경제성장(Growth), 그리고 공정성(Fairness)으로 함
 -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조직의 슬림화 및 효율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등을 시행하고, 성장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고용수당 확대 등의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을 시행할 예정
- (호주) 주요 선진국 대비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FY2016-17에는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 경제성장, 스마트한 국가 및 공정사회 건설을 추구
 - 중점 계획(Key Initiatives)으로 교육투자, 장애복지 지원, 국가건설 강화, 의료서비스 투자 등을 제시

1. 미국 (FY2015: 2014. 10 ~ 2015. 9)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실업률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2014년 3.1%, 2015년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FY2015에 6,490억달러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적자폭을 점차 줄여갈 전망

〈표 II-3〉 미국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¹⁾	2.8	1.7	3.1	3.4	3.3	3.2	2.8	2.5	2.4	2.3	2.3	2.3	2.3
실업률 ²⁾	8.1	7.5	6.9	6.4	6.0	5.6	5.4	5.4	5.4	5.4	5.4	5.4	5.4
CPI-U ¹⁾	2.1	1.4	1.6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출처: Fiscal Year 201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일부 발췌

〈표 II-4〉 미국 재정전망

(단위: 십억달러)

재정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2,775	3,002	3,337	3,568	3,811	4,030	4,226	4,452	4,706	4,954	5,212	5,478
지출	3,455	3,651	3,901	4,099	4,269	4,443	4,729	4,964	5,209	5,485	5,694	5,912
재정적자	680	649	564	531	458	413	503	512	504	530	482	434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1,983	12,903	13,592	14,257	14,843	15,370	15,982	16,603	17,213	17,850	18,441	18,986

출처: Fiscal Year 201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 예산기조

-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예산
- 기회(opportunity), 성장(growth), 안보(security)를 강조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5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조 3,374억달러(GDP 대비 18.3%) 전망
 - FY2015~FY2019에 연평균 6.1%의 세입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세출) FY2015의 재정지출은 3조 9,010억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직업훈련교육,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preschool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 비용 증가율 억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

□ 재정건전화

- 장기재정적자를 줄이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함
 - 의료비용 증가 억제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수입 창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적자 삭감에 초점

□ 주요정책

- 일자리 창출과 기회제공을 위한 혁신에 투자, 21세기형 사회기반 건설,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기회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 경제안보 제공 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포함

2. 캐나다 (FY2013-14: 2013. 4 ~ 2014. 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3년 11월 기준,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4%, 실업률은 6.9%로 예측
- (재정전망) 글로벌 경제 약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FY2015-16 이후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표 II-5〉 캐나다 경제전망(2013년 11월 기준)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19
실질 GDP 성장률	1.7	2.4	2.6	2.4	2.3	2.2	2.3
실업률	7.1	6.9	6.6	6.4	6.3	6.2	6.7
CPI 상승률	1.2	1.8	2.0	2.0	2.0	2.0	1.8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11, Table 2.1 일부 발췌

〈표 II-6〉 캐나다 재정전망(2013년 11월 기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총세입	256.6	265.2	277.4	293.9	307.0	317.9	332.7
총지출	275.6	283.1	282.8	290.2	301.9	312.2	322.9
재정수지	△18.9	△17.9	△5.5	3.7	5.0	5.7	9.8
연방채무	602.4	617.9	623.3	619.6	614.6	608.9	599.1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11, Table 3.3 일부 발췌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3-14 총세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652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2%)이며, 연평균 4.6%씩 상승 전망
- (세출) FY2013-14 총지출은 2,53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3.6%)로 전망,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과 정부부문 기타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지출을 포함

- (정부부문 이전지출) 정부부문 이전지출은 FY2013-14 605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8-19 737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직접프로그램지출) 직접프로그램지출은 FY2013-14 1,207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5-16 1,190억캐나다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FY2018-19 1,24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재정건전화

- Economic Action Plan 2013에서는 Economic Action Plan 2012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 정부 효율성 개선 방법 및 주요 부처의 운영 검토, 2015-1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
- 국내외 채무관리를 위한 FY2013-14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수립

□ 경기부양책

- 노동시장 진입지원, 제조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투자, 연구기술 혁신 및 개발 지원,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 특히, 캐나다 건설계획(The New Building Canada Plan)으로 도로, 교량, 대중교통 및 기타 기간시설 건설 등에 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공
 - 2014-15년부터 10년에 걸친 신규 투자 470억캐나다달러를 포함하여 총 53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할 예정

3. 일본 (FY2014: 2014. 4 ~ 2015. 3)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4년도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반동 감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견조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되며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
 - 일본정부는 2014년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은 1.4%, 명목성장률은 3.3%로 전망
- 주요기관에서는 통화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 및 재정정책 시행 등에 의해 일본 경기가 회복될 것이나, 경기회복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망
 - 일본 중앙은행(BOJ) 1.5%, 국제통화기금(IMF) 1.7%, 세계은행(WB)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
- 2014년도 완전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대책에 의해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전년 대비 0.2%p 감소한 3.7%를 기록할 전망
- 2014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7.6%를 기록할 전망
- 2014년도 GDP 대비 국채비율은 231.9%로 전망되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

〈표 II-7〉 일본 경제전망

(단위: 조엔, %)

구분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2		2013		2014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72.6	484.2	500.4	△0.2	0.7	2.5	2.6	3.3	1.4
완전실업률	4.3	3.9	3.7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4.1.24

〈표 II-8〉 일본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¹⁾	△8.3	△8.7	△9.0	△9.2	△7.6
재정수지 ²⁾	△9.5	△9.6	△9.8	△10.1	△8.5
국채 비율	193.3	210.6	218.8	227.2	231.9
국채의존도 ³⁾	48.0	47.9	47.6	46.3	43.0

주: 1) OECD, *Economic Outlook 94*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OECD, *Economic Outlook 94*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3)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予算政府案」, 2013.12.24

□ 예산기조: 2014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

- i) 경제재생을 위한 노력
- ii) 성장전략 실행
- iii) 부흥대책
- iv) 예산 중점화·효율화

□ 예산안 내용

- FY2014 세입규모는 지난해 대비 3조 2,708억엔(3.5%) 증가한 95조 8,823억엔 수준
- FY2014 세출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95조 8,823억엔으로 편성
 - 공공사업 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발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2014년도 예산의 중점정책(2013.12.24)
 - : 2014년도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미래로의 투자 및 안전·안심 확보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과제를 중점화
 - 첨단기술 및 제품제조, 교육·의료, 농업경쟁력, 생활 안전·안심 등

○ 재정건전화

－ 세출분야의 효율화(2013.12.24)

： FY2013 예산안에서는 일본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세출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 검토 분야

i) 사회보장

ii) 지방교부세

iii) 쌀보조금

iv) 의무교육 국고보조금, 장학금 재검토

v) 효율적인 사회자본 정비

vi) 방위장비품 조달 개혁

－ 「FY2014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건의 - 재정건전화의 기본방침」 발표 (2013.11.29)

(재정 현황)

- OECD Economic Outlook 94에 따르면 일본의 2012년 말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명목 GDP 대비 219%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 중 최악

(재정건전화 방안)

- FY2014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수지 개선을 실시하는 첫 번째 예산편성으로 2015년도 적자 반감목표, 2020년도 흑자전환 목표달성을 위한 시초
- 소비세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예산편성에 임하고 세출 삭감에 노력해야 함
- 2020년도 흑자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세출 삭감과 세입 확보에 따른 향후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

4. 프랑스(FY2014: 2014. 1 ~ 2014. 12)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4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1.2%보다 하향 조정된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5년 1.7%, 2016-2017년에는 2.0%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
- (재정전망) 재정적자는 2013년 GDP 대비 4.1%에서 2014년 3.6%로 낮아지고, 2015년에는 GDP 대비 2.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14년 GDP 대비 95.1%까지 상승한 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II-9〉 프랑스 2014년 주요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2 실적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적 재정수지	-3.9	-2.6	-1.7	-0.9	-0.2	0.0
재정수지	-4.8	-4.1	-3.6	-2.8	-1.7	-1.2
국가채무	90.2	93.4	95.1	94.7	93.1	91.0
국가채무 ¹⁾	87.8	90.4	91.8	91.6	90.0	88.0
조세부담률	45.0	46.0	46.1	46.1	46.1	45.8
소비자물가지수(%)	1.9	0.8	1.3	1.75	1.75	1.75
GDP 성장률(%)	0.0	0.1	0.9	1.7	2.0	2.0

주: 1) 유로존 재정지원 제외

자료: PLF 2014

Le Budget 2014, l'essentiel&chiffres clés

□ 예산기조

- 지속적인 공공재정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이 목표
 - 재정적자(GDP 대비 %): (2012)4.8 → (2013)4.1 → (2014)3.6 → (2015)2.8
-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

□ 예산안 내용

- (수입) 2014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2,985억유로로 전망되며, 소득세는 전년 대비 8.7% 증가, 법인세는 27.2% 감소, 부가가치세는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출) 2014년 재정지출은 3,799억유로로 2013수정예산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중 미래투자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2% 감소

□ 주요 재정정책

- (복지지출 관리) 201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2013년(162억유로)에 비해 34억 유로 감소한 128억유로로 전망
 -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부문 지출감축(40억유로) 등 예산절감 계획
- (재정건전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약 180억유로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
 - 세출감축 150억유로(일반예산 90억유로, 사회보장예산 60억유로), 세입확충 30억 유로 계획
 - 2014예산법안에 포함된 지출삭감 내용: 급여동결 및 운영비 삭감(26억유로), 금융지원 규모 조정(33억유로), 투자의 효율화(26억유로) 등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미래투자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연구개발, 에너지 전환, 기업혁신 등 8개 전략분야에 총 120억유로 투자 계획
 - 중점투자분야: 연구개발 및 대학캠퍼스 확충(36.5억유로), 에너지 전환(23억유로), 기업혁신 촉진(17억유로), 방위산업(15억유로), 항공우주산업(13억유로), 디지털경제(6억유로), 교육시설 현대화(5.5억유로), 보건산업(4억유로) 등

5. 독일(FY2014: 2014. 1 ~ 2014. 12)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중앙은행 12월 발표 기준, 2014년 경제성장률은 1.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 실업률은 6.8%로 전망
- (재정전망) 중기재정계획상 201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 부채는 GDP 대비 77.5% 수준으로 전망

〈표 II-10〉 경제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실질 GDP 성장률	0.7	0.5	1.7	2.0
실업률	6.8	6.9	6.8	6.7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1	1.6	1.3	1.5

출처: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zember*, 2013,12

〈표 II-11〉 재정전망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정지출	310.0	295.4	299.6	308.3	317.7
재정수입	310.0	295.4	299.6	308.3	317.7
조세수입	260.6	268.7	279.4	292.9	300.5
세외수입	24.3	20.5	20.2	15.4	17.2
신규차입	25.1	6.2	0	0	0
재정수지(%)	-0.5	0	0	0.5	0.5
연방채무(%)	80.5	77.5	75	71.5	69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inanzplan des Bundes 2013 bis 2017*, 2013,8
 Stabilitätsrat,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3*, 2013,4

□ 예산기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 (재정건전화) 2014년 구조적 균형재정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의 구조적 흑자 달성도 기대
- (성장)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 교육·연구분야에 2013년보다 4.5억유로 증가한 140억유로를, 인프라 분야에 10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예산안 내용

- (수입)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2,892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신규차입금은 62억유로를 목표로 함
- (지출) 총재정지출은 2,954억유로(GDP 대비 24.3%)로 전년 대비 4.7%인 약 146억유로가 감소
 - (교육·연구) 교육·연구 분야 강화정책을 반영, 2013년 대비 4.5억유로 증가한 140억유로를 편성
 - (개발협력)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2.4억유로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등 63억유로 편성
 - (국방)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이 철수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4억유로)가 감액된 328억유로의 예산이 편성
 - (환경)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충당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0.6%(2억유로)의 높은 증가율로 편성
 - (경제·기술) 61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구조 개선사업(GRW),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ZIM) 등을 계획
 - (교통·건설) 도로, 철도, 수로, 복합운송부문에 101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부문에 약 4.5억유로가 편성됨
 - (사회보장) 연금보험지출이 825억유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조금은 105억유로로 전년 대비 35억유로 감소
 - (가족)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관련 예산은 63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보육수당(Betreuungsgeld)과 부모수당(Elterngeld) 지원이 확대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2013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 연방정부지출 증가속도를 GDP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유지
- (에너지정책) 최근 에너지 및 기후 기금의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2014년 6.5억유로의 총당금을 투입하는 등 기존 에너지 정책의 유지를 위해 노력
- (성장친화적 환경 조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건설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고등교육협약, 교육품질 협정, 첨단기술전략 등의 정책을 유지

6. 영국(FY2014-15: 2014. 4 ~ 2015. 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3.12월 가을보고서에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 2014년은 2.4%로 2013.3월 예산안 전망 대비 각각 0.8%p, 0.6%p씩 상향조정
- (재정수지)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⁸⁾은 FY2013-14에 GDP 대비 6.0%, FY2014-15는 GDP 대비 4.9%이며 이후 점점 감소하여 FY2018-19에는 GDP 대비 0.1%에 이를 전망
- (국가채무)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는 FY2014-15 78.3%이며, FY2015-16에 최고치인 GDP 대비 80.0%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FY2018-19에는 75.9%를 나타낼 전망

〈표 II-12〉 영국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경제전망	실적치	전망치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성장률	0.1	1.4	2.4	2.2	2.6	2.7	2.7
실업률(ILO)	7.9	7.6	7.1	7.0	6.6	6.1	5.6
재정전망	실적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공공부문 순차입	6.9	6.0	4.9	4.0	2.6	1.3	0.1
공공부문 순부채	73.9	75.5	78.3	80.0	79.9	78.4	75.9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2

- 예산기준: ① 장기경제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의 회복, ② 경제성장(Growth), 그리고 ③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경제와 공공재정(The UK economy and public finances): 영국정부의 장기 경제계획은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되돌리고 FY2014-15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8) 통계청(ONS) 자료 기준

- 성장(Growth):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 지원, 청년층의 기술습득과 일자리 제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 도모
 - 공정성(Fairness): 가계소득 보조 및 실업자 취업지원, 기업과 개인의 재정건전화에의 공정한 기여, 탈세방지를 위한 추가 정책 시행
- 세입 및 지출
- (세입) FY2014-15 경상세입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한 GDP 대비 37.1%로 전망
 - 경상세입은 FY2014-15 GDP 대비 37.1%에서 FY2015-16 GDP 대비 37.4%로 약간 상승하며 FY2016-17 이후로는 38%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지출) 총관리지출(TME)은 FY2014-15에 전년 대비 1%p 감소한 GDP 대비 42.7%로 전망
 - 총관리지출(TME)은 FY2013-14 이후 계속 하락세로 매년 약 1%p씩 감소하여 FY2014-15 GDP 대비 42.7%, FY2015-16 GDP 대비 41.9%에서 FY2018-19에는 GDP 대비 38.2%까지 감소할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 FY2014-15에 1,05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및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향후 5년 이내 달성 가능
 - 정부조직의 슬림화 및 효율화를 통해 FY2014-15까지 200억파운드를 절감할 계획
 -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현재 65세에서 2020년부터 66세, 이후 2028년부터는 67세, 2030년대 중반에 68세, 2040년대 후반에는 69세로 상향조정되어 향후 50년간 총 5,000억파운드의 연금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부처별 지출한도(DEL)를 FY2014-15 약 11억파운드, FY2015-16 약 10억파운드 감축할 계획
 - (경제성장)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고용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
 - 법인세율을 21%('14년 4월) → 20%('15년)로 인하하고 R&D 세액공제 한도 10% 확대

-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신설과 연간투자수당의 10배 증대
- 2014-15년 동안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의 증가율을 2%로 제한하고 '15년 4월까지 소규모기업 비거주재산세 감면을 두배로 확대
- FY2014-15와 FY2015-16에 상업용 부동산(Retail Property)의 비거주재산세를 최대 1,000파운드 감면하고 기존 미점유상태의 상업용 부동산을 새로 점유한 자의 비거주재산세를 18개월 동안 50% 감면
- 기업(특히 소규모기업)의 고용수당 2,000파운드를 제공하고 21세 이하 청년근로자(한 주당 813파운드의 소득)의 국민보험납입금을 폐지

7. 호주(FY2013-14: 2013. 7 ~ 2014. 6)

□ 경제 및 재정전망

- 호주의 경제성장세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낮은 실업률, 안정적 물가 지속으로 주요 선진국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FY2013-14 실질 GDP 성장률은 2.75%, 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 실업률은 5.75%, 소비자물가지수는 2.25%로 전망
- FY2014-15까지 예산수지 적자를 예상하였으나, FY2015-16에 균형을 회복하고 FY2016-17에는 흑자로의 전환을 목표

〈표 II-13〉 경제전망

(단위: %)

	예측(Forecasts)						전망(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실질 GDP 성장률	3	2.7	2.75	2.5	3	2.5	3	3	3	3
고용률	1.25	1.3	1.25	0.75	1.5	1.5	1.5	1.5	1.5	1.5
실업률	5.5	5.6	5.75	6	5.75	6.25	5	6.25	5	6.25
소비자물가지수	2.5	2.4	2.25	2.75	2.25	2	2.5	2.5	2.5	2.5
명목 GDP 성장률	3.25	2.5	5	3.5	5	3.5	5.25	4.75	5.25	4.75

주: 실질 GDP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2사분기 기준 연간증가율,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2013.12.17

〈표 II-14〉 재정전망

(단위: 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Budget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Revenue) ¹⁾	3,600	3,877	3,739	4,116	3,879	4,381	4,174	4,686	4,450
GDP 대비 비율	23.7	24.3	23.7	24.5	23.8	24.8	24.4	25.2	24.9
재정지출(Expenses) ¹⁾	3,814	3,983	4,121	4,157	4,178	4,310	4,360	4,547	4,571
GDP 대비 비율	25.1	24.9	26.1	24.8	25.6	24.4	25.5	24.4	25.6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203	-135	-418	-63	-315	60	-188	108	-145
GDP 대비 비율	-1.3	-0.8	-2.7	-0.4	-1.9	0.3	-1.1	0.6	-0.8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³⁾	-194	-180	-470	-109	-339	8	-241	66	-177
GDP 대비 비율	-1.3	-1.1	-3.0	-0.6	-2.1	0.0	-1.4	0.4	-1.0
순채무(Net Debt)	1,616	1,781	1,915	1,916	2,311	1,912	2,591	1,857	2,805
GDP 대비 비율	10.6	11.1	12.1	11.4	14.2	10.8	15.2	10.0	15.7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2013.12.17

- 예산기준: FY2016-17까지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성장, 스마트한 국가 및 공정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다음 중점 계획(Key Initiatives)을 제시
 - 미래의 생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 장애복지 지원
 - 차세대 국가건설 강화
 - 주요 의료서비스 투자 확대
 - 혁신, 교육, 기술 및 연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지방에 대한 지원 확대
 - 연금체계의 강화 및 공정화

□ 예산안 내용(세입·세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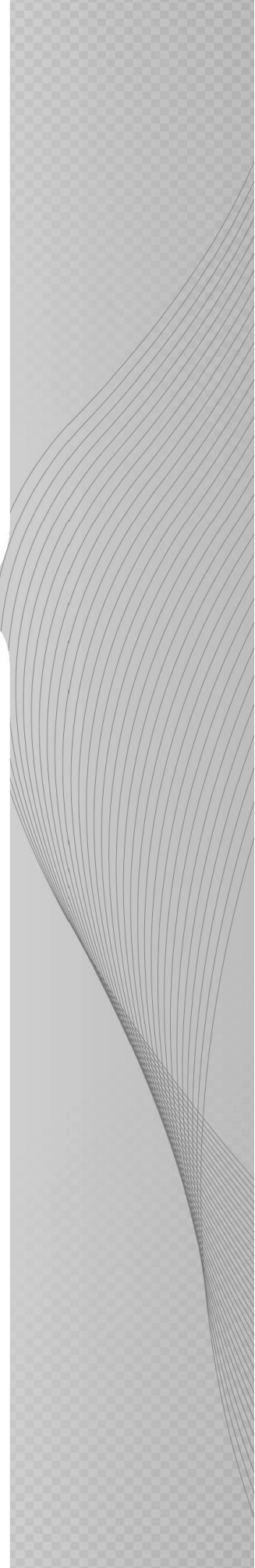
- FY2013-14 예산안의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3,877억호주달러
- FY2013-14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재정수입은 3,739억호주달러로 예산안 대비 3.6% 감소
- FY2013-14 예산안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983억호주달러
- FY2013-14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재정지출은 4,121억호주달러로 예산안 대비 3.5% 증가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장기 예산절감 시행을 통해 FY2021-22 순채무 GDP 대비 0% 수준 근접 목표
 - 사회보장 및 복지, 교육, 일반 공공서비스, 보건부문에 대한 예산절감 추진
 - 법인세에 대한 세원잠식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절세전략 차단
- (경제활성화) 미래 성장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 강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고용시장 보호 계획 실시
 - 인프라 자금지원에 민간부문 참여 확대,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 반덤핑개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
- (공정사회구현) 장애복지기관 운영 및 퇴직연금제도 개혁
 - 장애복지기관 운영을 통해 FY2013-14 시행부터 3년간 약 26,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개혁 시행

제 2 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국

- FY2015 : 2014년 10월 ~ 2015년 9월

- 출처 :
 - *Fiscal Year 201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 “The Budget in Brief: FY 201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4.3.4.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4 to 2024*,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4.2
 -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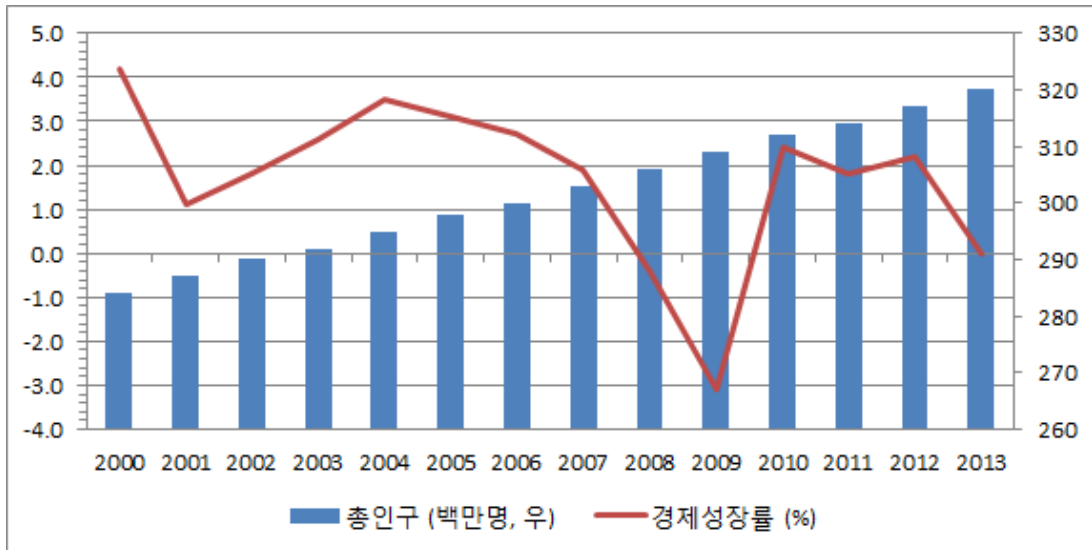
- 환율: 1USD = 약 1,094.70원(2013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2년 경상 GDP 15조 6,760억달러(우리나라의 약 13.6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2년 기준 30.4%(우리나라는 109.9%)

- 인구: 3억 1,326만명(2012년 추정치)

□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실업률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2014년 3.1%, 2015년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FY2015에 6,490억달러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적자폭을 점차 줄여갈 전망
- (국가채무) FY2015에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1조 3,592억달러로 GDP 대비 74.6%를 기록하고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정부부채 비율이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예산
- 기회(opportunity), 성장(growth), 안보(security)를 강조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5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조 3,374억달러로 GDP 대비 18.3%를 기록할 전망
 - 경제성장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 대비 각각 10.6%, 35% 증가
- (지출) FY2015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3조 9,010억달러로 GDP 대비 21.4%를 기록할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장기재정적자를 줄이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함
 - 의료비용 증가 억제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수입 창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적자 삭감에 초점
- 일자리 창출과 기회제공을 위해 혁신에 투자
- 21세기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 모든 국민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함
- 기회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제공
- 국가안보 보장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3.2.4	연방정부 부채한도 한시적(~'13.5.18) 효력 정지	2013 상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2013.3.1	자동지출삭감 발효	
2013.3.26	FY2013 예산 확정	
2013.4.10	FY2014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2013.10.1	예산합의 실패로 16일 동안 정부폐쇄	2013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2013.10.16	한시적 예산합의 및 부채한도 인상	
2013.10.30	FY2013 현금주의 결산보고	
2013.12.10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합의 도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⁹⁾

- (경제성장률) FY2015 예산안에 따르면 실업률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촉진되어 2014년에 3.1%, 2015년에 3.4%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전망
 - (리스크 요인) 유럽과 개도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중기 전망) 2019년에 경제성장률은 2.5% 정도로 낮아져 202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실업률)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률은 2018년까지 5.4%로 낮아지고 이후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물가)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는 2014년 1.6%를 기록하고 향후 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낮은 수준의 국내 수요로 인해 물가가 낮게 유지되다 경기가 회복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금리) 금융시장 리스크가 줄어들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 수준에 이르면 실질이자율은 평균적인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

9) 경제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표 I-1〉 미국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¹⁾	2.8	1.7	3.1	3.4	3.3	3.2	2.8	2.5	2.4	2.3	2.3	2.3	2.3
실업률 ²⁾	8.1	7.5	6.9	6.4	6.0	5.6	5.4	5.4	5.4	5.4	5.4	5.4	5.4
CPI-U ¹⁾	2.1	1.4	1.6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국채 91일물 ³⁾	0.1	0.1	0.1	0.3	1.2	2.3	3.2	3.6	3.7	3.7	3.7	3.7	3.7
국채 10년물	1.8	2.3	3.0	3.5	4.0	4.3	4.6	4.7	4.9	5.0	5.1	5.1	5.1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Fiscal Year 201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FY2015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조 3,374억달러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입은 FY2015에 18.3%로 전년 대비 1.0%p 증가
 - FY2019까지 평균 6.1%의 증가율을 보여 4조 2,261억달러로 증가할 전망
 - FY2019-FY2024에는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FY2024에 5조 4,782억달러로 증가할 전망
 -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인해 재정수입 증대 예상
- (재정지출) FY2015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3조 9,010억달러로 전망
 - 경제성장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금융시장개혁,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주택시장 안정화프로그램 등에 재정지출이 이뤄질 계획
 - FY2024까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FY2015 재정수지는 6,49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적자폭을 점차 줄여 FY2024에는 4,3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FY2015에 3.1%를 기록하고 점차 낮아져 FY2024에 1.6%를 기록할 전망

- (국가채무)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FY2015에 1조 3,592억달러(GDP 대비 74.6%)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거나 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FY2024에는 GDP 대비 69.0%를 기록할 전망
 - CBO 경제전망(2014.2)의 FY2024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전망은 GDP 대비 79.2%로 대통령 예산안과 10%p 이상의 차이를 보임

〈표 I-2〉 미국 재정전망

재정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총량 (단위: 십억달러)												
수입	2,775	3,002	3,337	3,568	3,811	4,030	4,226	4,452	4,706	4,954	5,212	5,478
지출	3,455	3,651	3,901	4,099	4,269	4,443	4,729	4,964	5,209	5,485	5,694	5,912
재정적자	680	649	564	531	458	413	503	512	504	530	482	434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1,983	12,903	13,592	14,257	14,843	15,370	15,982	16,603	17,213	17,850	18,441	18,986
예산총량 (단위: GDP 대비 %)												
수입	16.7	17.3	18.3	18.6	18.9	19.0	19.0	19.2	19.4	19.6	19.8	19.9
지출	20.8	21.1	21.4	21.4	21.1	20.9	21.3	21.4	21.5	21.7	21.6	21.5
재정적자	4.1	3.7	3.1	2.8	2.3	1.9	2.3	2.2	2.1	2.1	1.8	1.6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2.1	74.4	74.6	74.3	73.5	72.4	72.0	71.6	71.1	70.6	69.9	69.0

출처: Fiscal Year 201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참고 I-1〉 CBO 경제 및 재정전망 ('14.2월)

- (경제전망) 2014년 성장률은 3.1%로 2016년까지 3%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2017년까지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기회복으로 인한 노동참여율 증가로 2017년까지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리) 연준이 2015년 중반까지는 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장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CBO 경제전망

(단위 : %)

경제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2024
	추정	전망				연간 평균 전망치
실질 GDP ¹⁾	2.1	3.1	3.4	3.4	2.7	2.2
실업률 ²⁾	7.0	6.7	6.3	6.0	5.8	5.5
CPI-U ¹⁾	1.2	1.9	2.1	2.1	2.3	2.4
국채 91일물 ³⁾	0.1	0.2	0.4	1.8	3.3	3.7
국채 10년물	2.4	3.1	3.7	4.3	4.8	5.0

-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4 to 2024*, 2014.2.

- (재정전망) 연방정부의 FY2014 재정적자는 5,140억달러(GDP 대비 3.0%)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FY2015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감소는 세금감면 기한 완료 및 경제회복으로 인한 세입 증가(FY2014에 9% 증가)에 기인
 - 비정부부문이 소유한 채무는 FY2014에 GDP 대비 73.6%로 195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FY2017까지 감소하지만 FY2018부터 증가추세로 전환하며 FY2024에는 79.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CBO 재정전망

재정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총량 (단위: 십억달러)												
수입	2,774	3,029	3,305	3,481	3,631	3,770	3,932	4,104	4,288	4,490	4,702	4,926
지출	3,454	3,543	3,783	4,020	4,212	4,425	4,684	4,939	5,200	5,522	5,749	6,000
재정적자	680	514	478	539	581	655	752	836	912	1,031	1,047	1,074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1,982	12,717	13,263	13,861	14,507	15,218	16,028	16,925	17,899	19,001	20,115	21,260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4 to 2024*, 2014.2.

2. 예산기조

-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Opportunity for All)를 주기 위한 예산
 - 제조업 혁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성장친화 기반시설 확대, 정부 개혁 등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 노동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4세 아동들을 위한 preschool 질 향상에 투자, 직업교육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개혁 등을 통해 낮은 건강보험 비용 증가율을 유지, 성장친화적 세제개혁, 이민개혁, 재정적자 삭감 등의 노력으로 재정책임의 강화

- 기회(opportunity), 성장(growth), 안보(security)를 강조
 - 일자리 창출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혁신에 투자
 - 21세기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개선
 - 모든 국민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함
 - 총기 관련 폭력사고 예방과 법 집행 개혁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

3. 예산안 내용

- FY2015 주요 세제개편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중립적 세제개혁을 위해 다음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
 - 조세회피와 보조금을 제거하고, 과세기반을 넓히며, 법인세 감면
 - 미국 제조 강화 및 혁신 제고
 - 국제조세 체계를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간소화하고 감면
 - 재정책임을 강조

가. 세입

- FY2015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조 3,374억달러(GDP 대비 18.3%) 전망
 - FY2015~FY2019에 연평균 6.1%의 세입 증가율을 보일 전망
 - 경제성장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 대비 각각 10.6%, 35% 증가
 - 사회보장세, 소비세, 관세 등을 통한 수입도 증가할 전망

〈표 1-3〉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실제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인소득세	1,316	1,386	1,534	1,648	1,781	1,920	2,047	2,179	2,314	2,451	2,592	2,733
법인세	274	333	449	502	528	540	514	527	542	557	571	592
사회보험 및 퇴직 연금 수입	948	1,021	1,056	1,127	1,194	1,256	1,314	1,372	1,445	1,515	1,583	1,654
소비세	84	94	111	115	119	122	127	130	135	140	146	154
유산세 및 증여세	19	16	18	20	21	23	39	42	46	49	53	57
관세	32	35	37	41	44	48	51	54	58	61	65	70
기타수입	103	118	132	104	96	83	89	101	111	116	125	133
이민개혁 충당금	-	-	2	12	28	39	45	47	55	64	77	87
총 재정수입	2,775	3,002	3,337	3,568	3,811	4,030	4,226	4,452	4,706	4,954	5,212	5,478
GDP 대비 %	16,7	17,3	18,3	18,6	18,9	19,0	19,0	19,2	19,4	19,6	19,8	19,9

출처: Fiscal Year 201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나. 세출

- FY2015의 재정지출은 3조 9,010억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직업훈련교육,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preschool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 비용 증가율을 억제할 위한 계획과 다음의 세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을 선진 제조업의 글로벌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
 - 지속적 R&D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세금 감면 혜택
 - 최첨단 교통시스템 개발

- 보조금 감소를 통한 연방곡물보험(Federal crop insurance) 개혁으로 지출 140억달러 감축
- 50억달러 규모의 경제성장 관련 지출 재할당
- 항공보안 비용(50억달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개혁
- 상해보험과 실업수당의 이중수령 방지(30억달러)

〈표 1-4〉 항목별 지출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량지출프로그램												
안보	626	612	623	584	570	570	577	583	592	602	615	630
비안보	522	562	563	569	576	579	585	593	599	588	591	604
합계	1,147	1,174	1,186	1,153	1,146	1,149	1,162	1,176	1,191	1,190	1,206	1,233
법정지출프로그램												
사회보장	808	852	896	947	1,003	1,063	1,126	1,193	1,262	1,335	1,413	1,496
메디케어	492	513	526	569	575	589	648	690	737	817	843	863
메디케이드	265	309	336	355	372	392	415	439	464	492	521	552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521	577	691	739	754	744	790	812	841	879	882	890
이민개혁 총당금	-	-	8	11	18	24	28	29	35	41	48	56
합계	2,086	2,251	2,458	2,621	2,723	2,811	3,007	3,163	3,339	3,563	3,707	3,856
순이자	221	223	252	318	392	474	551	616	669	721	772	812
재해복구 및 구호비용	-	2	6	8	8	9	9	10	10	10	10	10
총재정지출	3,455	3,651	3,901	4,099	4,269	4,443	4,729	4,964	5,209	5,485	5,694	5,912
GDP 대비 %	20.8	21.1	21.4	21.4	21.1	20.9	21.3	21.4	21.5	21.7	21.6	21.5

출처: Fiscal Year 201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3.4.

〈표 1-5〉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2014 승인규모	2015 예산요청	후속년도 전망			
			2016	2017	2018	2019
Agriculture	24.1	22.2	23.6	24.1	24.6	25.1
Commerce	8.3	8.8	9.2	9.6	10.6	11.7
Census Bureau	0.9	1.2	1.5	1.7	2.5	3.5
Defense	496.0	495.6	535.1	543.7	551.4	559.0
Education	67.3	68.6	69.5	70.5	71.6	72.7
Energy	27.2	27.9	27.5	28.2	28.8	29.4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1.2	11.7	10.8	11.1	11.3	11.5
Health & Human Service	79.8	73.7	80.1	81.9	83.7	85.6
Homeland Security	39.3	38.2	38.2	38.9	39.6	40.6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33.7	32.6	33.2	33.9	34.5	35.2
Interior	11.5	11.5	11.8	12.0	12.3	12.6
Justice	27.2	16.7	28.1	28.7	29.4	30.0
Labor	12.0	11.8	11.9	11.3	11.5	11.8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42.7	42.6	43.5	44.4	45.4	46.4
Transportation	13.7	14.0	14.1	14.4	14.7	15.1
Treasury	12.6	12.4	13.5	13.8	14.2	14.6
Veterans Affairs	63.4	65.3	68.4	69.8	71.4	73.0
Corps of Engineers	5.5	4.5	4.7	4.7	4.9	5.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2	7.9	8.0	8.2	8.4	8.6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8	0.2	0.2	0.3	0.3	0.3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17.6	17.5	17.8	18.2	18.6	19.0
National Science Foundation	7.2	7.3	7.4	7.6	7.7	7.9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9	0.7	0.7	0.7	0.8	0.8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8.9	9.1	9.0	9.2	9.4	9.6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1.1	1.1	1.1	1.1	1.1	1.1
Other Agencies	18.7	119.2	19.2	19.6	20.0	20.5
2015 Opportunity, Growth, and Security Initiative	-	55.4	-	-	-	-
Allowances	-	-	10.3	6.2	3.1	-0.6
합계	1,028.9	1,064.7	1,086.1	1,101.0	1,117.9	1,1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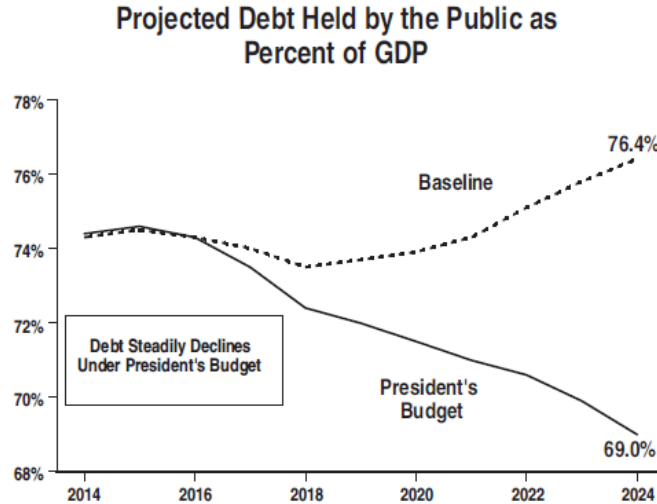
자료: Fiscal Year 201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4.3월 (Table S-11)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장기재정적자를 줄이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함
 - FY2015 예산안은 의료비용 증가 억제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수입 창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 삭감에 초점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기타 의료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4,020억달러 예산 감축
 - 향후 10년 동안 세제개혁을 통해 6,500억달러, 이민개혁을 통해 1,600억달러 예산 감축

[그림 I-1] 기준선전망과 대통령예산안의 재정전망 비교



자료: Fiscal Year 201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4.3월

나. 성장(Growth), 기회(Opportunity), 재정책임(Fiscal Responsibility)의 로드맵

- 일자리 창출과 기회제공(Opportunity for All)을 위해 혁신에 투자
 - 선진 제조업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10년간 45개의 제조업 혁신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
 - 기업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접근
 - 선진 제조업, 그린에너지, 의료, 농업 등의 미래 일자리와 사업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R&D 투자 확대 및 민간부문 R&D 투자에 대한 영구적 세액공제 지원
 - 미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R&D에 총 1,350억달러 투자
 -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 협력, 자동차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오일·가스·화석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책을 강화
 -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탄소배출 절감을 통해 대통령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지원
- 21세기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 미국의 도로, 다리, 교통체계, 철도 개선 등 4개년 수송시스템 개선 및 현대화에 3,020억달러 투자
 - Rebuild America Partnership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도모
 -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허가절차(permitting process) 현대화
 - 미국 국립공원 100주년 이니셔티브 시행
- 모든 국민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함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육 접근성 향상
 -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것에 초점
 - 학생들에게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기회 제공하고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파트너십 강화
 - ConnetEDucators 프로그램에 2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학생들이 무선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교육 프레임워크를 통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의 투자 효과 증진
 -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미취업자들의 직업교육 및 취업자들의 직장 내 교육 투자 확대
 -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민간협력사업 지원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투자 확대
- 기회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제공
-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우선목표로 설정
 -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 실업수당 연장 건에 대한 논의 제의
 - 연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간의 파트너십 강화로 일자리 창출, 교육기회 확대, 공공 안정 등을 높이기 위해 협력
 - 무자녀 노동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최대한도를 1,000달러로 인상
- 국가안보 보장
- 총기관련 폭력사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
 -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개혁

II. 캐나다

□ FY2013-14: 2013.4~2014.3

□ 출처

○ *Budget 2013*, 2013.3

○ *Supplementary Estimates (A) 2013-14*, 2013.5

○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3*, 2013.9

○ *Supplementary Estimates (B) 2013-14*, 2013.11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11

※ 캐나다의 예산안은 통상 매년 3월에 발표되며, FY2014-15 예산안은 2월 11일 (현지시간) 발표되었으나, 『주요국 예산안 2014』 중 캐나다의 내용은 2013년 예산(Budget 2013) 및 2013년 11월에 발표된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 Budget 2014의 간략한 내용은 <참고 II-2>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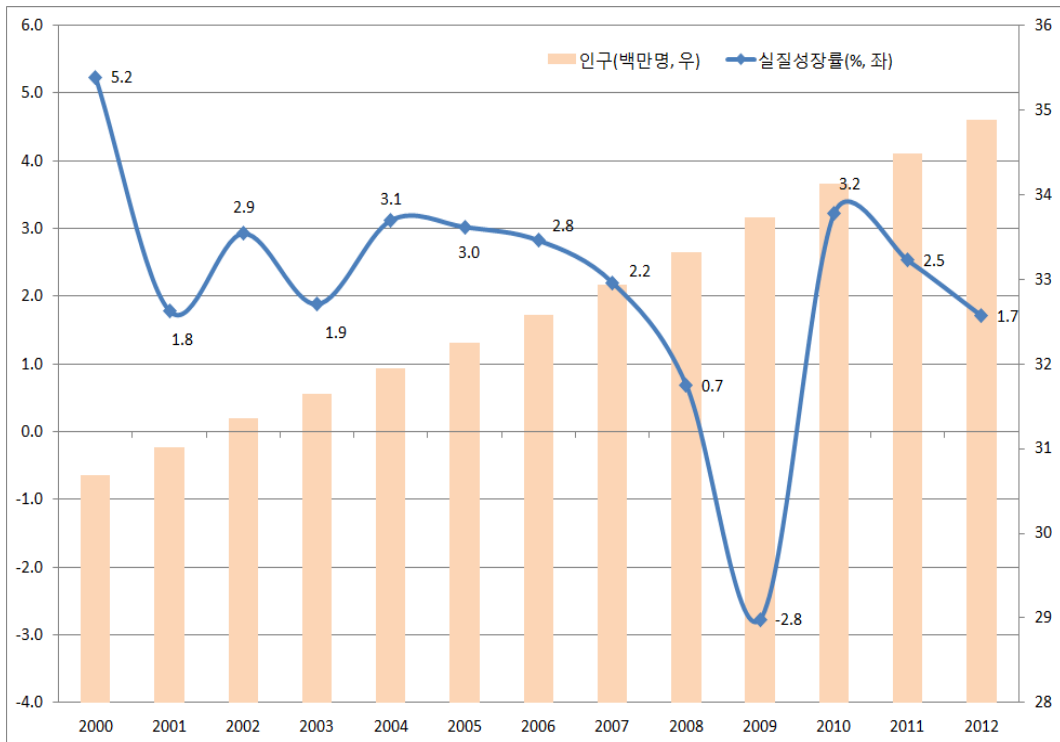
□ 환율: 1캐나다달러 = 1,063.45원(2013년 평균)

□ 경제규모: 2012년 경상 GDP 1조 4,353억달러(우리나라 약 0.96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2년 기준 62.8%(우리나라는 약 109.9%)

□ 인구: 3,488만명(2012년 기준)

□ GDP 및 인구추이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3년 11월 기준,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4%, 실업률은 6.9%로 예측
- (재정전망) 글로벌 경제 약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FY2015-16 이후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예산기조

- Budget 2013은 2012년 예산안과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및 재정건전화에 주력
 - 세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지원, 제조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투자, 연구기술 혁신 및 개발 지원,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 예산안 내용 (2013. 11)

- (세입) FY2013-14 총세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652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2%)이며, 연평균 4.6%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프로그램지출) FY2013-14 총지출은 2,53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3.6%)로 전망,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과 정부부문 기타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지출을 포함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Economic Action Plan 2013에서는 Economic Action Plan 2012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 정부 효율성 개선 방법 및 주요 부처의 운영 검토, 2015-1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
- (경기부양정책) Budget 2013 예산기조 참조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3.02.14	유동성 플랜(Prudential Liquidity Plan) 시행 발표	2013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3.02.25	재무위원회 사무국(TBS), 「FY2013-14 세출예산안(Estimates)」 의회 제출	
2013.02.25	FY2012-13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C) 발표	
2013.03.21	연방정부 「FY2013-14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3)」 발표	
2013.05.03	「Canada's Venture Capital Action Plan」 시행	
2013.05.17	FY2013-14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A) 발표	
2013.09.09	재무부, 고용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 동결 발표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3.09.26	의회예산처(PBO), 「2013년 재정지속가능성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발간	
2013.10.22	FY2012-13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	
2013.11.12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11.17	FY2013-14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B) 발표	
2013.12.02	FY2013-14 2사분기 세출예산 집행결과보고서 발표	

가. 경제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4%로 Budget 2013 전망치와 큰 차이는 없으나, 약화된 국내 인플레이션과 국제상품가격으로 0.1%p 하향 조정
 - 2013~2017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3%로 전망되며, 2016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명목 GDP 성장률) 2014년 명목 GDP 성장률은 4.2%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한 반면, Budget 2013 전망치 대비 0.5%p 하향 조정
- (실업률) 2014년 실업률은 Budget 2013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
 - 향후 5년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6.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2013년 1.2%, 2014년 1.8%로 Budget 2013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나, 2015년까지 캐나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궤도에는 진입할 것으로 전망

10) 본장의 내용은 캐나다 재무부에서 14개 그룹의 민간부문 경제 전문가 대상* 서베이(2013.9)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발표한 경제 및 재정전망치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3, 11)」를 위주로 작성

*참여 전문가: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표 II-1〉 캐나다 경제전망(2013년 11월 기준)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2017
실질 GDP 성장률							
Budget 2013	1.6	2.5	2.6	2.4	2.3	-	2.3
Update 2013	1.7	2.4	2.6	2.4	2.3	2.2	2.3
GDP 인플레이션							
Budget 2013	1.7	2.1	2.0	2.0	2.0	-	2.0
Update 2013	1.3	1.8	2.0	2.0	2.0	2.0	1.8
명목 GDP 성장률							
Budget 2013	3.3	4.7	4.7	4.4	4.3	-	4.3
Update 2013	3.0	4.2	4.6	4.5	4.4	4.3	4.1
실업률							
Budget 2013	7.1	6.9	6.7	6.5	6.4	-	6.7
Update 2013	7.1	6.9	6.6	6.4	6.3	6.2	6.7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Budget 2013	1.3	2.0	2.0	2.0	2.0	-	1.8
Update 2013	1.2	1.8	2.0	2.0	2.0	2.0	1.8
U.S. 실질 GDP 성장률							
Budget 2013	1.9	2.9	3.1	3.0	2.8	-	2.7
Update 2013	1.6	2.9	3.1	3.1	2.9	2.7	2.7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 11, Table 2.1 일부 발췌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12-13 재정수지는 △189억캐나다달러로 Budget 2013 전망치(△259억 캐나다달러)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FY2015-16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위험조정 후 재정수지)¹¹⁾ 경기 위험요인을 조정한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약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전망
 - FY2014-15에는 △55억캐나다달러를 달성, FY2015-16에는 흑자(37억캐나다달러)로 전환될 전망

11) 정부는 민간부문보다 향후 경기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정부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전망한 후 이를 감안한 재정수지를 산출

- (총수입) FY2012-13 총수입은 예상보다 높은 세입 및 기타 수입으로 Budget 2013 전망치보다 약 19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566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프로그램지출) FY2012-13 프로그램지출은 Budget 2013 전망치 대비 약 52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46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¹²⁾비율은 FY2011-12 33.2%에서 FY2012-13 33.1%로 감소 전망
 - FY2017-18에는 경기침체 이전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18-19에는 26.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현재 IMF에서 캐나다의 GDP 대비 총정부순채무가 G7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그림 II-1] 참조)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3년 11월 기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총수입	256.6	265.2	277.4	293.9	307.0	317.9	332.7
프로그램 지출	246.4	253.6	253.1	259.4	268.8	277.2	286.8
이자지출	29.2	29.5	29.7	30.8	33.2	35.0	36.1
총지출	275.6	283.1	282.8	290.2	301.9	312.2	322.9
재정수지	△18.9	△17.9	△5.5	3.7	5.0	5.7	9.8
연방채무 ¹⁾	602.4	617.9	623.3	619.6	614.6	608.9	599.1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1	14.2	14.3	14.5	14.5	14.4	14.4
프로그램 지출	13.5	13.6	13.1	12.8	12.7	12.5	12.4
이자지출	1.6	1.6	1.5	1.5	1.6	1.6	1.6
재정수지	△1.0	△1.0	△0.3	0.2	0.2	0.3	0.4
연방채무	33.1	33.1	32.2	30.6	29.1	27.6	26.0

주: 1) 2013-14년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포함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 11, Table 3.3

12)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 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II-3〉 Budget 2013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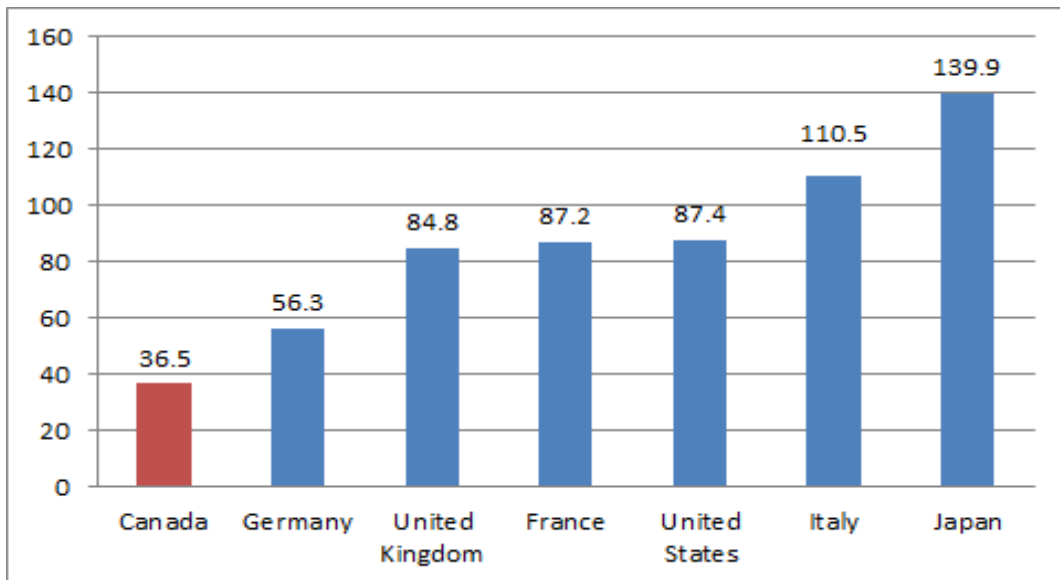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3년 예산안 재정수지		△25.9	△18.7	△6.6	0.8	3.9	5.1	n/a
2013년 예산안 위험조정 후 재정수지		△25.9	△15.7	△3.6	3.8	6.9	8.1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Add(+): 총수입	1.9	△1.3	△2.6	△2.2	△1.8	△2.5	
	Less (-): 프로그램지출	5.2	2.7	3.0	3.0	1.7	1.1	
	Less (-): 공공채무비용	△0.1	0.3	0.5	0.7	0.7	0.8	
2013년 예산안 편성 후 결정된 정책에 의한 조정		△18.9	△14.0	△2.7	5.3	7.4	7.5	11.6
Update된 재정수지		△18.9	△16.4	△2.5	6.7	8.0	8.7	12.8
Update된 위험조정 후 재정수지		△18.9	△17.9	△5.5	3.7	5.0	5.7	9.8

출처: 캐나다 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 11, Table 3.2 일부 발췌

[그림 II-1] G7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net debt) 비율(2013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주: 1. 국가 포괄범위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계획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 11, Chart 3.3

2. 예산기조(Budget 2013)

- 캐나다 2013년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3)은 개인과 가계, 기업 그리고 노년층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에 주력
 - 2013년 3월 21일, Budget 2012와 동일한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및 장기적 번영(Jobs, Growth, Long-term Prosperity)」을 주제로 한 Budget 2013을 하원에 상정
- 노동시장 진입 지원(Connecting Canadians With Available Jobs)
 - 캐나다 임금보조금(Canada Job Grant): FY2014-15부터 노동시장협약(Labour Market Agreements)¹³⁾으로 전문기술직 고용이나 직업 연수프로그램 등 직업훈련에 연간 5억 캐나다달러 지원
- 제조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Helping Manufacturers and Business Succeed in the Global Economy)
 - 기계 및 설비분야의 신규 투자에 대한 임시적 자본비용 가속공제를 2014-15년에서 2017-18년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에 대해 14억캐나다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
 - 이는 제조 및 가공부문 사업체의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 경영 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
 - 온타리오 주 남부 연방경제개발국(Feder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for Southern Ontario) 갱신에 5년간 9.2억캐나다달러 지원
 - 영구적인 항공우주방위전략계획(Strategic Aerospace and Defence Initiative)을 위해 5년간 약 10억캐나다달러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정
 - 2014-15년부터 2년간 임업 혁신 및 시장 개발에 9,200만캐나다달러 지원
-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투자(Federal Investments in Job Creating Infrastructure)
 - 캐나다 건설계획(The New Building Canada Plan):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설함

13) 주정부와 해당 기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함께 운용하여 연간 1만 5천캐나다달러까지 보조할 계획

- 도로, 교량, 대중교통 및 기타 기간시설 건설 등에 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공, 2014-15년부터 10년에 걸친 신규 투자 470억캐나다달러를 포함하여 총 53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할 예정
 - 지역사회개선기금(Community Improvement Fund): 320억캐나다달러
 - 캐나다 건설기금(new Building Canada Fund): 140억캐나다달러
 - P3 캐나다 기금(P3 Canada Fund)¹⁴⁾: 12억 5,000만캐나다달러
 - 2014-15년 이후 60억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향후 10년간 국가 인프라 및 연방자산투자 계획
 - 도로, 교량, 에너지 시스템 등 국가 인프라에 약 70억캐나다달러
 - 교량, 항구, 군사 기지 및 숙박시설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인프라 자산 투자에 100억캐나다달러
- 연구기술 혁신 및 개발 지원(Investing in World-Class Research and Innovation)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사업 개발 서비스 지원: 3년간 2,000만캐나다달러
 - 기업의 비용 절감과 높은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청정 기술 개발을 위해 캐나다 지속개발기술부(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SDTC)에 지원: 8년간 약 3.3억캐나다달러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환경을 개선
 - 입양 비용 세액공제 강화 및 원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
 - 캐나다 국민이 소비하는 수입품 중 유아용 의복, 자전거를 제외한 운동경기용 육상장비에 대한 모든 관세를 영구적으로 폐지

14) 공공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2013년 11월 발표된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보고서에 따르면, FY2013-14 세입 전망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652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2%)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6% 상승 전망
- (개인소득세) FY2013-14 개인소득세 수입은 약 56억캐나다달러(4.5%) 증가한 1,313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¹⁵⁾로 명목 GDP 성장률에 비해 다소 빠르게 증가될 전망
- (법인세) FY2013-14 법인세 수입은 35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1% 증가 전망
- (비거주자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비거주자 소득세(특히 이자비용 및 배당)는 FY2013-14 55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3-14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수입은 과세소비 대상 증가에 기반하여 전년 대비 2.9% 증가, 향후 5년간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세) FY2013-14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기타 소비세)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약 108억캐나다달러이며, 향후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15) 실질소득수입과 결합된 소득세제시스템의 누진적인 성격 반영

□ (고용보험) FY2013-14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2013년 고용보험료율(100캐나다달러당 1.88캐나다달러) 동결로 전년 대비 5.4% 증가, 2013-14년부터 2015-16년까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conomic Action Plan 2013」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2015년에 100캐나다달러당 1.98캐나다달러까지 인상하고, 2016년에 1.93캐나다달러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회복세로 인해 실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2013년 수준(1.88캐나다달러)으로 동결하기로 함

〈표 II-4〉 세입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조세수입(Income taxes)							
개인소득세	125.7	131.3	139.1	146.8	153.8	161.0	168.2
법인세	35.0	35.0	36.3	38.6	41.8	44.5	47.1
비거주자소득세	5.1	5.5	5.8	6.3	6.8	7.2	7.6
총소득세(A)	165.8	171.8	181.2	191.6	202.4	212.7	222.9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8.8	29.7	31.1	33.0	34.8	36.5	38.1
관세	4.0	4.0	4.2	4.7	4.4	4.6	4.8
기타소비세	10.8	10.8	10.8	10.8	10.7	10.8	10.8
총소비세(B)	43.6	44.5	46.2	48.5	50.0	51.8	53.6
총조세수입 (C=A+B)	209.3	216.3	227.4	240.1	252.4	264.5	276.5
고용보험(D)	20.4	21.5	22.7	23.6	23.0	19.5	20.2
기타세입(E)	26.9	27.4	27.3	30.2	31.6	33.8	35.9
총세입(F=C+D+E)	256.6	265.2	277.4	293.9	307.0	317.9	332.7
GDP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6.9	7.0	7.2	7.3	7.3	7.3	7.3
법인세	1.9	1.9	1.9	1.9	2.0	2.0	2.0
재화 및 용역세	1.6	1.6	1.6	1.6	1.6	1.7	1.7
총조세수입	11.5	11.6	11.8	11.9	11.9	12.0	12.0
고용보험	1.1	1.2	1.2	1.2	1.1	0.9	0.9
기타세입	1.5	1.5	1.4	1.5	1.5	1.5	1.6
총세입	14.1	14.2	14.3	14.5	14.5	14.4	14.4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 11, Table 3.4

나. 세출

- 2013년 11월에 발표된 프로그램 지출 전망에 따르면 FY2013-14 총지출은 2,53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3.6%)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과 정부부문 기타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지출을 포함
- (노인지원) 노인지원지출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구고령화로 FY2013-14 420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8-19 544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3%로 이는 명목 GDP 증가율(4.4%)보다 빠른 속도임
 - 노령인구는 FY2013-14 540만명에서 FY2018-18 640만명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용보험) FY2013-14 고용보험 지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3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연평균 3.2%의 증가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동지원) 아동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과 아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포함한 아동지원지출은 인플레이션 조정과 급여대상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문 이전지출) 정부부문 이전지출은 FY2013-14 605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8-19 737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이는 캐나다 보건지출(The Canada Health Transfer: CHT), 사회보장프로그램지출, 재정균등화교부금 및 준주교부금(Equalization and 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등을 포함
- (직접프로그램지출) 직접프로그램지출은 FY2013-14 1,207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5-16 1,190억캐나다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FY2018-19 1,24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직접프로그램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FY2013-14 6.5%에서 FY2018-19 5.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직접프로그램지출은 운영비용, 부처의 이전지출경비, 자본상각(capital amortization) 등을 포함

〈표 II-5〉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40.3	42.0	44.1	46.4	49.0	51.7	54.4
고용보험(EI)	17.1	17.3	17.9	18.5	19.0	19.5	20.3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13.0	13.1	13.2	13.4	13.6	13.7	13.9
소계(A)	70.3	72.4	75.2	78.3	81.5	84.9	88.6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28.6	30.3	32.1	34.0	36.1	37.7	39.3
사회보장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1.9	12.2	12.6	13.0	13.3	13.7	14.2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7.8	18.7	19.3	20.0	20.8	21.7	22.5
연료세기금(Gas Tax Fund)	2.0	2.1	2.0	2.0	2.1	2.1	2.2
기타 주요 이전지출	1.5	0.6	0.3	0.2	0.1	0.1	0.0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3.4	△3.5	△3.7	△3.9	△4.1	△4.4	△4.6
소계(B)	58.4	60.5	62.6	65.2	68.3	70.9	73.7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78.0	77.0	73.9	74.5	75.4	77.2	79.3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4.9	38.2	35.6	35.2	37.0	37.4	38.3
자본상각(Capital amortization)	4.9	5.5	5.8	6.2	6.5	6.7	6.9
소계(C)	117.7	120.7	115.4	115.9	119.0	121.4	124.5
총프로그램지출(A+B+C)	246.4	253.6	253.1	259.4	268.8	277.2	286.8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3.9	3.9	3.9	3.9	3.9	3.8	3.8
정부부문 간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2	3.2	3.2	3.2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 (Direct Program Expenses)	6.5	6.5	6.0	5.7	5.6	5.5	5.4
총프로그램지출	13.5	13.6	13.1	12.8	12.7	12.5	12.4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3, 11, Table 3.5

〈참고 II-1〉 캐나다 추경예산 내용

- FY2013-14 추경예산은 2013년 5월 17일 추경(A), 2013년 11월 7일 추경(B)가 상정되어 총 2회 편성
- FY2013-14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A)은 약 11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에 800만캐나다달러를 편성
 - 캐나다 원자력 제한(AECL) 펀드에 약 2.6억캐나다달러
 - 자연재해 및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상(DFAA) 프로그램에 약 2.3억캐나다달러
 - 원주민 문제 및 북부개발부에 약 1.7억캐나다달러
- FY2013-14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B)은 54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은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의 6.2%인 약 54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은 약 5백만캐나다달러로 편성
 - 누적된 퇴직급여수당(severance pay benefits) 상환에 약 9.6억캐나다달러
 - 자연재해 및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상(DFAA) 프로그램에 약 6.9억캐나다달러
 - 참전용사 지원에 약 5억캐나다달러
 - 원주민 문제 및 북부개발부에 약 4.7억캐나다달러

〈추경예산 편성내역〉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일반예산 (Budgetary)	투융자예산 ¹⁾ (Non-Budgetary)
추경(A)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11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0	0
	합계	11	0
추경(B)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54	1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0	0
	합계	54	1

주: 1) 투융자예산은 투자, 융자, 선급금에 해당하는 지출로 정부 금융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예산외 항목 외, 『주요국의 예산편성 방식』, 한국조세연구원(2004.12) 참고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균형예산 달성계획(Return to Balanced Budgets)
 - Economic Action Plan 2013에서는 Economic Action Plan 2012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 정부 효율성 개선 방법 및 주요 부처의 운영 검토, 2015-1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
 - 정부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 업무상 여행 비용 감축(Reducing travel costs): 정부 부처의 업무상 여행 비용과 같은 행정비용을 5%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2013-14년 4,270만캐나다달러 감축 계획
 - ※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행, 서비스 및 컨퍼런스 등에 대한 지출 관리에 대한 지침이 2011년 1월 1일 도입된 바 있음
 - 텔레프레전스¹⁶⁾ 사용 확대(Expanding the use of telepresence): 2,000만캐나다달러 지원
 - 부처 운영 검토
 - 국세청 및 수산해양성 운영, 국세청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anada Revenue Agency compliance programs) 등에 대해 검토
 - 균형예산 달성 계획
 - 세금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Closing tax loopholes and improving the fairness of the tax system)
 -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의도적 탈세 행위에 대처: 1) 1만캐나다달러 이상 국제간 온라인 자금이체에 대해 국세청에 금융거래신고 의무화 2) 의료서비스 관련 연방소비세(GST)와 통합판매세(HST) 규정 정비 - 의료 관련 가정돌봄서비스, 비의료목적으로 수행된 기록 및 검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정 적용

16) 인터넷 망을 통한 영상회의 방식 중의 하나

- 일반 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수입품 중 유아용 의복, 자전거를 제외한 운동경기용 육상장비에 대한 모든 관세 영구적 폐지 등

〈표 II-6〉 균형예산 달성계획(Plan to Return to Budget Balance)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6Year Total
Reducing travel costs		△43	△43	△43	△43	△43	△214
Expanding the use of telepresence		20					20
Standardizing and consolidating procurement of end-user devices		△2	△9	△9	△9	△9	△37
Targeted review: Canada Revenue Agency operations		△19	△58	△61	△61	△61	△259
Targeted review: Fisheries and Oceans Canada operations		△4	△5	△33	△33	△33	△108
Canada Revenue Agency: compliance programs	△30	△125	△550	△550	△550	△550	△2,355
Closing tax loopholes and improving the fairness of the tax system	△2	△316	△806	△946	△1,082	△1,237	△4,389
General Preferential Tariff			△83	△333	△333	△333	△1,082
Total	△32	△489	△1,554	△1,974	△2,110	△2,265	△8,423
Less internal reallocations		△20					△20
Total measures to return to budget balance	△32	△509	△1,554	△1,974	△2,110	△2,265	△8,443

출처: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3*, 2013.3, Table 4.1.1

- 국내외 채무관리를 위한 FY2013-14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 FY2013-14 채무관리전략은 '안정적 증진·저비용 자금조달'을 목표로 함
 - (단기공채) FY2013-14 단기공채는 약 1,490억캐나다달러로 FY2012-13에 비해 큰 폭 감소
 - (유가증권) FY2013-14 국내 유가증권의 순발행액은 약 870억캐나다달러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FY2012-13(940억캐나다달러)보다 낮은 수준

- FY2013-14 유가증권(stock)은 약 4,770억캐나다달러로 계획
- 소매채무와 연금채권은 FY2009-1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채는 FY2013-14에 큰 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7〉 FY2013-14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09-10	2010-11	2011-12	2012-13(전망)	2013-14(계획)
단기공채(Treasury bills)	176	163	163	181	149
유가증권(Marketable bonds)	368	416	448	466	477
소매채무(Retail debt)	12	10	9	8	7
외채(Foreign debt)	8	8	11	11	15
연금채권(CPP bonds)	0.5	0	0	0	0
총시장채무	564	597	631	665	648

출처: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3*, 2013.3, Table A1.2

나. 경기부양책

- FY2013-14 예산 기초 내용 참조

〈표 II-8〉 캐나다 2013년 예산안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예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2-13	2013-14	2014-15	Total
A. 노동시장 진입 지원				
(Connecting Canadians With Available Jobs)				
The Canada Job Grant/Labour Market Agreements			500	500
Creating Opportunities for Apprentices		0	1	2
Supporting Job Opportunities for All Canadians		117	176	293
소계		117	677	795
B. 제조업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Helping Manufacturers and Business Succeed in the Global Economy)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382	282
Supporting Small Businesses	56	174	15	245
Growing Trade and Investment		1	1	3
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185	-19	166
Keeping Taxes Low for Job-Creating Businesses		2	5	6
소계	56	362	385	802

〈표 II-8〉의 계속

	2012-13	2013-14	2014-15	Total
C.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투자 (Federal Investments in Job Creating Infrastructure)				
The New Building Canada Fund			210	210
Investments in Federal Infrastructure		123	102	225
소계		123	312	435
D. 연구기술 혁신 및 개발 지원 (Investing In World-Class Research and Innovation)				
Supporting Advanced Research		174	206	380
Pursuing a New Approach to Supporting Business Innovation		75	88	163
Enhancing Canada's Venture Capital System		18	26	44
소계		267	320	587
E.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Support for Families		82	82	164
Investing in Communities		133	476	609
Protecting Canada's Natural Environment		32	9	41
Building Strong Aboriginal Communities		95	90	185
소계		342	657	999
총 합계(A+B+C+D+E)	56	1,210	2,352	3,618
Less funds existing in the fiscal framework		281	1,394	1,675
Less funds sourced from internal reallocations		6	27	33
순 재정비용(Net fiscal cost)	56	922	931	1,909

출처: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3*, 2013.3, Table 3.0

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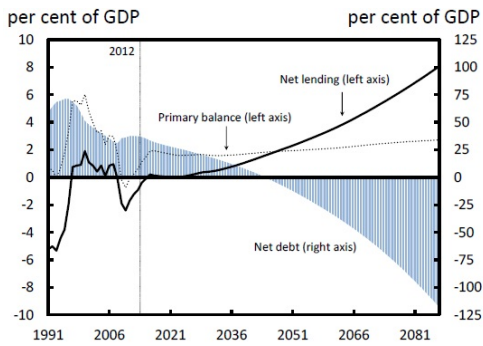
- 의회예산처(PBO,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2013년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¹⁷⁾ 발표
 - PBO는 통계청의 인구 및 거시부문 전망치를 바탕으로 향후 75년 기간의 정부 재정전망을 수행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
 -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연방정부 및 CPP, QPP¹⁸⁾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구조

17) 의회예산처(PBO)는 2010년부터 매년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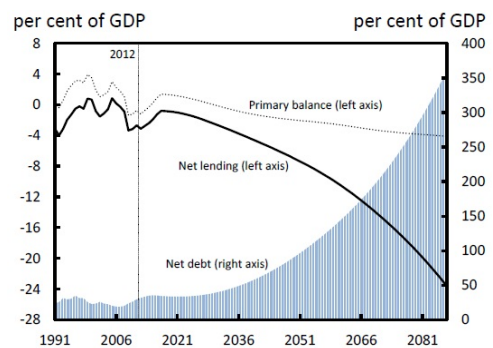
18) CPP,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연금제도/QPP, Quebec Pension Plan: 퀘벡 연금제도

- (순채무¹⁹⁾)
 - 연방정부는 지출제한 및 캐나다 보건지출의 개혁으로 2011년에 재정 지속가능 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까지 GDP 대비 부채 25% 목표를 달성 전망
 -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 31.5% 수준에서 2087년 359.9% 수준까지 증가 예상
- (재정갭)²⁰ 75년을 기준으로 재정갭(fiscal gap)을 추정한 결과, 연방정부 재정갭은 GDP 대비 $\Delta 1.3\%$ 로 나타난 반면 지방정부는 1.9%로 나타남

[그림 II-2]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순채무 -연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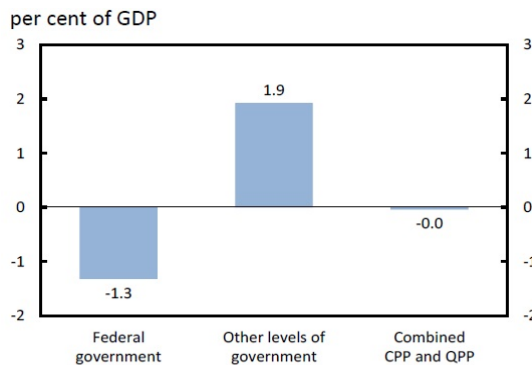


[그림 II-3]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순채무 -지방정부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3," 2013.9

[그림 II-4] 재정갭 전망 결과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3," 2013.9

19) 여기서 순채무는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일컫음

20) 재정갭이란 현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기초재정수지에서 현 기초재정수지를 뺀 값

- 캐나다 재무부, 고용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 동결 발표
 - 캐나다 재무부는 고용 진작을 위해 2014년부터 향후 3년간 고용보험료를 2013년 현행 수준(100캐나다달러당 1.88캐나다달러)으로 동결
 - 이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Economic Action Plan 2013에서 2015년에 100캐나다달러당 1.98캐나다달러로 인상, 2016년에 1.93캐나다달러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회복세에 따른 실업률 감소로 동결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고용자 및 피고용자는 2013년 약 6억 6천만캐나다달러 절약 예상
 - 2017년부터 보험료율에 'Seven-year rate setting mechanism'을 적용할 계획이며, 보험료율 조정 폭은 최대 5%로 제한
 - ※ 지난 Economic Action Plan 2012에서는 고용보험료 요율 안정화를 위해 고용보험계정의 균형이 달성된 이후부터 요율을 7년간 동결하는 'Seven-year rate setting mechanism'를 논의한 바 있음

〈참고 II-2〉 Economic Action Plan 2014 요약

- (예산기조) 2014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일자리와 기회 창출(Creating jobs and opportunities)」을 주제로 하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둠
 - 노동시장 진입지원(Connecting Canadians With Available Jobs)
 -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Fostering Job Creation, Innovation and Trade)
 - 자원개발, 캐나다 자연유산 보존, 인프라 및 교통에 투자(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Conserving Canada's Natural Heritage, and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 (경제전망)²¹⁾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로 전망되며, 2016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 2017-18년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18
실질 GDP 성장률	1.7	2.3	2.5	2.5	2.3	2.2	2.4
실업률	7.1	6.8	6.6	6.4	6.3	6.2	6.5
CPI 상승률	1.0	1.5	1.9	2.0	2.0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4*, 2014.2.11, Table 2.1 일부 발췌

- (재정전망) 2015년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시행하고 있으며, FY2015-16에 64억캐나다달러로 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
 -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FY2018-19에 25.5%까지 감소될 전망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총세입	2,566 (14.1)	2,640 (14.1)	2,763 (14.3)	2,933 (14.5)	3,068 (14.5)	3,177 (14.4)	3,324 (14.4)
프로그램지출	2,464 (13.5)	2,512 (13.5)	2,502 (13.0)	2,569 (12.7)	2,665 (12.6)	2,752 (12.5)	2,863 (12.4)
이자지출	292 (1.6)	293 (1.6)	290 (1.5)	300 (1.5)	321 (1.5)	344 (1.6)	358 (1.6)
재정수지	△189 (△1.0)	△166 (△0.9)	△29 (△0.1)	64 (0.3)	81 (0.4)	81 (0.4)	103 (0.4)
연방채무	6,024 (33.1)	6,160 (33.0)	6,189 (32.0)	6,124 (30.3)	6,043 (28.6)	5,962 (27.0)	5,860 (25.5)

- (세입전망) FY2014-15 총세입은 2,763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약 0.2%p 증가될 전망
- (프로그램지출 전망) FY2014-15 프로그램지출은 2,502억캐나다달러이며, GDP 대비 프로그램 지출의 비중이 FY2012-13에 13.5%에서 FY2018-19에 12.4%로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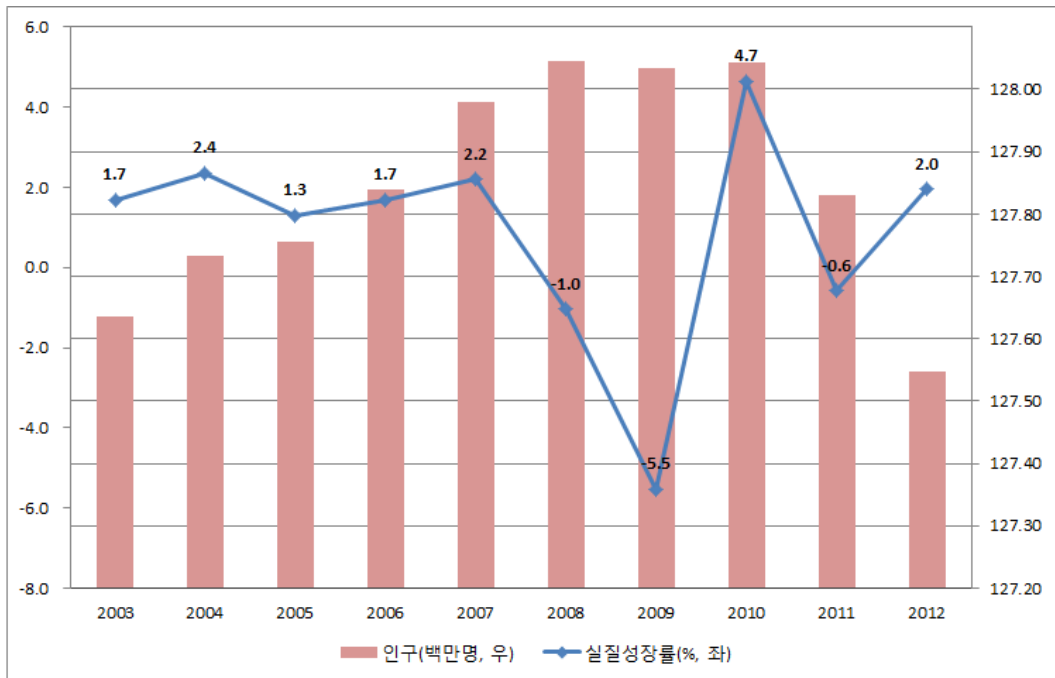
- (이자지출 전망) FY2014-15 이자지출은 290억캐나다달러로 FY2013-14 대비 3억 캐나다달러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FY2015-16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정책)
 - (재정건전화 및 부채 감축) 균형예산달성(Return to Balanced Budgets)을 위한 긴축기조 유지
 - Economic Action Plan 2013과 동일하게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정부의 효율성 및 세금제도의 공정성, 조세 준수 강화를 강조
 - 공무원에 대한 각종 급여의 합리화 및 비용 부담 관리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접프로그램지출 관리
 -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 자세한 예산 내역은 『재정동향』 2월 제2호 참고
 - 캐나다의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감세를 허용, 경제성장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
 - 일자리 창출, 혁신과 무역 육성을 위한 낮은 세금 유지, 캐나다 자연보존 및 인프라, 교통분야에 투자 등

21) 캐나다 재무부는 민간 부문 경제 전문가 대상⁴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 및 재정전망 발표
 *참여 민간 경제 전문가 그룹(14개):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III. 일본

- FY2014: 2014.4 ~ 2015.3
- 2014 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13. 08.08 FY2014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기준
 - 2013. 09.04 FY2014 각 부처의 예산요구 금액
 - 2013. 10.10 FY2014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공개
 - 2013. 12.12 FY2014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 2013. 12.24 FY2014 예산 정부안 결정
 - 2013. 12.26 FY2014 각 부처의 정책평가조서 공개
 - 2014. 01.26 FY2014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 출처:
 - 「平成26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13.8.8
 - 「当面の財政健全化に向けた取組等について－中期財政計画－」 2013.8.8
 - 「平成25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額等」 2013.9.4
 - 「消費税率及び地方消費税率の引上げとそれに伴う対応について」 2013.10.1
 - 「好循環実現のための経済対策」について」 2013.12.5
 - 「平成26 年度予算の編成等に関する建議」 2013.11.29
 - 「平成25年度補正予算案」 2013.12.12
 - 「平成26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3.12.12
 - 「我が国の財政事情」 2014.12.24
 - 「平成26年度予算政府案」 2013.12.24
 - 「平成26年度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4.1.24
 - OECD, *Economic Outlook 94*, 2013.11

- 환율: 100엔 = 약 1,123.41원(2013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2년 경상 GDP 4조 5,435억달러(우리나라 3.0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2년 기준 31.3%(우리나라 109.9%)
- 인구: 1억 2,755만명(2012년 기준 추정치)
-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4년도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반동 감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견조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되며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
 - 일본정부는 2014년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은 1.4%, 명목성장률은 3.3%로 전망
- (재정전망) 2014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7.6%, 국가채무 비율은 231.9%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 2014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

◇ 예산안 내용

- FY2014 세입규모는 지난해 대비 3조 2,708억엔(3.5%) 증가한 95조 8,823억엔 수준
- FY2014 세출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95조 8,823억엔으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2014년도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미래로의 투자 및 안전·안심 확보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과제를 중점화
- 재정건전화
 - FY2014 예산안에서는 일본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세출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3.05.27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본 개념」 발표	2013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3.05.29	FY2013 「재정법 제46조에 근거한 국민에의 재정보고」 발표	
2013.06.05	「일본 정부 성장전략」 발표	
2013.06.06	「재정 및 경제정책의 기본방침」 발표	
2013.07.23	내각부, 「FY2013 연차경제재정보고」 발표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3.08.08	FY2014 예산 개선 요구 기준 및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중장기 경제 재정에 관한 시산」 발표	
2013.09.04	FY2014 일반회계 개선요구액 발표	
2013.10.01	「소비세율 인상과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 발표	
2013.10.15	「일본의 재정관계자료(2013.10)」 발표	
2013.11.01	「FY2014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발표	
2013.12.05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 대책」 발표	
2013.12.12	FY2013 1차 추경안 발표	
2013.12.14	FY2014 예산 정부안 발표	
2013.12.21	「FY2014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 발표	2014년 1월 제2호 『재정동향』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일본의 2013년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2.6%, 명목성장률은 2.5%로 전망
 - 일본 경제는 ‘대담한 금융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의 ‘세 개의 화살(三本の矢)’에 의한 종합적인 정책효과에 따라 가계 및 기업 의식 개선, 내수 중심 소비 등으로 경기회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기업수익의 증가에 따라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고, 고용·소득 환경이 개선되어 경기회복 움직임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효과 등에 의해 0.7%로 전망되어, 5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될 것

- 2014년도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반동 감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경제대책 추진 등에 의해 전년도에 이어 견조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되며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
 - (성장률) 2014년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은 1.4%, 명목성장률은 3.3%를 기록할 전망
 - (물가) 2014년 소비자물가(종합) 상승률은 3.2%로 전년도보다 상승률이 높을 것이며, GDP 디플레이터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고용) 경기회복에 따라 경제대책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고용자 수 증가 및 완전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이 개선될 전망
 - [고용자 수] 전년 대비 0.5% 증가한 5,592만명으로 전망
 - [완전 실업률] 전년 대비 0.2%p 감소한 3.7%로 전망

- 주요 기관에서는 통화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 및 재정정책 시행 등에 의해 일본 경기가 회복될 것이나, 경기회복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망
 - 2014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1.7%(2014.1), 세계은행(WB)은 1.4%(2014.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2013.11)로 전망
 - 일본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를 종합한 넷케이NEEDS에서는 0.8%(2013.12)로 전망

- 일본 중앙은행(BOJ)은 FY2014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을 1.5%(2013.10)에서 1.4%(2014.1)로 하향 조정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12	2013	2014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2		2013		2014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72.6	484.2	500.4	△0.2	0.7	2.5	2.6	3.3	1.4
민간최종소비지출	288.1	295.9	304.2	0.6	1.5	2.7	2.5	2.8	0.4
민간주택투자	14.0	15.5	15.4	4.7	5.3	10.1	7.3	△0.4	△3.2
민간설비투자	64.6	65.6	68.8	0.5	0.7	1.4	0.4	5.0	4.4
민간재고품증가 (기여도)	△1.9	△3.0	△1.8	(△0.1)	(△0.1)	(△0.2)	(△0.2)	(0.2)	(0.2)
재화서비스수출	70.4	79.4	84.8	△0.7	△1.2	12.7	4.0	6.8	5.4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80.8	92.5	97.7	4.5	3.8	14.5	4.2	5.7	3.5
내수기여도				0.6	1.5	3.0	2.7	3.3	1.2
민간				0.5	1.1	1.9	1.6	2.6	1.0
공공				0.1	0.3	1.1	1.1	0.7	0.2
외수기여도				△0.8	△0.8	△0.6	△0.1	0.0	0.2
노동·고용	(만명)			(%)					
노동력인구	6,555	6,567	6,567	△0.3		0.2		0.0	
취업자수	6,275	6,309	6,323	△0.1		0.5		0.2	
고용자수	5,511	5,563	5,592	0.2		0.3		0.5	
완전실업률	4.3	3.9	3.7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2.9	2.4	3.3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1.1	1.9	3.9						
소비자물가지수	△0.3	0.7	3.2						
GDP디플레이터	△0.9	△0.1	1.9						
국제수지	(조엔)			(%)					
무역서비스수지	△9.4	△11.6	△11.5						
무역수지	△6.9	△10.1	△10.0						
수출	61.6	68.7	73.6	△1.7		11.6		7.2	
수입	68.5	78.8	83.6	3.6		15.1		6.1	
경상수지	4.4	4.2	4.7						
GDP 대비경상수지(명목,%)	0.9	0.9	0.9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4.1.24

나. 재정전망

- 2014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7.6%를 기록할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9.2%로 추정되는 2013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수치
 - 사회보장 관련 비용을 포함할 경우 2014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0.1%에서 8.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4년도 GDP 대비 국채비율은 231.9%로 전망되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
 - 2014년도 채권 잔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29조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채권 잔액 비율은 156%로 전망
 -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는 지난해보다 약 30조엔 증가한 1,010조엔(GDP 대비 202%)로 전망
 - 국채의존도는 43.0%로 전망

〈표 Ⅲ-2〉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조엔)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¹⁾	△8.3	△8.7	△9.0	△9.2	△7.6
재정수지 ²⁾	△9.5	△9.6	△9.8	△10.1	△8.5
국채 비율	193.3	210.6	218.8	227.2	231.9
채권잔액 비율	133(636)	141(670)	149(705엔)	155(751)	156(780)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 비율	179(862)	189(895)	197(932)	202(980)	202(1,010)
국채의존도 ³⁾	48.0	47.9	47.6	46.3	43.0

주: 1) 일반정부를 기반으로 OECD 「Economic Outlook 94」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일반정부를 기반으로 OECD 「Economic Outlook 94」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단년도 특수요인은 제외, 2014년 예산 정부안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3)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 2013.12.24

2. 예산기조

- 2014년 개산요구의 기준 및 틀 발표 (2013.8.8)
 - 2014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예산 내용을 중점화
 - 연금·의료 등에 관한 경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의 자연증가분(9,9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편성
 -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은 「중기재정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편성
 - 의무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며 참의원 선거 비용 감소 등 특수 요인에 대해서는 가감하여 편성
 - 동일본대지진 재해 부흥 특별회계로의 편입은 기존 방침에 따라 소요액을 편성하며 기타 경비는 전년도 예산의 90% 범위 내에서 편성
 - 예산 중점화 추진을 위한 긴급경제대책(2013년 1월) 및 방재대책,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생활 안정·지역활성화 외에도 「일본재부흥전략」, 「골태의 방침」 등을 바탕으로 한 과제 등에 대해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 범위’를 설정하고, 각 부처는 예산 요구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
 -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검토사항
 - i) 요청·요구 등에 대해서 정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또는 각 경비 간 우선순위 선택을 통한 조사 실시
 - ii)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 범위’에서 요구된 경비는 세수 등의 동향을 바탕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 설정한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목표 달성 가능 범위 내에서 편성
 - iii) 사회보장 4경비²²⁾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18조에 따른 판단을 바탕으로 2014년도 세수 증가분 동향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

22) 사회보장 4경비는 ‘제도로써 확립된 연금, 의료 및 간호의 사회보장수당 및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2014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2013.12.12)
 - FY2014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크게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노력, 강한 일본·강한 경제·풍부하고 안전한 생활 실현, 예산의 중점화·효율화 추진으로 구성
 - (경제재생을 위한 노력)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을 위해 민간 수요와 민간 혁신 유발 효과가 높은 것, 긴급성이 높은 것, 규제 개혁 등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중점화함
 - 예산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업 평가의 활동 및 부처 간 중복 정책 제외 등 효율화를 추진
 - (성장전략 실행)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²³⁾에 따라 민간투자 활성화 및 첨단설비 투자 촉진, 중소기업 지원 및 새로운 사업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 특히 FY2014에는 4조엔 이상의 재정수지 개선을 도모, 신규 국채 발행규모가 이번 연도 발행규모인 42조 8,500억엔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함
 - (부흥대책) 이재민 지원, 원자력 피해로부터의 부흥 가속화, 방사성물질 오염 폐기물 처리 가속화 등
 - (예산 중점화·효율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관계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기초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재량적·의무적 경비의 재검토 필요

- 2014년 예산의 포인트²⁴⁾
 - 경제재생·디플레이션 탈출과 재정건전화를 아우르는 예산
 -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을 실현하는 최초 예산
 - i) 미래에의 투자와 생활 안전·안심을 추진
 -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중점
 -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에 의한 소비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고, 육아지원 등을 충실
 - 인프라 노후화 대책 및 교통·물류 네트워크 정비 가속을 위해 공공사업예산을 중점화

23) 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

24) 재무성, 「平成26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3.12.24

- 안정보장환경을 위한 방위력 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방위예산 충실
 - 진료 보수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국민부담 증가를 피하면서 지역 의료보조금에 의한 의료제공 체제 충실
 - '아베노믹스'에 의한 세수증가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등을 감액하고, 사회보장 충실분을 증액하여 지방의 일반재원 총액을 확보
- ii) 2013년도 추경예산과 일체적으로 재정운동을 실현
- 추경예산을 통해 2014년도 전반에 전망되는 수요 반동 감소를 완화시키고 성장력을 향상시킴
- iii) 재정건전화를 착실히 추진
- 2015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반감, 2020년도 흑자전환을 목표로 착실히 세출을 효율화하여 5조엔을 상회하는 기초재정수지 개선
 - 전년 대비 국채발행액 1.6조엔 감액

3. 예산안 내용

〈표 III-3〉 FY2014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3 당초(A)	FY2014 전망(B)	비교증감액 (B-A)	증감률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430,960	500,010	69,050	16.0
기타 수입	40,535	46,313	5,778	14.3
국채발행	428,510	412,500	△16,010	△3.7
연금특례공채금	26,110	-	△26,110	-
계	926,115	958,823	32,708	3.5
세 출				
국채비	222,415	232,702	10,287	4.6
기초재정수지 경비	703,700	726,121	22,421	3.2
계	926,115	958,823	32,708	3.5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13.12.24

〈표 III-4〉 FY2014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3		FY2014	전년 대비			
	예산 (당초)	추경	예산안	예산 (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14,620	121,560	122,620	8,000	7.0	1,060	0.9
신고소득세	24,360	26,290	25,280	920	3.8	△1,010	△3.8
(소득세 계)	(138,980)	(147,850)	(147,900)	(8,920)	(6.4)	(50)	0.0
법인세	87,140	100,650	100,180	13,040	15.0	△470	△0.5
상속세	14,950	14,950	15,450	500	3.3	500	3.3
소비세	106,490	106,490	153,390	46,900	44.0	46,900	44.0
주세	13,470	13,470	13,410	△60	△0.4	△60	△0.4
담배세	9,910	9,910	9,220	△690	△7.0	△690	△7.0
휘발유세	25,660	25,660	25,450	△210	△0.8	△210	△0.8
석유가스세	110	110	100	△10	△9.1	△10	△9.1
항공기연료세	500	500	530	30	6.0	30	6.0
석유석탄세	6,500	5,640	6,130	△370	△5.7	490	8.7
전원개발촉진세	3,300	3,300	3,270	△30	△0.9	△30	△0.9
자동차중량세	3,860	3,860	3,870	10	0.3	10	0.3
관세	8,970	10,030	10,450	1,480	16.5	420	4.2
톤세	100	100	100	0	0.0	0	0.0
인지수입	11,020	11,020	10,560	△460	△4.2	△460	△4.2
합계	430,960	453,540	500,010	69,050	16.0	46,470	10.2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3.12.24

가. 세입

- FY2014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3조 2,708억엔(3.5%) 증가한 95조 8,823억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 FY2013 예산(당초) 대비 16.0% 증가한 50조 10억엔 예상
 - 전년 대비 소비세(44.0%), 관세(16.5%), 법인세(15.0%)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석유가스세(△9.1%), 담배세(△7.0%), 석유석탄세(△5.7%) 등은 감소
 - (기타 수입) FY2013 예산(당초) 대비 5,778억엔(14.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채발행액) FY2013 예산(당초) 대비 1조 6,010억엔(△3.7%) 감소한 41조 2,500억 엔으로 조세 및 인지수입(세수)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

나. 세출

- FY2014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95조 8,823억엔으로 편성
 - 공공사업 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
 - 공공사업관계비(12.9%)와 에너지대책비(13.5%)의 증가가 두드러짐
 - 국채비는 1.4% 증가한 22조 2,415억엔으로 전망

- FY2014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전년 대비 4.8% 증가한 30조 5,175억엔 편성
 - 소비세 증가분(국가·지방 기준 0.5조엔, 국가 기준 0.2조엔)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을 충실히 시행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전년 대비 1.4% 증가한 5조 4,421억엔 편성
 - [교육예산] 초등·중학교 외부인재 확충, 글로벌 인재 육성, 무이자장학금 대출 인원 확충 등 '교육재생'에 이바지하는 정책 중점화
 - [과학기술] 사령탑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과학기술회의 조정비(500억엔) 신설, 일본판 NIH²⁵⁾ 창설을 위한 의료분야 연구개발예산 중점화(약1,200억엔)
 - (공공사업관계비) 전년 대비 12.9% 증가한 5조 9,685억엔 편성
 - 인프라노후화 대책 가속 및 남해트로프(trough) 거대지진 등에 대비한 사전방재 대책 강화
 - 원활한 물류 실현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물류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정비
 - (방위관계비) 전년 대비 2.8% 증가한 4조 8,848억엔 편성
 - 경계감시 능력강화 및 도서지역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

25) 후생노동성에서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을 모델로 2015년에 일본판 NIH 설립을 추진.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아베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임

〈표 III-5〉 FY2014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 분	FY2013 당초(A)	FY2014 전망(B)	비교증감액 (B-A)	증감률
사회보장관계비	291,224	305,175	13,951	4.8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687	54,421	734	1.4
국채비	222,415	232,702	10,287	4.6
연금관계비	5,045	4,443	△602	△11.9
지방교부세교부금	163,927	161,424	△2,502	△1.5
방위관계비	47,538	48,848	1,310	2.8
공공사업관계비	52,853	59,685	6,832	12.9
경제협력비	5,150	5,098	△52	△1.0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1,811	1,853	42	2.3
에너지대책비	8,496	9,642	1,146	13.5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0,539	10,507	△33	△0.3
기타경비	59,931	61,526	1,595	2.7
예비비	3,500	3,500	-	-
합계	926,115	958,823	32,708	3.5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13.12.24

〈참고 III-1〉 FY2014 부흥 특별회계예산의 개요

(단위: 억엔)

세 입	
부흥특별세	7,381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7,030
세의수입	660
부흥채	21,393
계	36,464
세 출	
재해구조관계경비	739
재해폐기물처리사업비	236
부흥관계공공사업 등	9,163
재해관련금융지원관계경비	221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5,723
동일본대지진재해 부흥 교부금	3,638
원자력재해 부흥 관계경비	6,523
기타 동일본대지진재해 관계경비	3,299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로의 전입	921
부흥가속화·후쿠시마재생 예비비	6,000
계	36,464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予算政府案」, 2013.12.24

〈참고 Ⅲ-2〉 FY2013 1차 추경예산

-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시행에 필요한 약 5.5조엔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2013.12.12)
 -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1조 3,980억엔, 취약계층 고용 증진 3,005억엔 등 총 5조 4,654억엔 규모의 정책적 지원 예정
 - 재정재원은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당해 연도 세수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진피해 복구 및 신규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
 - 이러한 추경예산을 통해 향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약 2조엔 규모의 수요 감소 충격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FY2013 1차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세출		세입	
내역	금액	내역	금액
1. 경쟁력강화방안 관련경비	13,980	1. 세수	22,580
2.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경비(취약계층 고용 증진)	3,005	2. 세외수입	3,659
3. 방재안전대책 관련경비	11,958	3. 채권금	-
4. 저소득층 지원 경비	6,493	4. 전년도 잉여금 수입	9,108
5. 지방교부세교부금	11,608		
6. 기타 비용	3,636		
7. 기본경비 감액	△15,334		
8.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로 전입	19,308	5. 전년도 잉여금 수입(부흥재원)	19,273
		6. 세외수입(부흥재원)	35
합계	54,654	합계	54,654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권금의 경우 건설국채를 증액시키고 적자 국채를 감액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補正予算案」, 2013.12.12

〈참고 Ⅲ-3〉 중기재정계획(내각부, 2013.8.8)

- (기본방침) 향후 10년(FY2013~FY2022) 평균 명목 GDP 3%, 실질 GDP 2%를 목표로 하며,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건전환의 선순환을 목표로 함
- 재정건전화 목표
 - 국가·지방의 기초재정수지에 대해 ① 2015년까지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반감, ② 2020년까지 흑자 전환, ③ 이후 GDP 대비 채무잔고의 안정적 인하를 목표로 함
- 2015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기본적인 노력
 - (국가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2014~2015년도 국가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매년 약 4조엔 개선
 - (국채발행액) 2014~2015년도 국채발행액은 전년도를 상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지방재정) 2014~2015년도 지방의 일반재원 총액은 2013년도 지방재정계획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확보
 - 세입·세출 측면 노력
 - 세출 면에서는 매년도 우선과제 중점화를 도모하고, 세입 면에서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세제의 기본자세를 검토
- 2020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각 년도 예산의 세출 측면에서 기초재정수지대상 경비를 억제하고 경제성장에 의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대상 경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세입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GDP 대비 세수증대를 도모
 - 사회보장의 증가에 대해서는 세제개혁을 포함한 세출·세입 측면의 노력을 통해 재원확보 검토

〈국가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목표〉

(단위: 조엔)

	2013	2014	2015
국가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목표	△23	△19	△215

자료: 내각부, 「当面の財政健全化に向けた取組等について－中期財政計画－」, 2013.8.8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 2014년도 예산의 중점 정책²⁶⁾

- 2014년도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미래로의 투자 및 안전·안심 확보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과제를 중점화
 - 첨단기술, 제품제조
 - 신형기간로켓개발 등(JAXA운영비교부금사업): 333억엔
 - 차세대형 산업용 3D프린터 개발: 40억엔
 - 차세대형 슈퍼컴퓨터 개발: 12억엔
 - 교육, 의료
 - 슈퍼글로벌대학사업: 99억엔
 - 대학 등 장학금사업 총실: 676억엔
 - 일본판 NIH 창설: 184억엔
 - 농업경쟁력
 - 농지중간관리기구 정비: 305억엔
 - 신규농가·경영승계 종합지원 사업: 218억엔
 - 생활 안전·안심
 -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체제 강화: 36억엔
 - 방재·안전 교부금: 1,285억엔
 - 해상보안체제 강화: 103억엔
 -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은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로서 요청된 3.5조엔을 포함

26) FY2014 정부 예산안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나. 재정건전화

1) 세출 분야의 효율화²⁷⁾

- 일본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실현을 위해 주요 세출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 사회보장
 - 자연증가를 포함한 합리화·효율화에 노력
 - 진료보수 개정에서의 약값은 약값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세에 반영, 국민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한도에서 지역의료보조금을 창설하고 의료공제체제 개혁을 추진
 - 지방교부세
 - 지방세수 증가를 반영하고, 리먼브라더스 쇼크 후 위기 대응으로 별도 가산된 40% 감축(1.0조엔→0.6조엔) 등에 의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감액(16.4조엔→16.1조엔)
 - 쌀보조금
 - 모든 농가의 판매부족 보충을 위해 일률적으로 조성된 ‘쌀직접지불교부금’은 농업의 구조개혁에 역행하므로, 2014년도부터 조성단가를 1.5만엔/10a에서 7,500엔/10a로 삭감, 2018년도에 폐지
 - 201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반감(△806억엔)
 - 의무교육 국고보조금, 장학금 재검토
 - 공립 초등·중학교 교직원 수의 기존 정원을 합리적으로 감축(△713명)하는 한편, 왕따 문제 등 개별 과제에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가(703명)시키는 등 정원 배치 개선을 추진
 - 무이자 장학금에 대해 대출 인원을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세대 대출을 중점화하기 위한 가계기준을 엄격히 함(연수입 907만엔→853만엔)
 - 효율적인 사회자본 정비
 - 장래 인구감소 및 독립법인개혁 방침을 바탕으로 뉴타운 정비 사업을 폐지하는

27) FY2013 정부 예산안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방향으로 대폭 감축하고 예산절감(전년 대비 △148억엔)

- 대도시권 순환도로 등 정비비용은 공용효과 조기 발현을 위해 약 3년 이내 공용 가능한 부분 전용으로 중점화, 2년 이상 사업추진경비 삭감(△86억엔)
- 방위장비품 조달 개혁
 -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3.12.17 각의결정)’의 조달개혁을 통한 효율화·합리화를 철저히 한 방위력 정비노력정책 포함
 - 계획 초년도인 2014년도부터 유지정비방법 재검토, 장비 구입, 민간용품 활용, 사양의 재검토를 통해 장비 등 조달개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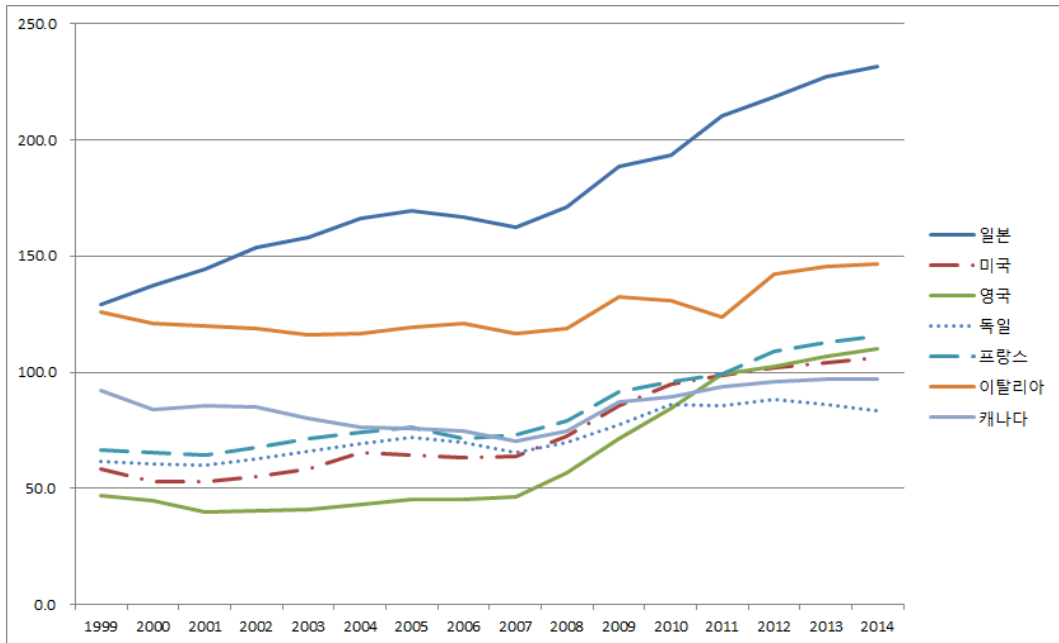
2) 「FY2014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건의 - 재정건전화의 기본방침」²⁸⁾

- (재정 현황)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지속적인 재정지출에 의해 부채 잔고가 누증
 - 2012년 말 GDP 대비 정부부채는 219%로 주요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을 기록, 역사적으로 봐도 태평양 전쟁 말기를 넘어선 수준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
 - 구조적인 부채증가의 주원인은 사회보장관계비 지출 및 지방으로의 재정이전(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이 정책비용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 또한, 특례공채잔고가 건설공채잔고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세대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28) 본 내용은 2013년 11월 29일 재무성 재정제도분과회의 「平成26年度予算の編成等に関する建議」 중 재정건전화 관련 부분인 'Part 1. 총론'을 요약함

[그림 III-1]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주: 일반정부 기준이며, 일본의 경우 FY2014 예산안 내용이 미반영된 수치임
 자료: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 2013.12.24
 OECD, *Economic Outlook 94*, 2013.11

□ 재정건전화의 기본방침

○ 재정건전화 목표

- 정부는 국가·지방의 기초재정수지에 대해 ① 2015년까지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반감, ② 2020년까지 흑자전환, ③ 이후 GDP 대비 채무잔고의 안정적 인하를 목표

○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에 따른 소비세율 인상 판단과 경제정책 패키지

- 사회보장의 안정재원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모두 목표로 한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소비세율 10% 인상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
- 2013년도 추경예산 재원인 잉여금 및 세수 증가분 등은 본래 국채상환 및 발행 감액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예산 편성 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시행할 필요

-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 2014년도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수지 개선을 실시하는 첫 번째 예산편성으로, 2015년도 적자반감 목표 및 2020년도 흑자전환 목표달성을 위한 시초
 - 소비세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 예산이 증가하면 정부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예산 편성에 임하고 세출 삭감에 노력해야 함
 - 2020년도 흑자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고, 세출 삭감과 세입 확보에 따른 향후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

〈참고 Ⅲ-4〉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에 의한 사회보장 안정재원 확보

-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에 의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포함한 소비세수(국가·지방, 현행 지방소비세수 제외)는 모두 사회보장재원화함
- 2014년도 소비세수 증가분 5.0조엔은 전부 사회보장 충실 안정화에 사용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의 50% 인상에 대해 약 2.95조엔 증당
 - 사회보장 충실(공비 0.5조엔, 국비 0.22조엔) 및 사회보장 4경비(공비 0.23조엔, 국비 0.15조엔)에 사용(차액(약 1.3조엔)은 후대에 부담 경감에 사용)
- 이번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사회보장 4경비와 소비세수(국가·지방, 현행 지방소비세수 제외) 차액은 22.1조엔에서 20.8조엔으로 축소됨

〈사회보장 4경비와 기타 경비에 관한 세출·세입〉

(단위: 조엔)

사회보장 4경비			
세출		세입	
사회보장 4경비 ¹⁾	26.9	소비세수(교부세 제외)	11.9
연금 ²⁾	11.4		
의료	10.9	공채금	15.0
개호	2.8	※사회보장 4경비와 소비세수 차액을 모두 공	
어린이·육아지원	1.9	채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기타			
세출		세입	
사회보장 4경비 이외	46.0	소비세수(교부세 제외)이외 세수	38.1
국채비 ²⁾	23.0	기타 수입	4.6
		공채금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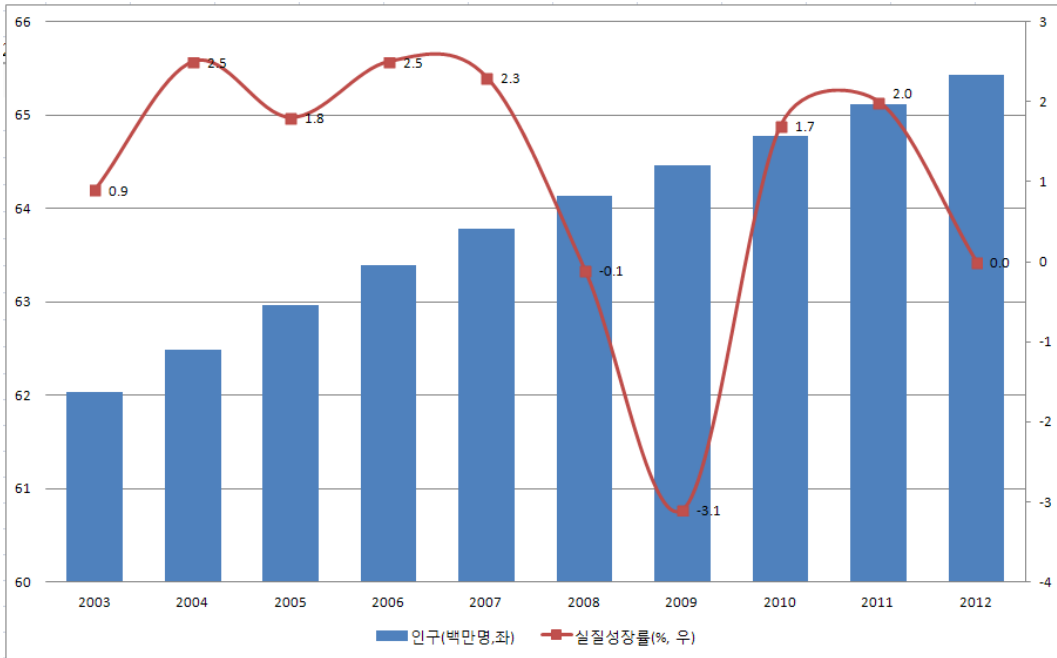
주: 1) 사회보장 4경비는 제도로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개호의 사회보장혜택 및 저출산 대처를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경비
 2) 세출에서의 연금에는 연금특례공채 관련 상환비 등 0.3조엔이 포함되어 국채비에서 동일한 금액을 차감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3.12.24

IV. 프랑스

- FY2014: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FY2014 예산편성일지
 - 2013. 03. 08 FY2014 예산편성지침 발표
 - 2013. 04. 17 2013-2017 안정화 프로그램 발표
 - 2013. 09. 11 FY2014 예산가이드라인 발표
 - 2013. 09. 25 FY2014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발표
 - 2013. 12. 19 FY2014 예산법안 의회 통과
- 출처
 - 2014년 예산법안(PLF 2014: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4)
 - 2014년 예산안 관련 자료(프랑스 정부 발표)
 - Cap sur la croissance et l'emploi, l'essentiel&chiffres clés 등
 - 2012-2017 중장기 예산법안(LPFP 2012 a 2017: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2 a 2017)
 - 2013-2017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national de réforme)
 - 2014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LFSS 2014: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환율: 1유로 = 약 1453.56원(2013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2년 경상 GDP 2조 4,166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2년 기준 57.1%(우리나라는 109.9%)
- 인구: 약 6,543만명(2012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4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1.2%보다 하향 조정된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5년 1.7%, 2016-2017년에는 2.0%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
- (재정전망) 재정적자가 2013년 GDP 대비 4.1%에서 2014년 3.6%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는 9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 지속적인 공공재정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이 목표
 - 재정적자(GDP 대비 %): (2012)4.8 → (2013)4.1 → (2014)3.6 → (2015)2.8
-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4년 재정수입은 2,985억유로로, 이 중 조세수입은 2,847억유로, 세외수입은 138억유로로 전망
- (세출) 2014년 재정지출은 3,799억유로(미래투자프로그램 제외시 3,689억유로)로, 경제, R&D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언론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

◇ 주요 재정정책

- (복지지출 관리) 201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목표를 전년 대비 34억유로 감소한 128억유로로 설정
- (재정건전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4년 180억유로의 긴축정책 실시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미래투자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연구개발, 에너지 전환, 기업혁신 등 8개 전략분야에 총 120억유로 투자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3.03.08	FY2014 예산편성지침 발표	2013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3.04.02	FY2012 재정집계결과 발표	
2013.04.09	FY2012 사회보장예산 집행결과 발표	
2013.04.17	2013-2017 안정화 프로그램 발표	
2013.05.29	FY2012 결산보고서 발표	
2013.06.03	가족정책 개편 발표	
2013.07.17	공공정책의 현대화 조치 발표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3.08.27	연금개혁안 발표	
2013.09.11	FY2014 예산 가이드라인 발표	
2013.09.25	FY2014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발표	
2013.11.12	FY2013 수정예산법안 발표	
2013.12.03	FY2014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의회 통과	
2013.12.19	FY2014 예산법안 의회 통과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최근 프랑스 경제는 점진적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 경제성장률은 0.1%, 2014년은 0.9%로 전망되어 당초 전망인 1.2%보다 하향 조정됨
 - (경제성장률) 2014년 0.9%, 2015년 1.7%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2016-2017에는 2.0%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소비) 2012년 마이너스였던 소비는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13년 0.3%, 2014년 0.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기업투자) 2014년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2013년 도입된 경쟁력·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complément du crédit d'impôt compétitivité emploi)제도가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였던 기업투자는 전년 대비 3.7%p 상승한 1.5%로 전망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1.3%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무역)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2%p 이상 상승하여 수출은 3.5%, 수입은 3.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0.0	0.1	0.9
가계소비	-0.4	0.3	0.8
기업투자	-2.1	-2.2	1.5
수출	2.4	1.2	3.5
수입	-1.1	1.0	3.0
소비자물가지수	2.0	0.9	1.3

자료: Le Budget 2014, l'essentiel&chiffres clés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지출) 2014년 재정지출은 2013년 대비 1.8% 증가한 3,799억유로로 전망
 - 미래투자프로그램(PIA: 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²⁹⁾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면 2014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4억유로(1.2%) 감소한 3,689억유로 수준
- (수입) 2014년 재정수입은 2013년 대비 1.1% 감소한 2,985억유로로 전망
 - 2014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32억유로 감소한 2,847억유로, 세외수입은 138억유로로 전망
 - 중기재정예산법(LPFP: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2012–2017에서의 2014년 조세수입은 3,094억유로, 세외수입은 147억유로였으나, 2014년 예산법안에서는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중기재정예산법에 비해 감소한 모습을 보임

〈표 IV-2〉 프랑스 FY2014 재정전망

(단위: 십억유로)

	결산 2012	초기예산법 2013	2014 예산법안		
			2013	2014 (PIA ¹⁾ 제외)	2014
재정지출	370.7	374.6	373.3	368.9	379.9
재정수입	282.5	312.8	301.8	298.5	298.5
조세세입	268.4	298.6	287.9	284.7	284.7
세외수입	14.1	14.2	13.9	13.8	13.8
특별계정	1.0	0.3	-0.3	0.2	-0.8
재정수지	-87.2	-61.5	-71.9	-70.2	-82.2

주: 1) PIA: 미래투자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

자료: PLF 2014

29) 미래투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을 참고

2) 재정수지

- 2014년 프랑스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재정수지가 GDP 대비 3.6%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2년에 비해 0.7%p 하락한 4.1%로 전망되며, 2014년은 2013년 전망 대비 0.5%p 하락한 3.6%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2013년 재정적자의 감소는 큰 폭으로 상승한 구조적 재정수지(GDP 대비 3.9%→2.6%)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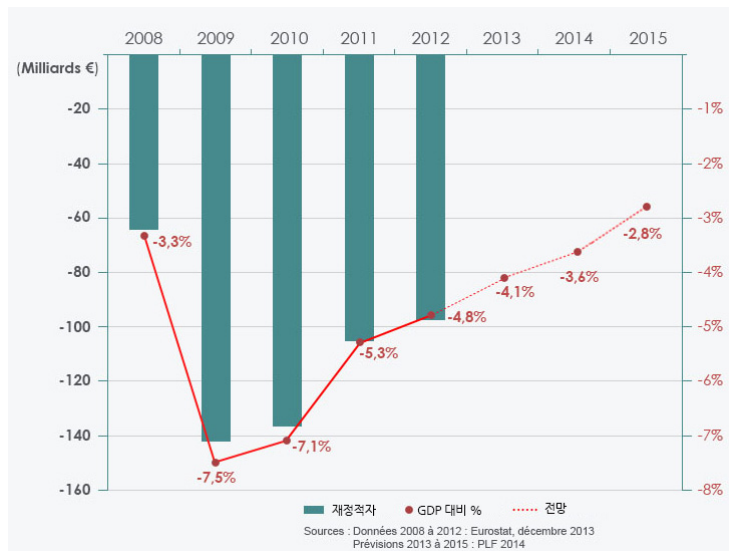
〈표 IV-3〉 FY2014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2 결산	2013 전망	2014 전망
구조적 재정수지	-3.9	-2.6	-1.7
재정수지	-4.8	-4.1	-3.6

자료: PLF 2014

[그림 IV-1] 재정적자 변화 추이



자료: 프랑스 정부 포털, 2014.1.31

- 2012-2017 중기재정예산법(LPFP)에서 제시한 2014년 재정수지 및 구조적 재정수지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GDP 대비 적자가 높은 수준
 - 그러나 중기재정과 예산법안에서의 재정수지 갭은 구조적 재정수지의 강도 높은 감축 노력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표 IV-4〉 2012~2017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적 재정수지	-3.6	-1.6	-1.1	-0.5	0.0	0.0
재정수지	-4.5	-3.0	-2.2	-1.6	-0.6	-0.3

자료: LPFP 2012-2017

3) 국가채무 비율

- 2013년 GDP 대비 9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비율(유로존 재정위기 국가지원 효과 포함)은 2014년 95.1%까지 상승한 후 2015년부터 약 2%p씩 감소하여 2017년 91.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기재정예산법(LPFP) 2012-2017에서 국가채무는 2017년에 2012년 대비 7%p 감소한 GDP 대비 82.9%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 그러나 2013-2014년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2014 예산법안에서는 중기재정 대비 4~5%p 높은 국가채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IV-5〉 2012-2017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 추이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LFPF 2012-2017 (2012.12)	국가채무	89.9	91.3	90.5	88.5	85.8	82.9
	국가채무 ¹⁾	87.4	88.4	87.3	85.4	82.9	80.1
안정화보고서 2013-2017 (2013.4)	국가채무	90.2	93.6	94.3	92.9	90.7	88.2
	국가채무 ¹⁾	87.8	90.6	91.1	89.8	87.8	85.3
2014 예산법안 (2013.9)	국가채무	90.2	93.4	95.1	94.7	93.1	91.0
	국가채무 ¹⁾	87.8	90.4	91.8	91.6	90.0	88.8

주: 1) 유로존 재정지원 제외

자료: *Le Budget 2014, l'essentiel&chiffres clés*

LFPF 2012 - 2017

2. 예산기조

- 지속적인 공공재정 회복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함
 - 재정적자 감축
 - 재정적자는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GDP 대비 3.6%, 2015년에는 3% 이하로 줄어듦 전망
 - 재정적자(GDP 대비 %): (2012)4.8 → (2013)4.1 → (2014)3.6 → (2015)2.8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4년 180억유로의 긴축재정정책 실시 계획
 - 일반예산부문에서 90억유로, 사회보장예산부문에서 60억유로 감축
 - 세입확충 30억유로
 - 기확정된 부가가치세 인상 및 탈세근절노력 강화를 통한 세입확충만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증세는 없음
-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
 -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담 경감,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가계의 구매력 강화 등에 중점
 - 정부는 고용, 청년, 주택, 구매력 강화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

- (청년고용) 2014년 말까지 16-25세 청년을 위한 15만개 일자리 창출 및 10만개 세대간 계약(le contract de generation)³⁰⁾을 위해 17억유로 재정투입
- (교육) 2013년 대비 학교 교육에 6억유로 증액
 - 교육분야 지원을 위한 8,984개의 일자리 창출 및 영유아 및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만개의 추가 인력 투입
- (구매력 강화) 2013년 대비 3억 3천만유로의 추가 재정투입으로 고용확대에 따른 구매력 강화에 주력

3. 예산안 내용

- 2013년 9월 25일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2014 회계연도('14.1월~'14.12월) 예산안이 발표되었고 12월 19일 의회 통과

가. 세입내역

- 2014년 재정수입은 2,985억유로로 2013년 수정예산 대비 33억유로(1.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조세세입은 2,847억유로로 전년 대비 32억유로(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세 48.9%, 소득세 26.4%, 법인세 12.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소득세는 전년 대비 8.7% 증가, 법인세는 전년 대비 약 27.2% 감소,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입확충(30억유로): 부가가치세율 인상(2014.1월부터 19.6%→20.0%), 연금기여율 인상(2014년 0.15%인상), 탈세·조세회피 근절 등
 - 세외수입은 2013년 수정예산 대비 1억유로 감소한 138억유로로 전망

30) 세대간 계약: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장년층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저숙련 청년을 고용하고 오래 근무한 senior가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청-장년 간 멘토링제

〈표 IV-6〉 FY2014 세입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3	2013-2017 안정화 프로그램	2013 수정	2014
I. 재정수입	312.8	304.3	301.8	298.5
II. 조세수입	298.6	290.4	287.9	284.7
소득세	71.9	70.8	69.3	75.3
법인세	53.5	51.4	49.7	36.2
에너지제품소비세	13.7	13.3	13.7	13.4
부가가치세	141.2	136.7	135.6	139.3
기타 세입	18.3	18.1	19.6	20.4
III. 세외수입	14.2	13.9	13.9	13.8

자료: PLF 2014

나. 세출내역

- 2014년 재정지출은 3,799억유로로 2013년 수정전망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미래투자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2% 감소
 - 경제, R&D 및 고등교육,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언론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분야: 에너지전환(transition écologique)에 23억유로 투자(미래투자프로그램), 핵안전 강화 및 재해예방 등 전년 대비 18.2% 증액
 - 경제분야: 산업 및 디지털경제 혁신(미래투자프로그램) 등을 위한 증액을 제외하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전년 대비 7,300만유로 감액
 - 언론분야: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1%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15.5%(1억 5천만유로) 감액
 - R&D 및 고등교육: 대학 내 1,000개 일자리 창출, 학생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장학금 확대에 1억 5,800만유로 투자, 미래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에 22억유로 재정투입 등 전년 대비 21.3% 증가
 - 체육 및 건강, 청소년분야: 정부의 우선투자 분야로 청소년에 대한 미래투자 확대,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관련 교육 강화 등에 전년 대비 1억유로 (19.1%) 증가

- 노동 및 고용분야: 2013년에 이어 세대간 계약 등 2014년 말까지 15만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 유지, 중장년층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8.2% 증액

〈표 IV-7〉 2014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30 Missions	2013 본(수정) 예산(A)	2014 예산법안 (B)	2014 예산법안 (PIA 제외)	B-A (%)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3	2.80	2.80	-1.1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1.98	2.12	2.12	7.1
농업, 임업, 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10	2.94	2.94	-5.2
공공보조 - 저소득층 지원, 외국인 이민자 지원 감소(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3.10	2.92	2.92	-5.8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3.06	2.95	2.95	-3.6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49	0.49	0.49	0.0
문화(Culture)	2.44	2.38	2.38	-2.5
국방(Défense)	30.12	31.12	29.62	3.3
국가정책방향 - 정책통합, 자유 및 권리보호, EU 내 프랑스 지위 확보(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15	1.27	1.12	10.4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7.70	9.10	7.16	18.2
경제-산업 및 기업지원(Economie)	1.80	3.41	1.73	89.4
주택 및 건설(Egalité des territoires, logement et ville)	7.75	7.84	7.84	1.2
교육(Enseignement scolaire)	45.69	46.42	46.27	1.6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관리 -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8.85	8.72	8.72	-1.5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67	0.66	0.66	-1.5

〈표 IV-7〉의 계속

30 Missions	2013 본(수정) 예산(A)	2014 예산법안 (B)	2014 예산법안 (PIA 제외)	B-A (%)
법무부(Justice)	6.28	6.29	6.29	0.2
언론(Me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97	0.82	0.82	-15.5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1.99	2.01	2.01	1.0
균형발전정책(Politique des territoires)	0.32	0.29	0.29	-9.4
R&D 및 고등교육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5.65	31.11	25.77	21.3
복지 및 은퇴자 지원 (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54	6.53	6.53	-0.2
지방재정 지원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74	2.59	2.59	-5.5
건강복지(Santé)	1.30	1.30	1.30	0.0
치안(Sécurité)	12.07	12.19	12.19	1.0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3.18	13.61	13.61	3.3
체육 및 건강, 청소년지원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47	0.56	0.46	19.1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0.12	10.95	10.80	8.2
정부재정관리-부채관리, 국채발행 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1.11	0.95	0.95	-14.4
예비비(Provisions)	0.03	0.16	0.16	433.3
의회, 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0.99	0.99	0.99	0.0
미선별 합계	204.5	215.5	204.5	5.4

주: *PIA(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 미래투자프로그램
 자료: PLF 2014

Le Budget 2014, l'essentiel&chiffres clés

〈참고 IV-1〉 프랑스 수정예산안 내용

- FY2013 수정예산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13)³¹⁾(2013. 11. 13)
 - (재정목표) 2013년 수정예산안의 재정적자 목표는 2014년 예산안의 2013 수정전망과 동일한 GDP 대비 4.1%로 유지하며 성장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
 - (재정수지) 2013년 수정예산안의 재정적자는 본예산 대비 104억유로 증가한 719억유로로 전망
 - (지출) 재정지출은 3,735억유로로 본예산 대비 11억유로 감축
 - (수입) 재정수입은 3,016억유로로 본예산 대비 112억유로 감소

〈표 IV-8〉 FY2013 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3 본예산 (A)	2014 예산안의 2013 수정전망 (B)	2013 수정예산안 (C)	C-B	C-A
총지출	374.6	373.3	373.5	0.2	-1.1
총수입	312.8	301.7	301.6	-0.1	-11.2
조세수입	298.6	287.9	287.8	-0.1	-10.9
세외수입	14.2	13.9	13.9	0.0	-0.3
특별회계	0.3	-0.3	0.0	0.3	-0.3
재정수지	-61.5	-71.9	-71.9	0.0	-10.4

자료: PLFR 2013

- (주요정책)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생명보험 도입, 혁신형 중소기업 투자촉진 위한 특별세액공제 시행,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31) 이번 발표된 수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보완법으로서 2013년 예산집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출의 개시 및 취소의 총집계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정부가 계획한 조세정책을 수정하고 추가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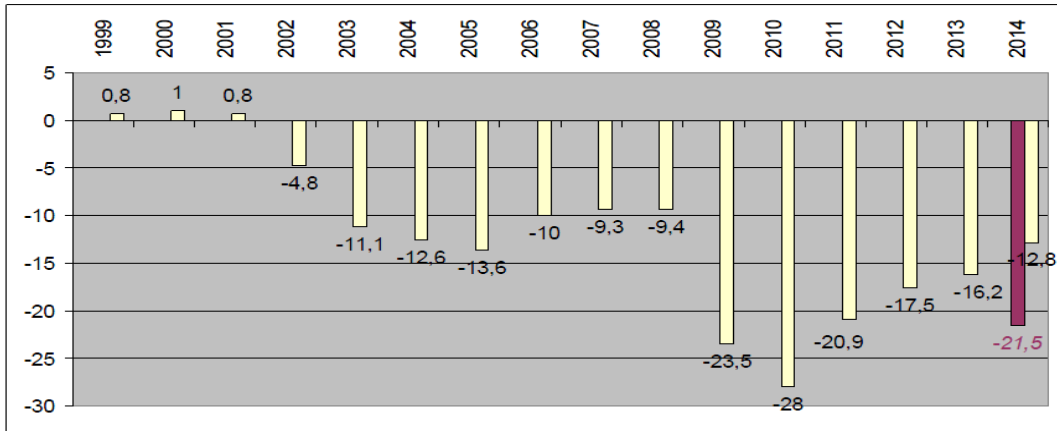
4. 주요 재정정책

가.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4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4)에서 2014년 재정적자 128억유로로 목표 설정
 - 201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128억유로로, 2012년(175억유로), 2013년(162억유로)에 비해 34억유로 감소할 전망
 - 재정적자 목표달성을 위해 87억유로의 추가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예산절감분은 사회보장지출 감축(40억유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양(20억유로), 새로운 수입원 확보(22억유로),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확보할 계획

[그림 IV-2]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추이 및 2014년 목표

(단위: 십억유로)



자료: LFSS 2014

□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및 2014년 목표
 ■ 적자감축 미시행시의 201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전망

- 사회보장부문 지출 감축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
 - 의료보험지출(ONDAM) 증가율 목표*를 2.4%로 낮추어 29억유로 절감
 - * 2002~2011년 연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은 4.2%
 - 연금수령액 재산정 시기를 매년 4월 1일에서 10월 1일로 조정함에 따라 8억 유로의 지출 감축

- 가족수당 개편 2억유로, 사회보장기금 관리효율화를 통한 5억유로 축소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 실시
- 2014년 이후에는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재정적자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며, 2017년에는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가 40억유로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

〈표 IV-9〉 사회보장부문 예산수지 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2 결산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보험(CNAM)	-5.9	-7.7	-6.2	-5.4	-4.0	-2.6
산재보험(AT/MP)	-0.2	+0.3	+0.1	+0.4	+0.6	+0.9
법정연금기금(CNAV)	-4.8	-3.3	-1.2	-0.6	0.0	+0.6
가족지원금(CNAF)	-2.5	-2.8	-2.3	-1.9	-1.6	-1.0
일반제도수지 (Total Regime general)	-13.3	-13.5	-9.6	-7.6	-4.9	-2.1
노령연대기금(FSV)	-4.1	-2.7	-3.2	-3.0	-2.6	-1.9
총액	-17.5	-16.2	-12.8	-10.6	-7.5	-4.0

자료: LFSS 2014

나. 재정건전화

- 2014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1%에서 3.6%로 감축하고 2015년에는 목표인 GDP 대비 2.8%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강력한 긴축 시행
 - 2013년 300억유로 긴축(세입확충 200억유로, 세출감축 100억유로)에 이어 2014년에도 약 180억유로의 긴축 계획
 - 세출감축(148억유로): 일반예산(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90억유로, 사회보장예산 58억유로
 - 세입확충(30억유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연금기여율 인상, 탈세·조세회피 근절, 부유세 도입(2014~2015년)³²⁾ 등

32)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3.12월 직원들에게 100만유로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에서 소득세 50% 등 총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수정안에 합헌 결정하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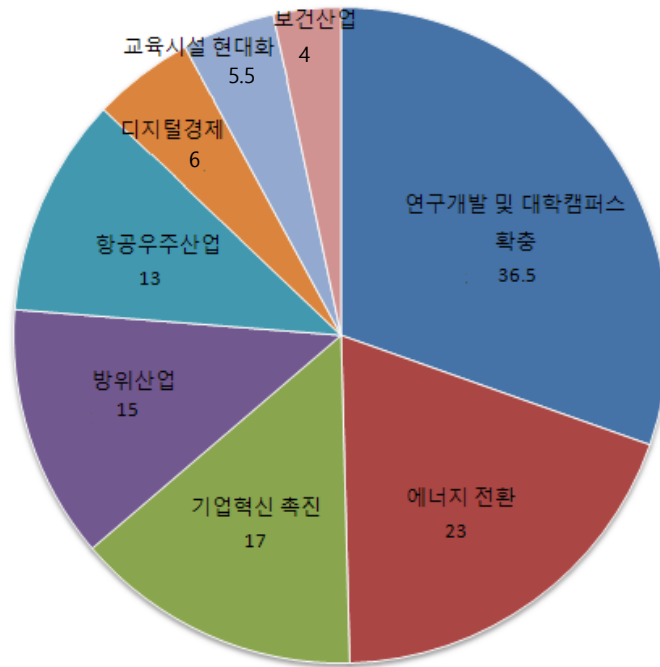
-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2015-2017년간 총 500억유로의 세출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지출 삭감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재정지출 축소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지출 전략위원회(Conseil stratégique de la dépense publique)를 설립
- 2014년 예산안에 포함된 지출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급여동결 및 운영비 삭감(26억유로): 2013년에 이어 부처의 운영비용을 5% 감축하고 공공부문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공공정책 현대화(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조치의 일환으로 지출 삭감
 - 금융지원 규모 조정(33억유로): 지방정부 및 EU에 대한 금융지원 재검토 및 통제를 통한 지출 조정
 - 투자의 효율화(26억유로):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에 대한 투자 연기 및 취소

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미래투자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
 - (배경) 프랑스 정부는 2013.7월 기술과 혁신을 촉진시켜 프랑스 경제 재건과 지식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프로그램인 미래투자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
 - (목적)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잠재성장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내용) 2025년까지 연구개발, 에너지 전환, 기업혁신, 항공우주분야 등 8개 전략분야에 총 12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중점투자분야: 연구개발 및 대학캠퍼스 확충(36.5억유로), 에너지 전환(23억유로), 기업혁신 촉진(17억유로), 방위산업(15억유로), 항공우주산업(13억유로), 디지털경제(6억유로), 교육시설 현대화(5.5억유로), 보건산업(4억유로) 등

[그림 IV-3] 미래투자프로그램 투자 내역

(단위: 억유로)



자료: PLF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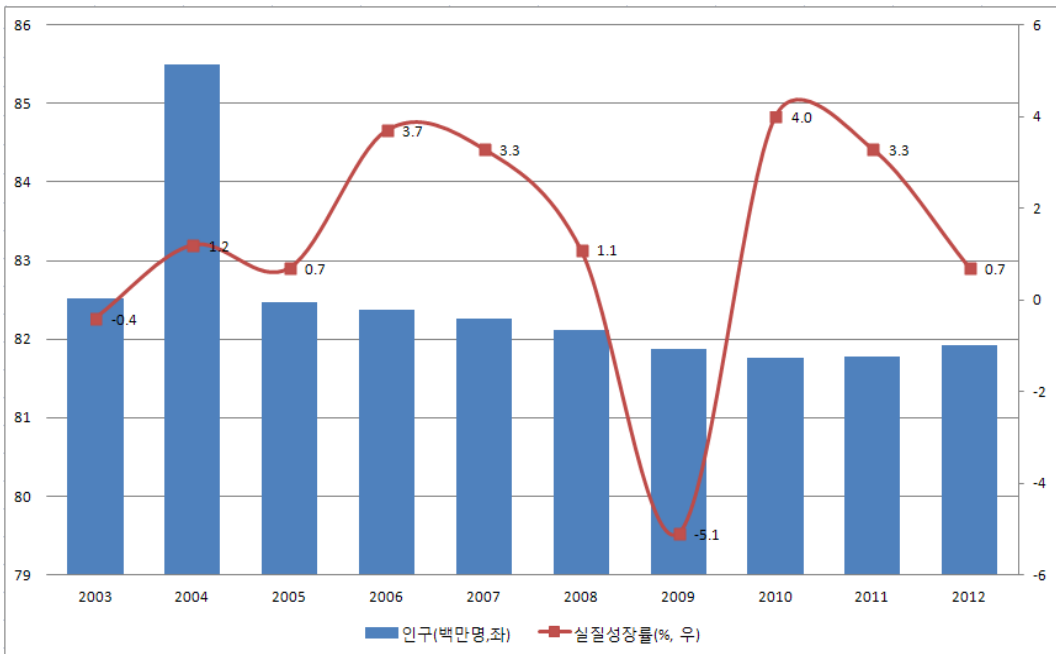
V. 독일

- FY2013: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FY2014 예산편성 일지
 - (2013.3.13) 2014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 (2013.6.26) 2014년 연방정부 예산안 및 2013-2017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통상 11월 중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확정예산이 발표되지만, FY2014 예산은 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의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 출처
 - 재무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14 und den Finanzplan bis 2017*
 - *Finanzplan des Bundes 2013 bis 2017*
 -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14*
 - 연방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http://www.bmbf.de/>)
 - 안정화 위원회: Stabilitätsrat (<http://www.stabilitaetsrat.de>)
 - 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http://www.bundesbank.de>)
 - 뮌헨대학 경제연구소: ifo Institut (<http://www.cesifo-group.de>)
 - 킬대학 세계경제연구소: IFW Institut (<http://www.ifw-kiel.de>)
 - 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http://www.destatis.de>)
 -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index_en.htm)
 - 국제통화기금: IMF (<http://www.imf.org>)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http://www.oecd.org>)
 - OECD 통계DB: OECD Statistics (<http://www.oecd.org/statistics>)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 환율: 1유로 = 약 1453.56원 (2013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3년 경상 GDP 3조 4,342억달러(우리나라 2.3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3년 기준 95.0%(우리나라는 109.9%(2012년))

□ 인구: 약 8,206만명(2013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중앙은행 12월 발표 기준, 2014년 경제성장률은 1.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 실업률은 6.8%로 전망
- (재정전망) 중기재정계획상 201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 부채는 GDP 대비 77.5% 수준으로 전망

◇ 예산기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 (재정건전화) 2014년 구조적 균형재정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의 구조적 흑자 달성도 기대
- (성장)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 교육·연구분야에 2013년보다 4.5억유로 증가한 140억유로를, 인프라분야에 10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예산안 내용

- (수입)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2,892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신규 차입금은 62억유로를 목표로 함
- (지출) 총재정지출은 2,954억유로(GDP 대비 24.3%)로 전년 대비 4.7%(약 146억유로) 감소
 - (교육·연구) 교육·연구분야 강화정책을 반영, 2013년 대비 4.5억유로 증가한 140억유로를 편성
 - (환경) 에너지 및 기후기금 충당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0.6%(2억유로)의 높은 증가율로 편성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2013년 독일안정화프로그램 시행, 연방정부 지출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이하로 엄격히 제한
- (에너지정책) 2014년 6.5억유로의 충당금을 투입하는 등 기존 에너지정책의 유지를 위해 노력
- (성장친화적 환경 조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건설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고등교육협약, 교육품질협정, 첨단기술전략 등의 정책을 유지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3.01.15	FY2012 잠정결산 발표	2013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3.03.01	신(新)재정협약법안 재차 거부	
2013.03.13	FY2014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결의	
2013.04.17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3」 채택	
2013.04.22	FY2013 1사분기 집행결과 발표	
2013.05.28	안정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2013.06.13	FY2012 결산보고서 발표	
2013.06.25	FY2013 추가경정예산 결의	
2013.06.26	FY2014 예산안 및 2013-2017 중기재정계획안 결의	
2013.07.05	FY2013 추가경정예산 상원 통과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3.08.14	재무부, 정부 보조금 보고서 내각에 제출	
2013.08.28	독일 내각, ‘연방의 재정 상황 및 독일 경제에 관한 보고서’ 채택	
2013.10.22	독일 재무부, FY2013 3분기 예산 집행결과 발표	
2013.10.23	경제기술부, 독일 가을 경제전망(Herbstprojektion) 발표	
2013.11.07	재무부, 세수 전망 발표	
2013.12.05	제8차 안정화위원회 회의 개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FY2014 독일 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경제성장률) 2013년 경제성장률이 0.5% 내에 그친 것에 비해 2014년 경제성장률은 1.4~1.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IMF는 1.4%로 가장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였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1.7~1.9%로 전망하며 2013년 대비 크게 증가
 - 2014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2014년 GDP 성장률을 1.6%로 전망
 - (물가) 에너지가격 하락과 노동비용 감소로 인해 2014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 (실업률) 2014년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며 실업률 또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
 - 모든 기관이 독일 경제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실업률을 2013년 대비 하향 조정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표 V-1〉 기관별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GDP 성장률		CPI ¹⁾		실업률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중앙은행	0.5	1.7	1.6	1.3	6.9	6.8
ifo	0.4	1.9	1.5	1.5	6.9	6.8
IFW	0.4	1.7	1.5	1.7	6.9	6.9
EU 집행위원회	0.5	1.7	1.7	1.7	5.4	5.3
IMF	0.5	1.4	1.6	1.6	5.6	5.5
OECD	1.4	1.7	1.6	1.6	5.4	5.4

주: 1)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

출처: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zember*, 2013.12

ifo Institut, *ifo Konjunkturprognose 2013/2014*, 2013.12

IFW Institut, *Weltkonjunktur und Deutsche Konjunktur im Winter 2013*, 2013.1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3*, 2013.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2013.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3*, 2013.11

나. 재정전망

1) 중기재정계획 2013-2017

- 2014년 재정지출 규모는 2,954억유로이며 향후 2017년까지 1.2~1.6%의 소폭 증액을 계획하는 등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표방
 - (재정지출) 2014년 예산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954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2017년 안정적인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
 - 탄소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에너지 및 기후기금 수입감소가 예상되나, 매년 6.5억유로의 보조금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속될 전망
 - 2015년부터는 투자공제기금(ITF: Tilgung Investitions-und Tilgungsfonds)과 건설원조기금(Aufbauhilfefonds)에 대한 재정지출이 발생
 - (재정수입) 2014년 재정수입은 2,954억유로이며 2017년까지 세수 증액을 통해 3,171억유로까지 증가시킬 계획
 - 조세수입의 재정수입 대비 비율은 2013년 84%(2,606억유로)에서 2017년 95%

- (3,005억유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
- 세외수입의 재정수입 대비 비율은 2013년 7.8%(243억유로)에서 2017년 5.4%(172억유로) 수준으로 다소 감소할 계획
- (신규차입) 신규차입은 2014년 약 62억유로로 계획하였고, 2015년부터 신규차입액 0 달성을 목표로 함

〈표 V-2〉 중기재정계획(2013-2017)

(단위: 십억유로, %)

	2013 ¹⁾ (추정치)	2014 (정부안)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I. 재정지출	310.0 (1.1)	295.4 (△4.7)	299.6 (1.4)	308.3 (1.2)	317.7 (1.6)
ITF 제외시	-	-	299.4	303.1	308.1
II. 재정수입	310.0	295.4	299.6	308.3	317.7
조세수입	260.6	268.7	279.4	292.9	300.5
세외수입	24.3	20.5	20.2	15.4	17.2
신규차입	25.1	6.2	0	0	0

주: 1. ()는 전년 대비 %

1) 추경예산³³⁾ 포함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inanzplan des Bundes 2013 bis 2017*, 2013.8

2) 재정수지

- 재정상황의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국내외 주요 기관은 2014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0.1~0.4%로 낙관적으로 전망
 - 2014년 재무부는 연방정부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며, 많은 국내외 기관들 역시 독일정부가 2014년에 흑자재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반면, IMF는 2015년을 균형재정 달성 시점으로 보며, 2014년은 0.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

33) 추경예산 관련 내용은 후술되는 <참고 1> 참고

〈표 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무부	-0.5	0	0	0.5	0.5
ifo	0.1	0.2	0.3	-	-
IFW	0.3	0.4	0.7	-	-
EU	0.0	0.1	0.2	-	-
IMF	-0.4	-0.1	0.0	0.1	0.2
OECD	0.1	0.2	0.6	-	-

출처: Stabilitätsrat,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3*, 2013.4

ifo Institut, *ifo Konjunkturprognose 2013/2014*, 2013.12

IFW Institut, *Weltkonjunktur und Deutsche Konjunktur im Winter 2013*, 2013.1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3*, 2013.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2013.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3*, 2013.11

3) 부채

- 연방정부가 예상한 2013년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80.5%이며, 2014년에는 77.5%로 부채상황이 개선될 전망
 - 이러한 개선은 2017년까지 지속되며, 2017년 부채는 GDP 대비 69%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국내외 기관들 역시 2014년 연방정부의 부채비율을 전년도인 2013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IMF는 2014년 부채비율을 78.1%로 재무부에 비해 다소 높게 발표하였으나, 2017년까지 재정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표 V-4〉 기관별 연방정부 부채규모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무부	80.5	77.5	75	71.5	69
IFW	78.4	75.1	70.6		-
EU 집행위원회	79.6	77.1	74.1	-	-
IMF	80.4	78.1	75.2	71.9	69.8
OECD	86.1	83.4	80.9	-	-

출처: Stabilitätsrat,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3*, 2013.4IFW Institut, *Weltkonjunktur und Deutsche Konjunktur im Winter 2013*, 2013.12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3*, 2013.11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2013.10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3*, 2013.11

2. 예산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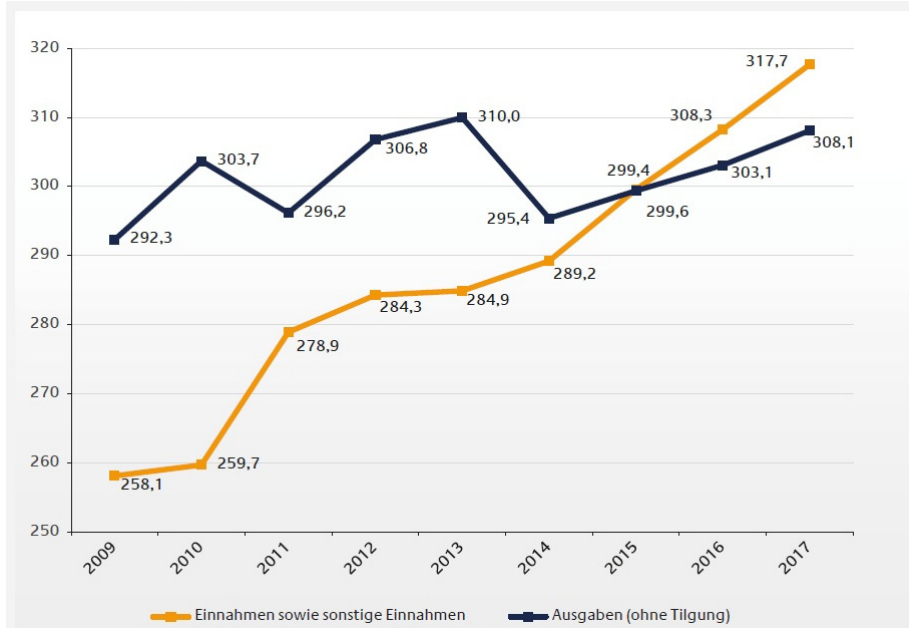
-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지출수준 안정화와 지속적인 적자 감축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성장 친화적인 경제 기반을 조성
 - (재정건전화) 구조적 균형재정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의 구조적 흑자 달성도 기대
 - 부채제한법(Schuldenregel)³⁴상 규정된 부채한도를 조기 달성³⁵하는 동시에 2014년 22억유로(GDP 대비 0.08%)의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 기대
 - 2014년 신규차입(NKA) 규모는 40년 전 수준인 62억유로까지 감소하며, 2015년에는 1969년 이래 처음으로 신규차입액 0 달성을 목표로 함
 - (성장)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 교육·연구분야에 2013년보다 4.5억유로 증가한 140억유로를, 인프라분야에 10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34) 연방의 신규 순채무 증가를 2016년부터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 증가는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

35) 2014년 1월 15일 FY2013 잠정결산 결과, 2013년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는 0.23% 적자로 잠정 집계되어 부채한도는 이미 달성한 것이 확실시 됨. FY2013 잠정결산은 후술하는 〈참고 2〉 참고

[그림 V-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갭 변화 추이

(단위: 십억유로)



출처: 재무부 미디어센터, 2013.6

〈참고 V-1〉 FY2013 잠정결산

- 재무부, FY2013 잠정결산 발표 (2014. 1.15)
 - 재정지출은 3,078억유로, 재정수입은 2,857억유로
 - 신규차입은 221억유로, GDP 대비 구조적 적자는 0.23%로 예측되며, 이는 부채제한법상의 0.35%보다 0.12%p 낮은 수치임

〈표 V-5〉 FY2013 잠정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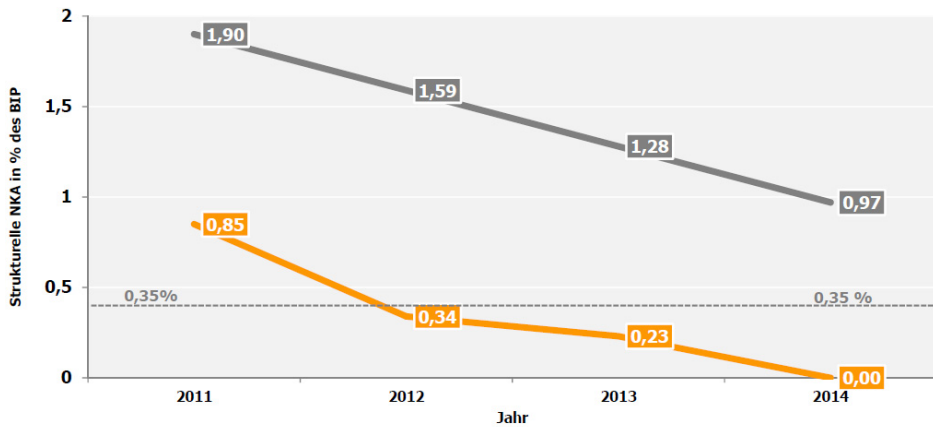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2013 ¹⁾ (목표치)	2013 잠정결산
재정지출	310.0	307.8
재정수입	284.9	285.7
조세수입	260.6	259.8
세외수입	24.3	25.9
신규차입	25.1	22.1

주: 1) 추경예산 포함

출처: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des Bundes für das Jahr 2013*

[그림 V-2] 구조적 재정적자 추이



— 2011 und 2012: Ist, 2013. vorl. Ist; 2014: Zielvorgabe
 — im Sommer 2010 festgelegter Abbaupfad

출처: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des Bundes für das Jahr 2013*

3. 예산안

가. 재정수입

- FY2014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수준인 2,954억유로
 - (조세수입) 2,687억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3.1%(81억유로) 높게 편성되었으며,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90.9%로 전년에 비해 6.9%p 증가
 - (세외수입) 205억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15.6%(38억유로) 감축되었으며,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년 7.8%에서 6.9%로 0.9%p 감소
 - (신규차입) 62억유로로 전년 대비 75.3%(189억유로) 감축할 계획이며,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3년 8%에서 2014년 2%로 크게 감소

〈표 V-6〉 재정수입의 항목별 규모

(단위: 십억유로, %)

	2013 ²⁾ (목표치)	2014 (정부안)	증감률 ³⁾
조세수입	260.6	268.7	3.1
비중 ¹⁾	84.0	90.9	
세외수입	24.3	20.5	△15.6
비중	7.8	6.9	
신규차입	25.1	6.2	△75.3
비중	8.0	2.0	
합계	310.0	295.4	△4.7

주: 1) 총재정수입 대비 비중

2) 추경예산 포함

3) 2013(목표) 대비 2014(정부안)의 증감률

출처: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14*

나. 재정지출

- FY2014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2,954억유로(GDP 대비 24.3%)로 전년 대비 4.7%(약 146억유로) 감소

〈표 V-7〉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추이

(단위: 십억유로, %)

부처	2013 ¹⁾ (목표)	2014(정부안)	증감률 ²⁾
대통령실	0.03	0.03	1.2
연방하원	0.73	0.75	2.3
연방상원	0.02	0.02	0.8
총리실	2.05	2.00	△2.6
외무부	3.49	3.49	0.0
내무부	5.85	5.77	△1.4
법무부	0.61	0.61	1.0
재무부	5.02	5.01	△0.1
경제기술부	6.12	6.11	△0.2
영양농업소비자보호부	5.27	5.26	△0.1
노동사회부	119.23	120.70	1.2
교통건설도시개발부	26.41	25.44	△3.7
국방부	33.26	32.84	△1.3
보건부	11.99	11.09	△7.5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1.64	1.82	10.6
가족노년여성청년부	6.88	7.63	10.8
헌법재판소	0.05	0.04	△13.0
회계감사원	0.13	0.14	2.4
경제협력발전부	6.30	6.28	△0.2
교육연구부	13.74	13.96	1.6
연방부채	32.98	30.37	△7.9
일반조세행정	28.20	16.03	△43.1
합계	310.00	295.40	△4.7

주: 1) 추정예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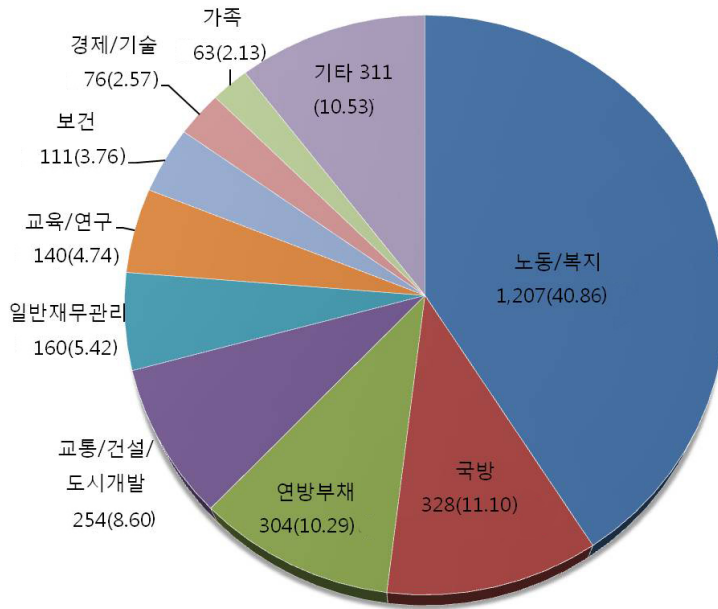
2) 2013(목표) 대비 2014(정부안)의 증감률

출처: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14*, 2013, 6

□ FY2014 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그림 V-3] 2014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억유로, %)



출처: 재무부 미디어센터, 2013.8.16

- (교육·연구) 교육·연구분야 강화정책을 반영, 2013년 대비 4.5억유로 증가한 140억유로를 편성
 - 고등교육협약 2020(Hochschulpakts 2020)³⁶⁾ 예산에 18억유로 배정
 - 연방교육지원법(BAföG)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재능장학금(die Begabtenförderung und das Deutschlandstipendium) 지원 확대
 - 연구혁신협정(Pakt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에 따른 연구기관 지원금 5% 증액
- (개발협력) 관련 지출은 경제협력발전부 예산(63억유로)을 통해 이루어짐
 - 북아프리카, 중동 및 시리아에 대한 ODA 규모 증가
 -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2.4억유로의 추가 자금 투입

36) 신입생 입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지출을 중점적으로 지원

- (내무) 전년 대비 1.4%(8천만 유로) 감액된 57억유로 편성
 - 정보기술 보안, 연방경찰 지원 등 국내안보와 관련된 지출(38억유로)이 대부분을 차지
 - 이민자 지원 정책에 3.9억유로, 난민 지원 정책에 6백만유로 배정
- (국방) 전년 대비 1.3%(4억유로) 감액된 328억유로의 예산이 편성
 -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독일 연방군이 철수함에 따라 인력비용 등 관련 비용 감소가 예상
- (환경) 18억유로로 전년 대비 10.6%(2억유로)의 높은 증가율로 편성
 - 증가분의 대부분은 에너지 기후기금(EKF; Energie-und Klimafonds)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지원 재원으로 활용
- (경제·기술) 경제기술부 예산으로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인 61억유로가 편성
 - 지역경제구조 개선사업(GRW)을 2013년과 동일한 수준(약 3천만유로)으로 높게 유지
 -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프로그램(ZIM; Zentralen Innovationsprogramms Mittelstand)을 통해 항공, 보안기술산업을 진흥
- (교통·건설) 254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54%(136억유로)가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³⁷⁾에 해당
 - 도로, 철도, 수로, 복합운송부문에 101억유로, 도시개발부문에 약 4.5억유로 투입
- (사회보장) 연금보험지출이 825억유로로 가장 큰 부분 차지
 -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조금은 105억유로로 전년 대비 35억유로 감소, 장기요양 보험에 2014년부터 매년 1억유로 편성
- (노동) 실업수당(ALG II; Arbeitslosengeld II) 예산으로 223억유로가 배정
 - 현재 실업보험요율인 3%를 유지할 경우 2017년 실업수당에 투입되는 예산은 225억유로로 예측
- (가족)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관련 예산은 63억유로
 - 보육수당(Betreuungsgeld)³⁸⁾을 현행 100유로에서 150유로로 증액함에 따라, 2013년 대비 5,500만유로 증가한 11억유로 배정

37)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

38)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육아보조금(Kindergeld)과는 달리 1~3세 자녀 중 유아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 부모수당(Elterngeld)³⁹⁾은 전년 대비 1.5억유로가 증액되어 52.5억유로 편성
- 아동학대피해자 지원에 2014년 1,250만유로 투입
- (영양·농업·소비자보호) 관련 분야의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약 53억유로 편성
 - 농업정책(Agrarsozialpolitik)부문에 36억유로가 집중 편성: 농업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 보조금으로 1억 2,500만유로,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GAK) 프로그램에 6억유로 배정
 - 소비자정책(Verbraucherpolitik)부문은 소비자정보 관련 프로젝트에 2,500만유로, 재생자원 연구개발에 6천만유로 투입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연방내각, 2013년 독일안정화프로그램(German Stability Programme)⁴⁰⁾을 통해 성장 지향적인 재정건전화 추구⁴¹⁾ (2013.4.17)
 - (재정정책 방향) 지출 효율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교육 및 연구, SOC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 동력 강화
 - (교육·연구) 2017년까지 추가적으로 120억유로의 재정을 투입, 특히 R&D분야 지출 목표를 GDP 대비 3%로 설정
 - (SOC) 2013년 신규 도입된 인프라구축프로그램을 유지, 연방교통시설 정비에 7억유로 추가 투자
 - (재정목표) 재정건전화의 노력으로 재정지표 개선을 이룸
 - 구조적 재정수지는 2017년까지 GDP 대비 0.5% 수준에서 흑자 유지

39) 출산 직후 휴직이나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그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국가에서 지원(최대 14개월, 월급의 65~100%)

40)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EU회원국들은 매년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EU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 제출

41) 자세한 내용은 2013년 5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 구조적 신규차입은 2014년 이후 0이하 유지를 목표로 삼음
- 국가부채는 2013년 GDP 대비 80.5%에서 2017년 69%으로 급격히 감소

〈표 V-8〉 2013년 독일안정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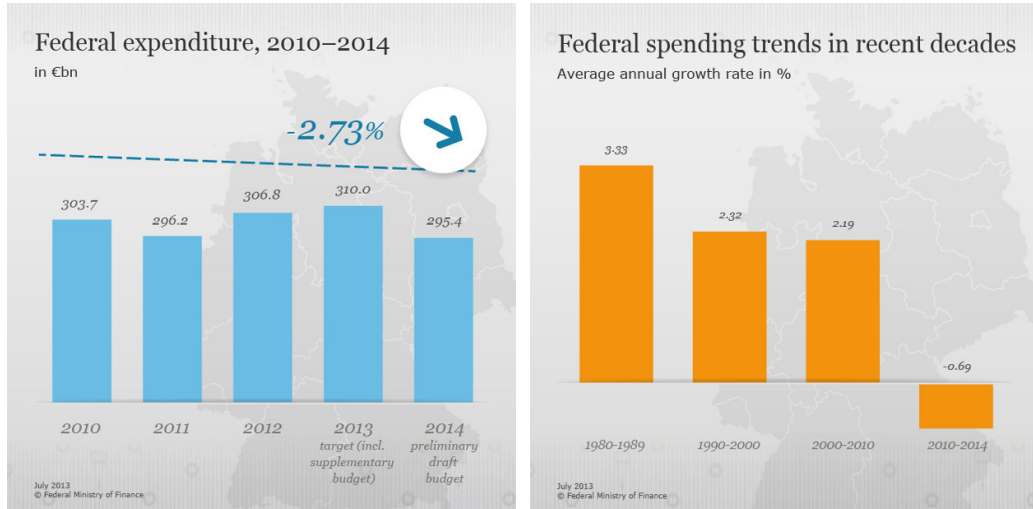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 성장률(%)	0.7	0.4	1.6	1.4	1.4	1.4
구조적 재정수지	0.4	0	0.5	0.5	0.5	0.5
재정수지	0.2	-0.5	0	0	0.5	0.5
구조적 신규차입	0.31	0.34	0	-0.06	-0.20	-0.31
국가부채	81.9	80.5	77.5	75	71.5	69

출처: 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13*

- 제7차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 회의에서 재정건전화의 중요성 재확인⁴²⁾(2013.5.28)
 -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에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엄격한 재정지출과 안정지향적 재정정책을 유지
 - 베를린 외 4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 증가를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하는 부채제한 규정은 준수
 - 2011년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주정부의 재정회복을 위한 재건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을 지속적으로 실행
- FY2014 연방정부 예산은 연방정부지출 증가속도를 GDP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재정지출을 엄격히 제한
 - 과거 GDP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보다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부채 증가를 야기. 2005-2009년 동안 300억유로의 지출증가(2,598 → 2,923억유로)
 - 2014년 예산안의 재정지출 목표는 2010년 대비 2.7%(83억유로) 낮은 수준인 2,954억유로, 지출목표를 달성할 경우 2010-14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0.69% 감소

42) 자세한 내용은 2013년 6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그림 V-4] 연방정부 재정지출 추이



출처: 재무부 미디어센터, 2013.7

나. 에너지정책의 변화

- 2011년 이후 에너지 및 기후기금(EKF; Energie- und Klimafonds)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지원을 강조하였지만, 기금수입 감소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 (수입) 2013년 예산 편성 시 EKF 수입⁴³⁾이 약 2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배출권가격이 급락하면서 당초 예산을 14억유로로 수정(참고 V-2)
 - 2014년 예산안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2013년 예산 대비 4억 7천만유로의 기금이 삭감

<표 V-9> 에너지 및 기후기금 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2012	2013	2014(정부안)	변화
기금	5.1	20.4	15.7	△4.7

출처: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13.6

43) 에너지 및 기후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원전연료세와 탄소배출권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나, 2011년 원전폐쇄 결의 후 탄소배출권 수익금으로만 운용

- 연방정부는 에너지 및 기후기금의 부족한 수입금을 충당을 위하여 2017년까지 총 25억유로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표 V-10〉 연방정부 EKF 재원투입 계획

(단위: 억유로)

	2014	2015	2016	2017
총당금	6.55	6.06	6.63	6.61

출처: 연방의회, 「EKF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2013.9

- (지출)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연구, 재생에너지원 및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사용
 - 주거건물 에너지 효율화(4.9억유로), 전기자동차 개발(2.4억유로), 에너지과다소비 산업에 대한 부담완화 조치(3.5억유로), 신재생에너지연구 지원(1.6억유로)
- 경제에너지부,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 Energien Gesetzes) 개정안 발표⁴⁴⁾ (2014.1.23)
 -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의 축소 및 변경
 - (보조금 삭감)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되고 있는 KW(킬로와트)당 평균 17유로센트의 보조금을 2015년 12유로센트로 축소
 - (태양력 및 풍력) 생산시설의 연간 신규설치 규모를 현행 3,500MW에서 2,500MW(메가와트)로 하향 조정
 - (바이오 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을 연간 100MW(메가와트)로 제한, 비용 효율적 기술에 대해 우대 조치 실시

44) 자세한 내용은 2014년 2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참고 V-2〉 2013년 에너지 및 기후기금 재정계획 수정

- 재무부, 2013년 에너지 및 기후기금(EKF; Energie-und Klimafonds) 재정계획 수정 (2013. 4.25)
 - (설립배경) 2011년 원전폐쇄 결의 후 미래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혁신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재생에너지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동 기금을 설립
 - (현황) 기금 대부분은 탄소배출권 수익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으나, 편성당시 톤당 10유로로 예측된 배출권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조정 필요
 - (수입) 당초예산 20억유로에서 14억유로로 수정. 이는 독일재건은행(KfW)이 지원하는 3억유로를 포함한 수치로, 당초예산에서 32% 감소한 규모
 - (지출)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재개발 등과 관련된 일부 프로그램은 KfW지원금에 의해 전액 지출되며, 그 외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규모 또한 큰 폭으로 감소

〈표 V-11〉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수정안

(단위: 백만유로, %)

	예산	수정예산		증감률 ¹⁾
		수정	KfW지원	
수입	2,047 ²⁾	1,083 ³⁾	311	△31.9
지출	2,047	1,083	311	△31.9
에너지효율화	260	0	248	△ 4.6
에너지재개발	18	0	13	△27.8
재생에너지, 국제공조	544	335	50	△29.2
기타	1,225	748	0	△38.9

주: 1) 예산 대비 수정예산의 증감률

2) CO₂톤당 10유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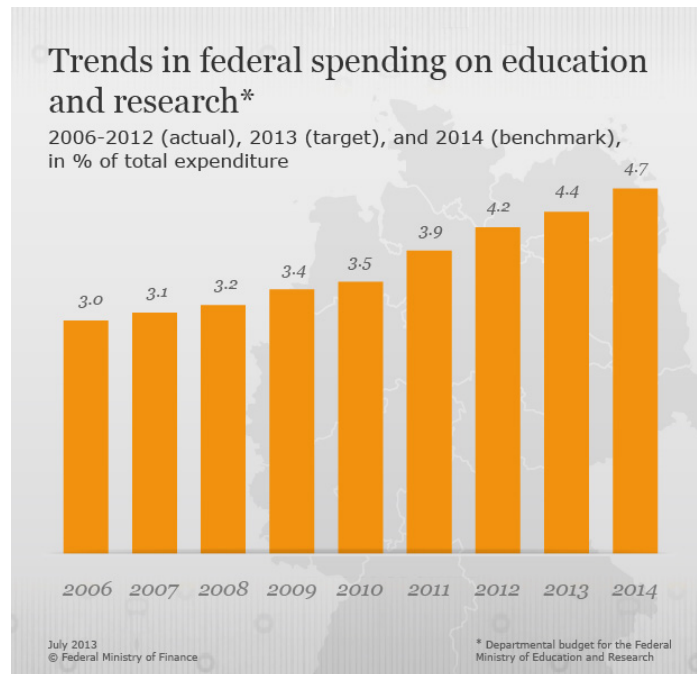
3) CO₂톤당 4.5유로 적용

자료: 재무부, Bericht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über die Tätigkeit des EKF 2012 und über die 2013 zu erwartende Einnahmen- und Ausgabenentwicklung, 2013. 4.25

다. 성장친화적 환경 조성⁴⁵⁾

- 2014년 독일 예산은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The strategy of growth-friendly consolidation)를 표방하며 교육, 연구, 인프라 건설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
 - 연방정부는 재정긴축적 예산기조로 부처별 예산 축소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구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액

[그림 V-5] 교육·연구분야의 지출 비중 추이



출처: 재무부 미디어센터, 2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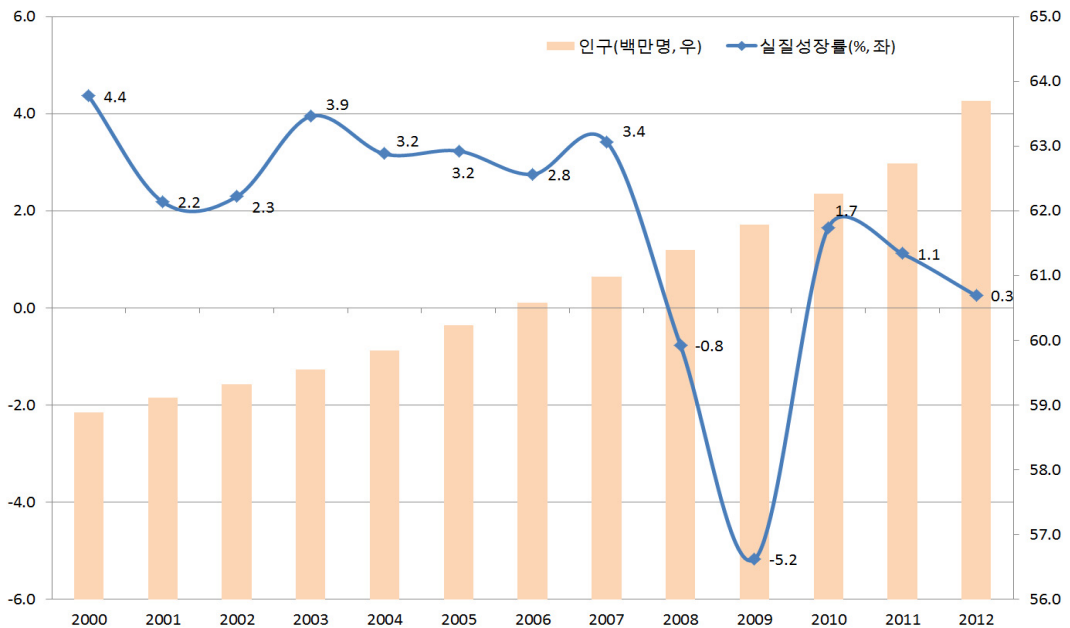
- 고등교육협약 2020(Hochschulpakts 2020)
 - 대학교육 이수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2007년 도입되어 2020년까지 시행되며 2014년은 18억유로가 배정
 - 1단계(2007-2010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한 대학신입생 증원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입학생을 확보하는 등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

45) 연방교육과학부(BMBF), 「정책설명 자료」, <http://www.bmbf.de/>

- 2단계(2011-2015년)는 대학생 수 급증에 따른 대학의 수용 능력 향상과 시스템 개선에 초점. 신입생 1명당 2만 6천유로(약 3,770만원)를 대학에 지원
- 교육품질 협정(Qualitätspakt Lehre)
 -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수·학생 비율 향상,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직원 자격 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
 - 2011-201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14년 예산으로 2억유로가 배정, 2013년의 경우 16개 주의 186개 대학이 지원 교육기관으로 선정됨
- 연구혁신협정(Pakt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1차(2005-2010)·2차(2011-2015)기간 동안, 신진 연구자 육성과 대형 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 2014년 예산은 5% 증액되었으며, 독일 4대 연구소(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쯔, 라이프니츠)와 연구재단 등 주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첨단기술전략 2020(Hightech-Strategie 2020)
 - 5대 기술개발분야(기후 및 에너지, 보건, 이동성, 보안, 정보통신)를 선정하여 주요 핵심 기술을 촉진하고 혁신 관련 제반여건을 개선
 - 2014년 예산은 21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책이 도입된 2009년에 비해 17% 증가한 금액

VI. 영 국

- FY2014-15: 2014년 4월 ~ 2015년 3월
-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5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2.5
- 환율: 1파운드 = 약 1,711.5원(2013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2년 경상 GDP 2조 2,724억달러(우리나라 약 1.5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2년 기준 65.2%(우리나라 109.9%)
- 인구: 6,371만명(2012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예상보다 급격한 민간소비 및 주거용 투자(Residential investment)의 성장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 2014년 2.4%로 3월 전망 대비 각각 0.8%p, 0.6%p씩 상향조정
- (재정수지) FY2014-15의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은 GDP 대비 4.9%로 전년 대비 1.1%p 감소
- (국가채무)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는 FY2014-15에 78.3%이며 전년 대비 2.8%p 증가

◇ 예산기조

- ① 장기경제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의 회복, ② 경제성장(Growth), 그리고 ③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4-15 경상세입은 GDP 대비 37.1%로 전년보다 0.1%p 상승
 - 3월 전망 대비 125억파운드 증가한 6,345억파운드로 예측되며, 세목별로는 특히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NICs), 법인세, VAT,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 환경세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짐
- (지출) FY2014-15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 대비 1%p 감소한 42.7%로 전망
 - 3월 전망 대비 1억파운드 증가한 7,305억파운드 규모로 예측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 FY2014-15에 1,050억파운드, FY2015-16에 1,28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전망
 - 정부조직의 슬림화 및 효율화를 통해 FY2014-15까지 200억파운드를 절감할 계획
 - 연금수급연령이 현재 65세에서 2020년부터 66세, 2040년대 후반까지 69세로 상향조정되어 향후 50년간 총 5,000억파운드의 연금지출 절감
 - 부처별 지출한도(DEL)를 FY2014-15 약 11억파운드, FY2015-16 약 10억파운드 감축할 계획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를 향후 5년 이내 달성할 것으로 설정
- (경제성장)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고용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3.02.13	추가경정예산	2013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3.03.20	Budget 2013	
2013.03.28	2013 재정법안(Finance Bill)	
2013.04.18	FY2013-14 본세출예산안	
2013.04.30	공공지출 통계 (Public Spending Statistics)	
2013.06.26	Spending Round 2013	
2013.07.17	FY2011-12 결산보고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1-12)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3.07.17	재정 지속가능 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3.10.31	공공지출 통계 (Public Spending Statistics)	
2013.12.04	국가 인프라 계획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3)	
2013.12.05	Autumn Statement 2013	
2013.12.05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전망보고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2013.12월 가을보고서에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 2014년은 2.4%로 2013.3월 예산안 전망 대비 각각 0.8%p, 0.6%p씩 상향조정
 - 이런 상향조정은 2013년 민간소비 및 주거용 투자(Residential investment)가 예상보다 급격히 성장한 것에 기인

〈표 VI-1〉 2013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단위: %)

	실적		전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안 (2013.03)	0.9	0.2	0.6	1.8	2.3	2.7	2.8	-
가을보고서 (2013.12)	-	0.1	1.4	2.4	2.2	2.6	2.7	2.7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3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 2013.12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4년 2.3%, 2015년 2.1%로 점차 감소하며, 2016년에는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원유가격이 2013년 3월 이후 약 10% 하락하고 최근의 공공요금 인상 발표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비자물가지수가 3월 전망 이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
- (실업) 실업률은 2014년 7.1%(3월 대비 0.9%p 감소), 2015년은 7.0%(3월 대비 0.9%p 감소)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 2018년에는 5.6%에 이를 전망으로 2013.3월 예산안 대비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됨
 - 이는 2013년 노동시장이 개선되어 고용이 기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990만명(3월 대비 10만명 증가)을 기록하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8년 3,120만명에 도달할 것을 반영

〈표 VI-2〉 영국 경제전망

(단위: %)

경제전망	실적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0.1	1.4	2.4	2.2	2.6	2.7	2.7
- 가계소비	1.2	1.9	1.9	1.7	2.4	2.8	2.8
- 정부소비	1.7	0.7	0.4	-0.5	-1.0	-1.8	-1.1
- 기업투자	2.6	-5.5	5.1	8.6	8.7	8.9	7.9
- 정부투자	4.6	-6.9	7.3	1.2	2.1	0.5	-1.1
- 순무역	-0.7	-0.2	0.0	0.1	0.0	0.0	-0.1
물가상승률(CPI)	2.8	2.6	2.3	2.1	2.0	2.0	2.0
실업률(ILO)	7.9	7.6	7.1	7.0	6.6	6.1	5.6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 2013.12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2

나. 재정전망

- (세입·세출) FY2014-15 경상세입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한 GDP 대비 37.1%이며, 총관리지출(TME)⁴⁶⁾은 FY2014-15에 전년 대비 1%p 감소한 GDP 대비 42.7%를 기록할 전망
 - 경상세입은 FY2014-15 GDP 대비 37.1%에서 FY2015-16 GDP 대비 37.4%로 약간 상승하며 FY2016-17 이후로는 38%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총관리지출(TME)은 FY2013-14 이후 계속 하락세로 매년 약 1%p씩 감소하여 FY2014-15 GDP 대비 42.7%, FY2015-16 GDP 대비 41.9%에서 FY2018-19에는 GDP 대비 38.2%까지 감소할 전망

46)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은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과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로 구성.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성격의 지출로 AME와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⁴⁷⁾은 FY2013-14에 GDP 대비 6.0%, FY2014-15는 GDP 대비 4.9%이며 이후 점점 감소하여 FY2018-19에는 GDP 대비 0.1%에 이를 전망
 - 한편, 공공부문 순차입(PSNB)은 전망기간 동안 3월 전망치 대비 매년 약 1%씩 감소하였으나 경기조정 순차입(Cyclically-adjusted net borrowing)의 전망치는 개선되지 않음
 - 이것은 공공부문 순차입(PSNB)의 개선이 영구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반영하며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경제성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의 기준지표인 경기조정 경상수지는 FY2014-15에 GDP 대비 Δ 2.7%인 적자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17-18에는 GDP 대비 0.7%의 흑자로 돌아설 전망
 -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망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하며 FY2016-17에 협약 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국가채무)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는 FY2014-15 78.3%이며, FY2015-16에 최고치인 GDP 대비 80.0%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FY2018-19에는 75.9%를 나타낼 전망
 - 2013.3월 예산안에서는 PSND가 FY2016-17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으나 가을보고서의 PSND는 그보다 1년 앞당겨진 FY2015-16에 정점에 이르러 PSND 목표를 조기 달성할 전망
 - PSND가 3월 대비 FY2014-15는 4.3%p 감소, FY2015-16에는 5.1%p 감소하는 등 2013.3월 예산안 대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명목 GDP와 순부채의 현금수준(cash level of net debt)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
 -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인 일반정부 총채무는 FY2014-15에 GDP 대비 93.1%이며, FY2015-16에 최고치인 94.7%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47) 통계청(ONS) 자료 기준

〈표 VI-3〉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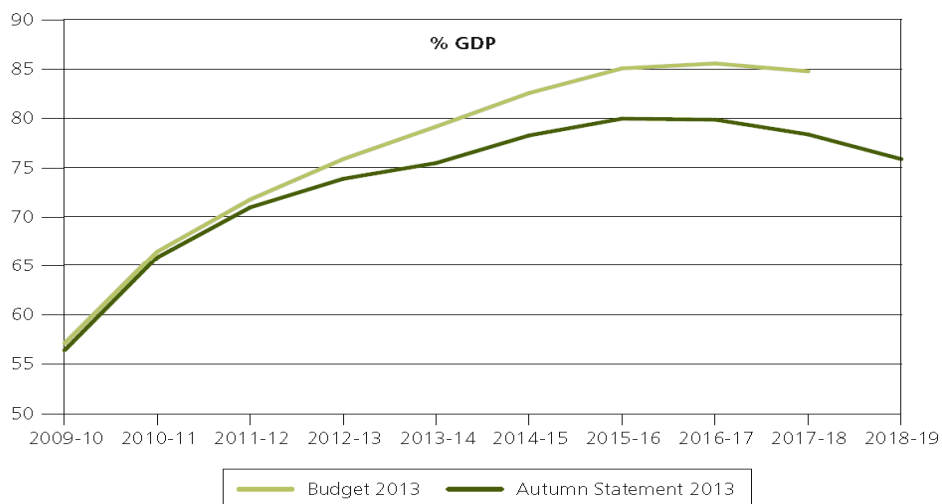
	실적	전망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경상세입(a)	37.4	37.0	37.1	37.4	38.0	38.2	38.3
총관리지출(TME)(b)	44.7	43.7	42.7	41.9	40.7	39.4	38.2
공공부문 경상지출(c)	41.9	40.8	39.6	38.9	37.8	36.6	35.6
공공부문 순투자(d)	1.4	1.5	1.6	1.5	1.5	1.4	1.3
감가상각(e)	1.4	1.4	1.4	1.4	1.4	1.4	1.4
경상수지(a-c-e)	-5.9	-5.3	-4.0	-2.9	-1.2	0.2	1.4
공공부문 순차입 ¹⁾ (b-a)	7.3	6.8	5.6	4.4	2.7	1.2	-0.1
공공부문 순차입 ²⁾	6.9	6.0	4.9	4.0	2.6	1.3	0.1
경기조정 경상수지	-4.1	-3.7	-2.7	-1.8	-0.4	0.7	1.6
경기조정 순차입	5.5	5.2	4.3	3.3	1.9	0.7	-0.3
기초수지	-4.7	-4.2	-2.9	-1.6	0.1	1.8	3.1
경기조정 기초수지	-2.9	-2.6	-1.6	-0.4	1.0	2.3	3.3
공공부문 순부채	73.9	75.5	78.3	80.0	79.9	78.4	75.9

주: 1) 예산책임청(OBR)의 'underlying deficit'

2) 'Public Sector Finances', 통계청(ONS), 2013.1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 Table B.5에서 발췌

[그림 VI-1] 공공부문 순부채(PSND) 전망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 Chart 1.11

2. 예산기조

- ① 장기경제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의 회복, ② 경제성장(Growth), ③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경제와 공공재정(The UK economy and public finances): 영국정부의 장기 경제계획은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되돌리고 FY2014-15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경쟁력 있는 조세시스템의 구축: 2016년까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은 매년 78억파운드의 세금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복지시스템 개혁: 현정부와 차기정부의 전체 복지지출 통제, 한 가구의 평균소득당 수급가능 공제 제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⁴⁸제도 도입
 - 성장(Growth):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 지원, 청년층의 기술습득과 일자리 제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 도모
 -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R&D 세액공제 한도 및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기업 투자 촉진
 - 매해 대학입학 학생 수를 최소 6만명 이상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 학생 정원제한 폐지
 - '2013 국가 인프라투자 계획'에서 투자 우선순위 목록의 갱신, 공공 및 민간부문 간 효율적인 인프라 계획을 위한 중개 역할 확대, 대출보증제도의 향상을 통해 인프라 투자 개선
 - 공정성(Fairness): 가계소득 보조 및 실업자 취업지원, 기업과 개인의 재정건전화에의 공정한 기여, 탈세방지를 위한 추가 정책 시행
 - 유아학교(infant school) 1-2학년 및 대학준비학교(sixth form colleges)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 제공
 - 취약계층 장기실업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경험 제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지

48) 소득보조(Income support), 소득기초 구직자 수당(Income-based Jobseeker' Allowance), 소득연계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등을 연계하여, 실직 관련 지원과 근로연계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시킨 통합된 시스템을 말함

- 원 계획(Help to Work scheme) 시행
- 비거주자(non-residents)의 영국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포함하여 고액자산가의 공정한 기여 확보
- 공정한 세금납부를 위해 역외탈세 방지, 주류사기와 담배밀수의 척결, 범죄조직과 사기꾼(fraudster)의 처벌을 위한 조치 도입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가을보고서 세입정책으로 FY2014-15에 총 9,000만파운드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며, 주로 연료세 인상 철회와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감면 확대에 기인
 - (연료세) '14년 9월 예정이었던 연료세 인상 계획(리터당 1.61펜스)이 취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4억 1,500만파운드 세입감소 효과 전망
 - (비거주재산세) '15년 4월까지 소규모기업 비거주재산세 감면의 두배(50%→100%) 확대, 물가연동 비거주재산세의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 RPI) 최대증가율을 2%로 제한하는 등 총 1조 1억 3,000만파운드의 비거주재산세 세입감소 효과 전망
 - (개인소득세공제) FY2015-16부터 배우자에게 1,000파운드의 개인소득세공제액을 양도가능
 - (은행세) 은행세(Bank Levy) 세율을 '13년 0.130%에서 '14년 0.156%로 인상하여 약 2억 6,500만파운드 세수증대 효과 전망
- OBR의 EFO(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따르면, 경상세입은 기업수익 및 소비지출의 증대 등을 반영하여 2013.3월 전망보다 전기간 상향 조정되었으며, FY2017-18에는 188억파운드 증가한 7,403억파운드로 전망
 - FY2014-15에는 3월 전망 대비 125억파운드 증가한 6,345억파운드로 예측되며, 세목별로는 특히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NICs), 법인세, VAT,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 환경세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짐

- 소득세(PAYE: Pay as you earn) 19억파운드, 사회보장세 6억파운드, 법인세 (Onshore) 45억파운드, VAT 26억파운드 증가
- 그 외 인지세(SDLT) 25억파운드, 환경세 20억파운드 등 증가

〈표 VI-4〉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부부간 소득세공제액 양도가능	0	0	-495	-600	-660	-775	
연료세 '14년 인상 철회	0	-415	-710	-735	-755	-780	
자동차세 자동이체	0	-5	-15	-15	-20	-20	
고용주 국민보험료 개정	0	0	-465	-495	-520	-530	
비거주채산세	소규모기업 비거주채산세 감면 확대(50%→100%)	0	-500	+65	+10	0	0
	단일채산기준 완화	0	-5	-5	-5	-5	-5
	'14~'15년 비거주채산세 증가 2% 제한	0	-270	-255	-255	-270	-275
	2년간 상점, 술집, 레스토랑 1,000파운드 세금감면	0	-350	-425	+70	+10	0
	상업용 부동산의 재취득 세금감면	0	-5	-10	-5	0	0
은행세(Bank Levy) 세율인상	0	+265	+520	+535	+535	+535	
종업원지주제 추가 지원	0	-15	-25	-25	-25	-30	
근로자 주식 제도의 간소화	0	+5	+5	+5	+20	+20	
연료세: 청정연료 지원	0	0	-5	-10	-20	-40	
기후변화협약	0	-5	-15	-15	-15	-15	
세일가스 발굴 수당	0	0	*	-5	-20	-20	
조세포탈 추종자의 엄중 처벌	0	+135	+660	-35	-40	-45	
고용중개(employment intermediaries)금지 ¹⁾	0	+520	+425	+380	+415	+445	
비거주자의 탈세 방지	0	0	+85	+60	+60	+65	
상계조정(Compensating Adjustment) ²⁾	0	+60	+125	+120	+115	+110	
벤처캐피탈신탁 세금면제 제한	0	+50	+35	+10	+20	+25	
과생상품 이용한 조세회피 처벌	+40	+40	+20	+10	0	0	
선박임대차계약시 임대료 공제가능액 제한	0	+140	+115	+100	+90	+80	
파트너십: 대안 투자기금 연장	0	0	+680	+430	+410	+400	
외국과 자동 조세 정보교환협정	*	*	*	+25	+10	+5	
이중과세 면제	+10	+20	+5	0	0	0	
자본이득세: 거주지 면제기간 수정	0	0	+65	+90	+100	+105	

〈표 VI-4〉의 계속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자본이득세: 비거주자 적용	0	0	0	+15	+40	+70
기업 지배권 규칙 변경	-30	-10	0	0	0	0
주류 사기 도매업자 등록	0	0	-5	+15	+230	+215
세금 및 관세 온라인 서비스 확대	0	0	+15	+50	+45	+50
체납세금 추징	0	+55	+20	0	0	0
'15-'16년 조세정책의 총 세금비용	0	0	0	-20	-60	-85
알코올가격 최저가격제	0	-5	-5	-5	-5	-5
주택세입계정 유연성 확대	-	-	-	-	+10	+20
세액공제: 징세 및 행정 개선	-	+355	+615	+75	+10	+5
'Spending Round' 정책의 영향	-	-60	-185	-185	-275	-380
총세입정책 효과	+20	-90	+490	-410	-570	-855

주: * 효과 거의 없음

1) 고용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을 자영업으로 위장하는 고용중개 방지

2) 이전가격조작 규정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의 한쪽의 이익을 증가시켜 거래가격이 조정되면 다른 상대방에게도 같은 가격을 반영하도록 만들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 Table 2.1에서 발췌

〈표 VI-5〉 경상세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소득세	152.3	155.5	167.3	177.9	189.5	201.2	214.0
pay as you earn	132.0	134.8	139.6	148.4	157.7	167.8	178.8
self assessment	20.6	20.8	27.4	28.6	30.5	32.0	33.6
소득보전세제	-3.0	-2.7	-2.7	-2.6	-1.6	-0.3	0.0
사회보장세(NICs)	104.5	106.9	109.2	113.5	124.4	130.6	137.2
VAT	100.7	106.2	109.8	113.7	117.7	121.8	126.1
법인세	40.4	39.5	41.5	42.0	42.4	43.9	44.7
onshore	35.6	35.8	38.2	39.1	40.1	41.2	41.9
offshore	4.8	3.7	3.2	2.8	2.3	2.7	2.8
법인세 세액공제	-0.9	-1.0	-0.9	-0.8	-0.8	-0.8	-0.9
석유세	1.7	1.3	1.4	1.4	1.2	1.2	1.2
연료세	26.6	26.8	26.6	26.9	28.0	28.7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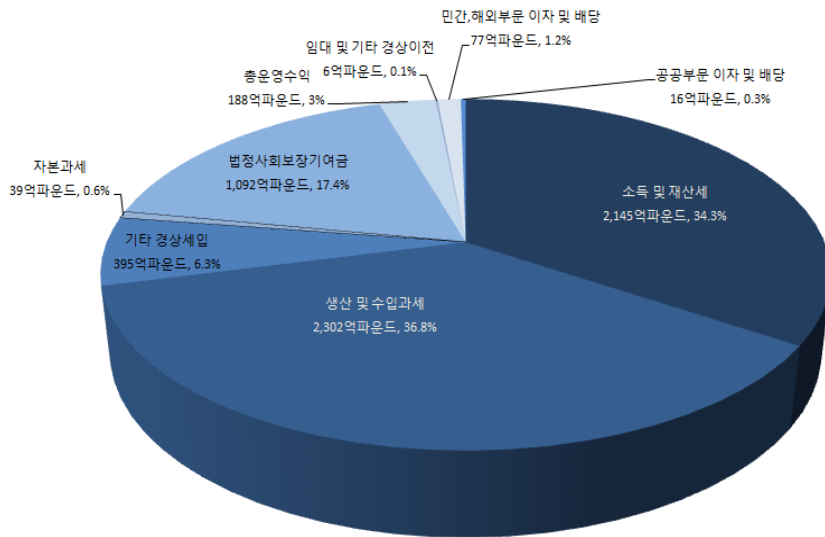
〈표 VI-5〉의 계속

	실적	전망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비거주재산세	26.1	26.6	27.0	28.9	30.3	31.0	32.4
지방세(Council tax)	26.3	27.1	27.7	28.2	29.0	30.0	30.9
VAT 환급(refunds)	13.8	13.8	13.7	13.4	13.3	12.9	12.5
자본취득세	3.9	5.0	6.7	8.0	8.9	9.8	10.8
상속세	3.1	3.5	3.8	4.2	4.7	5.2	5.6
인지세	6.9	8.9	10.8	12.5	13.9	15.2	16.8
인지세(on shares)	2.2	2.9	2.8	2.9	2.9	3.0	3.0
담배세	9.6	9.7	9.9	10.1	10.3	10.5	10.7
산업용주정(spirits)세	3.0	3.0	3.1	3.3	3.4	3.6	3.8
와인세	3.5	3.7	3.9	4.2	4.6	5.1	5.5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6	3.6	3.5	3.5	3.6	3.7	3.8
항공여객세	2.8	3.1	3.2	3.4	3.7	3.9	4.3
보험료세	3.0	3.1	3.2	3.3	3.4	3.4	3.5
기후변화세	0.7	1.7	2.1	2.6	2.7	2.8	3.0
기타 국세(HMRC taxes)	5.9	6.4	6.5	6.9	7.1	7.4	7.6
자동차세	6.0	6.0	5.8	5.7	5.6	5.4	5.3
은행세(bank levy)	1.6	2.2	2.7	2.9	2.9	2.9	2.9
Licence fee receipts	3.1	3.1	3.2	3.2	3.2	3.3	3.3
환경부담금	2.3	4.1	4.8	5.6	6.4	7.4	8.7
스위스자본세	0.0	0.9	0.0	0.0	0.0	0.0	0.0
EU ETS 경매세	0.3	0.4	0.3	0.4	0.4	0.4	0.4
기타 조세	6.6	6.1	6.7	6.8	6.5	6.6	6.5
National Accounts taxes	556.6	577.3	603.6	632.0	667.6	699.6	733.1
EU 부담금 공제	-5.3	-5.1	-5.0	-5.2	-5.0	-5.2	-5.4
이자 및 배당	8.0	7.1	8.1	9.8	12.7	15.1	17.5
총운영수지	27.8	28.3	28.9	29.9	31.1	32.0	32.9
기타 수입	-0.2	-1.0	-1.1	-1.1	-1.2	-1.2	-1.3
총경상수입	586.9	606.6	634.5	665.3	705.2	740.3	776.8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6.5	6.4	12.5	16.2	17.2	18.8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2, Table 4.5

- FY2014-15 일반정부 기준의 경제유형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생산 및 수입과세 36.8%(2,302억파운드), 소득 및 재산세 34.3%(2,145억파운드)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 밖에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7.4%(1,092억파운드), 기타 경상세입 6.3%(395억파운드) 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그림 VI-2] FY2014-15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 규모



출처: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 December*, Table 2.30

나. 세출

- 가을보고서의 지출정책으로 FY2014-15에 4,500만파운드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지출정책 중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전기요금 리베이트(rebate)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지출정책은 다음과 같음
 - (학교무상급식) '14년 9월부터 대학준비학교(sixth form colleges)에 보편적 학교무상급식의 도입을 위하여 FY2014-15에 6억 2,000만파운드 규모로 지원할 예정
 - (에너지보조) 향후 2년간 모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12파운드씩 리베이트(rebate)하여 총 6억파운드의 혜택 제공
 - (일자리지원)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에 참여후 2년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된

장기실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지원 패키지를 '14년 4월 이후 도입하며
1억 9,000만파운드 규모 지원

- (철도요금) '14년 1월부터 철도요금의 평균증가율을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 RPI)로 제한

〈표 VI-6〉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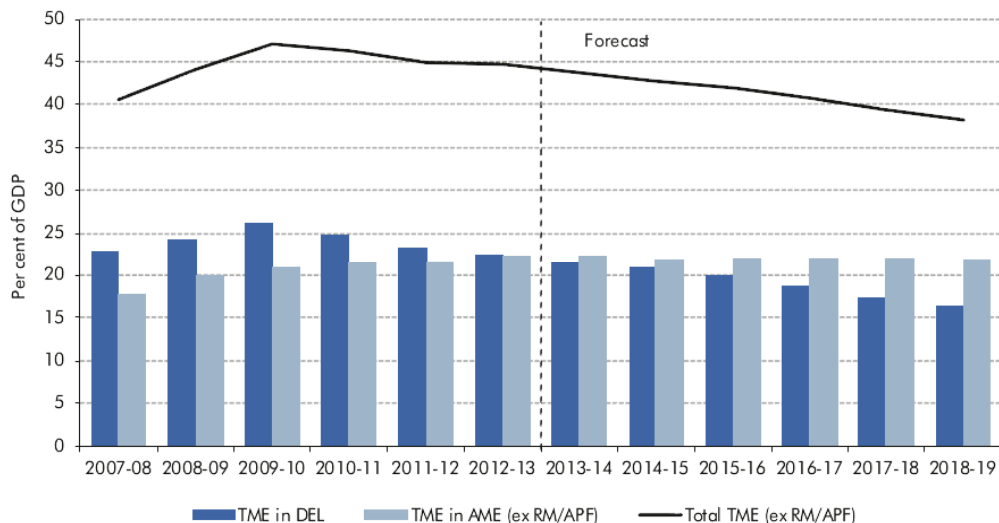
(단위: 백만파운드)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부처별 지출 감축	+1,080	+1,120	+1,040	-	-	-
Special Reserve	+900	0	0	-	-	-
학교무상급식 지원	0	-620	-755	-	-	-
철도요금: '14년 소매물가지수 조정	-10	-35	-35	-	-	-
대학교육: 학생정원 한도 폐지	0	-120	-290	-	-	-
대학교육: STEM ¹⁾ 과목 추가 지원	0	0	-40	-	-	-
성인교육: 견습기간 보충	0	-10	-35	-	-	-
장기실업자 일자리 지원	0	-190	-230	-	-	-
실업급여 축소	+25	+130	+140	-	-	-
창업수당 확대	0	-25	-55	-	-	-
영화세(Film Tax) 감면	0	-10	-20	-	-	-
과학: 양자(Quantum)기술 지원	0	-30	-35	-	-	-
주택세입계정 유연성 확대	0	0	-155	-5	-	-
공공주택구입권	0	0	-50	-	-	-
에너지가격: 취약계층 지원	0	-320	-320	-	-	-
가계 에너지보조금	0	-120	-120	-	-	-
건물주 에너지보조금	0	-30	-30	-	-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0	-30	-30	-	-	-
세액공제: 징세 및 행정 개선	-5	-	-	-	-	-
세액공제: 연간 수급권 축소	0	0	+65	+5	0	0
해외거주 영국인 생존증명 확대	0	+20	+25	-	-	-
노동연금부의 오류 정정	0	+130	+20	-	-	-
지방정부 자본수입 유연화	0	+10	-20	-	-	-
연금공제(Pension Credit)	0	-5	0	-	-	-
'Spending Round' 정책의 영향	+10	-	-	-	-	-
겨울연료 납입	0	0	+20	-	-	-
총지출정책 효과	+2,000	-45	-565	0	0	0

주: 1) STEM 과목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 Table 2.1에서 발췌

- OBR은 FY2014-15의 총관리지출(TME)은 2013.3월 예산안 전망보다 1억파운드 증가한 7,305억파운드 규모로 예상
 - 3월 예산안 대비 지출전망의 증가는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 증가, 실업률 감소 등의 경제전망(11억파운드 감소), 시장가정(3억파운드 증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포함한 기타가정(9억파운드 증가)의 변화에 기인
 - FY2013-14에 비해서는 약 127억파운드(1.8%) 증가
 - FY2013-14 대비 자본지출은 36억파운드, 경상지출 중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2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은 88억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Y2014-15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1%p 감소한 4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총관리지출(TME)의 감소는 대체로 경상지출 중 부처별 지출한도(DEL) 감축에 기인하며, 전망기간 동안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감소추세(그림 V-2)
 - 연간관리지출(AME)은 전망기간 동안 안정된 추세로 FY2013-14에 부처별 지출한도(DEL)를 최초로 초과하여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부처별 지출한도(DEL)로부터 연간관리지출(AME)로 지출이 이전됐음을 반영

[그림 VI-3] 총관리지출(TME)의 구성 변화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2, Chart 4.1

〈표 VI-7〉 총관리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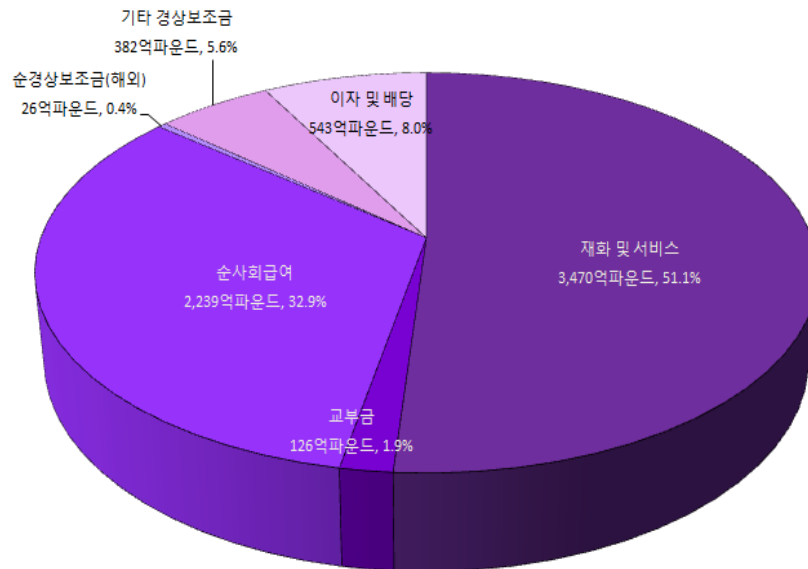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경상지출							
자원 DEL	316.5	316.4	316.6	312.6	305.7	294.1	287.4
자원 AME	340.8	353.3	362.1	379.2	396.4	416.4	433.9
사회보장급여	182.9	180.0	183.2	187.9	192.6	198.2	203.5
세액공제	28.7	28.8	28.6	28.8	31.0	33.7	35.1
순공공서비스연금	10.2	10.2	11.1	12.5	13.8	14.9	16.1
국가복권	1.1	1.3	1.5	1.5	1.6	1.7	1.8
BBC 내국 서비스	3.4	3.6	4.0	3.7	3.8	3.9	3.9
기타부처지출	1.1	1.2	1.1	1.1	1.1	1.1	1.1
EU분담금	8.3	8.7	7.3	8.6	8.1	7.3	8.2
지방재정지출	22.8	34.3	35.0	36.9	39.2	41.7	43.9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47.6	49.5	53.9	60.0	65.3	72.5	76.9
감가상각	17.3	18.1	18.8	19.5	20.2	21.0	21.7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1.6	11.4	11.4	11.2	11.0	10.6	10.4
단용(single use) 군사지출	4.8	4.9	4.2	4.2	4.4	4.3	4.5
환경부담금	2.0	3.5	4.4	5.3	6.2	7.4	8.9
기타 회계 조정	-1.0	-2.3	-2.4	-2.1	-2.0	-2.0	-2.1
공공부문 경상지출	657.2	669.7	678.7	691.8	702.2	710.5	721.3
자본지출							
자본 DEL	32.2	32.6	37.1	36.6	38.0	37.3	38.8
자본 AME	12.5	15.6	14.7	15.6	16.1	15.9	14.5
국가복권	0.4	0.5	0.5	0.5	0.6	0.6	0.6
기타 자본지출	-1.7	0.7	0.6	0.4	0.4	0.4	0.4
지방재정 지출	5.7	6.5	5.3	6.0	6.2	6.1	5.0
공기업 지출	7.3	7.8	8.2	8.2	8.2	8.1	8.3
회계 조정	0.7	0.0	0.1	0.4	0.7	0.7	0.2
공공부문 총투자	44.7	48.2	51.8	52.2	54.1	53.2	53.4
감가상각 공제	-22.5	-23.3	-24.1	-24.9	-25.8	-26.7	-27.6
공공부문 순투자	22.2	24.9	27.7	27.3	28.3	26.5	25.7
총관리지출	701.9	717.8	730.5	744.0	756.3	763.7	774.6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0.7	-2.2	0.1	-0.6	1.3	-0.5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2, Table 4,18

- FY2014-15의 일반정부 기준의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지출 중 재화 및 서비스부문 51.1%(3,470억파운드), 순사회급여부문 32.9%(2,239억파운드)이 높은 비중을 차지
 - 그 밖에 이자 및 배당지출이 8.0%(543억파운드), 기타 경상보조금 5.6%(382억파운드) 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그림 VI-4] FY2014-15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출처: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 December*, Table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FY2014-15에 1,050억파운드, FY2015-16에 1,28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전망
 - 재정건전화 규모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12-13에 약 73% 수준에서 FY2015-16에 약 80%까지 크게 증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FY2014-15에 재정건전화 노력의 78%는 820억파운드의 지출삭감, 22%는 230억 파운드의 세수증대를 통해 충당
 - FY2015-16은 재정건전화 노력의 80%는 1,020억파운드의 지출삭감, 나머지 20%는 260억파운드의 세수증대를 통해 충당하며, 80%의 지출삭감 비중은 2010.6월 예산안의 정부공약과 일치

〈표 VI-8〉 재정건전화 총규모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재정건전화 총규모	76	90	105	128
지출	56	65	82	102
세입	21	25	23	26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73	72	78	8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 Table 1.3에서 발췌

- 가을보고서에 도입된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 정부조직의 슬림화 및 효율화를 통해 FY2014-15까지 200억파운드를 절감할 계획
 - 연금수급개시연령이 현재 65세에서 2020년부터 66세, 이후 2028년부터는 67세, 2030년대 중반에 68세, 2040년대 후반에는 69세로 상향 조정되어 향후 50년간 총 5,000억파운드의 연금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부처별 지출한도(DEL)를 FY2014-15 약 11억파운드, FY2015-16 약 10억파운드 감축할 계획

- 의료, 학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세청(HMRC), 지방정부 예산 등은 이러한 감축정책에서 제외

〈표 VI-9〉 부처별 지출한도(DEL) 감축

(단위: 백만파운드)

	2014-15	2015-16
Education	167	156
NHS(Health)	0	0
Transport	41	36
CLG Communities	24	13
CLG Local Government	0	0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157	148
Home Office	118	113
Justice	77	71
Law Officers' Departments	6	6
Defence	277	272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3	13
International Development	0	0
Energy and Climate Change	12	11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19	18
Culture, Media and Sport	13	12
Work and Pensions	84	68
Scotland	55	51
Wales	22	20
Northern Ireland	21	19
Chancellor's Departments	2	1
Cabinet Office	7	4
Small and Independent Bodies	7	7
총지출감축 규모	1,122	1,039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 Table 2.4

- 2012.12월의 가을보고서와 동일하게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로 향후 5년 이내 경기조정 경상수지의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설정
 - 기존의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시점⁴⁹⁾인 FY2017-18에 경기조정 경상수지가 2013.3월 예산안보다 0.1%p 하향 조정된 GDP 대비 0.7%로 흑자를 처음으로 달성할 전망
 - 2013.12월 가을보고서의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기준시점인 FY2018-19에는 평균세율의 인상과 공공서비스 지출의 삭감으로 1.6%의 큰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보조 목표인 공공부문 순부채(PSND)는 3월 예산안 당시 FY2016-17에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12월 가을보고서 전망에서는 그보다 1년 앞당겨진 FY2015-16에 GDP 대비 80%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갈 전망

〈표 VI-10〉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변화

	GDP 대비 %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경기조정경상수지						
3월	-2.8	-1.7	-1.2	0.1	0.8	
12월	-2.9	-2.0	-1.4	-0.2	0.7	1.6
공공부문 순부채						
3월	79.2	82.6	85.1	85.6	84.8	
12월	75.5	78.3	80.0	79.9	78.4	75.9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2, Table 5.1 발췌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고용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
 - 법인세율을 23%→ 21%(‘14년 4월)→ 20%(‘15년)로 인하하고 R&D 세액공제 한도 10% 확대
 - 특허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율을 10% 인하하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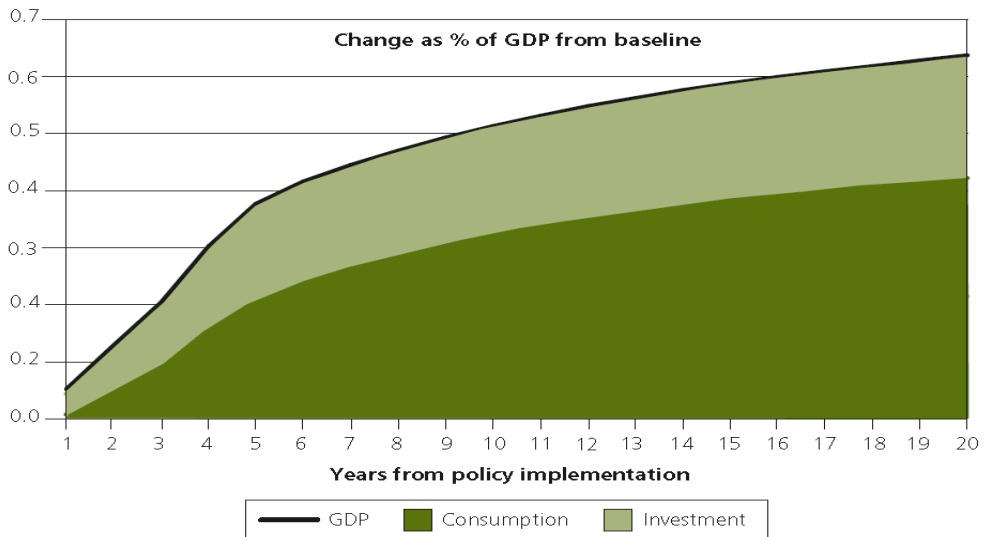
49) 2013.3월 예산안의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시점

- 2014-15년 동안 물가연동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의 소매물가지수 증가율을 2%로 제한하고 '15년 4월까지 소규모기업 비거주재산세 감면(Small Business Rate Relief)을 두 배로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 FY2014-15와 FY2015-16에 상업용 부동산(Retail Property)의 비거주재산세를 최대 1,000파운드 감면하고 기존 미점유상태의 상업용 부동산을 새로 점유한 자의 비거주재산세를 18개월 동안 50% 감면
- 연간투자수당(Annual Investment Allowance)을 25,000파운드 → 250,000파운드로 10배 증대
- 기업(특히 소규모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수당 2,000파운드를 제공하고 21세 이하 청년근로자(한 주당 813파운드의 소득)의 국민보험납입금을 폐지

〈참고 VI-1〉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영향

-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2.5~4.5%(36~62억파운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노동생산성과 가계소득·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GDP를 0.6~0.8%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그림 VI-5] 법인세 인하에 따른 GD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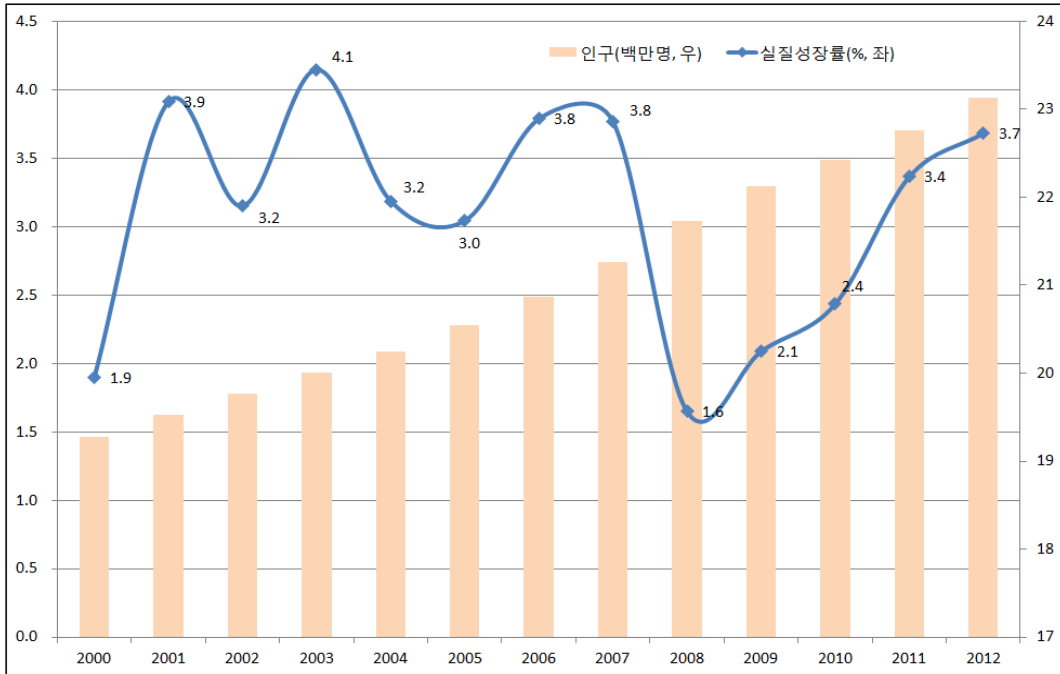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3*, 2013.12, Chart. 1.14

VII. 호주

- FY2013-14: 2013년 7월 ~ 2014년 6월
- 출처 :
 -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27
 - The Treasury, *Budget Overview*, 2013.5.14
 -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 No.2 2013-14*, 2013.5.14
 - The Treasury,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 2013.8.13
 - The Treasury, *Final Budget Outcome 2012-13*, 2013.9.27
 -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2013.12.17
- 환율: 1호주달러 = 약 1,060.36원(2013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2년 경상 GDP 1조 271억 달러(우리나라 0.68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2년 기준 40.8%(우리나라 109.9%)
- 인구: 2,313만명(2012년 추정치)

□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호주의 경제성장세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안정적 물가 지속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4-15까지 예산수지 적자를 예상하였으나, FY2015-16에 균형을 회복하고 FY2016-17에는 흑자로의 전환을 목표
- ◇ 예산기준: FY2016-17까지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성장, 스마트한 국가 및 공정사회 건설을 추구하며 다음의 중점 계획(Key Initiatives)을 제시
 - 미래의 생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 장애복지 지원
 - 차세대 국가건설 강화
 - 주요 의료서비스 투자 확대
 - 혁신, 교육, 기술 및 연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지방에 대한 지원 확대
 - 연금체계의 강화 및 공정화
- ◇ 예산안 내용
 - FY2013-14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3,877억호주달러
 - FY2013-14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3,983억호주달러
-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장기 예산절감 시행을 통해 FY2021-22 순채무 GDP 대비 0% 수준 근접 목표
 - 사회보장 및 복지, 교육, 일반 공공서비스, 보건부문에 대한 예산절감 추진
 - (경제활성화) 미래 성장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 강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고용시장 보호 계획 실시
 - 인프라 자금지원에 민간부문 참여 확대,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 반덤핑개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
 - (공정사회구현) 장애복지기관 운영 및 퇴직연금제도 개혁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3.01.31	FY2012-13 조세지출 보고서 발표	2013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3.02.17	고용 창출 계획 발표	
2013.04.05	퇴직연금 개혁안 발표	
2013.04.14	교육지원금 개혁안 발표	
2013.05.14	FY2013-14 예산안 발표	
2013.05.16	메디케어 부담금 증액 법안 통과	
2013.08.02	경제성명 발표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3.08.13	선거전보고서 발표	
2013.09.27	FY2012-13 결산보고서 발표	
2013.10.22	채무한도 증액 계획 발표	
2013.10.24	광산세폐지 법안 발표	
2013.12.9	채무한도폐기 법안 상원 통과	
2013.12.17	FY2013-14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예산안(Budget)에서 호주의 경제성장세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낮은 실업률, 안정적 물가 지속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그림 VII-1 참조)
 - (경제) FY2013-14 실질 GDP 성장률은 2.75%, 이후로는 모두 3%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비농업 상품의 수출과 가계소비 증가 등에 기인
 - 명목 GDP 성장률은 호주달러의 지속적인 저환율, 무역침체 등으로 5%대로 둔화 전망(20년 평균치 6.5%)
 - (고용) FY2013-14 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후로도 견고한 성장세에 따라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Y2013-14 실업률은 5.75%로 FY2012-13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낮은 수준이며 이후로도 5%대를 유지할 전망
 - (물가) FY2013-14 소비자물가지수는 2.25%로 예측, 이후로도 2%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한편,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0)는 예산안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보다 하향 전망하였고, 고용에서도 좀 더 낮은 증가율 예상
 - (경제) FY2013-14 실질 GDP 성장률은 예산안보다 0.25%p 낮은 2.5%, FY2015-16 이후로는 예산안과 동일한 3%로 전망
 - 자원투자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비자원분야의 꾸준한 회복 예상
 - (고용) FY2013-14 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0.75%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는 예산안보다 0.5%p 하향 조정된 수치이나 이후로는 1.5%로 동일 수준 전망
 - 반면, 낮은 임금상승률과 기업에 대한 고용인센티브 증가로 FY2014-15 이후 실업률은 6.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물가) FY2013-14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산안 대비 0.5%p 높은 2.75%로 예측되었으나, FY2015-16 이후로는 2.5%로 동일 수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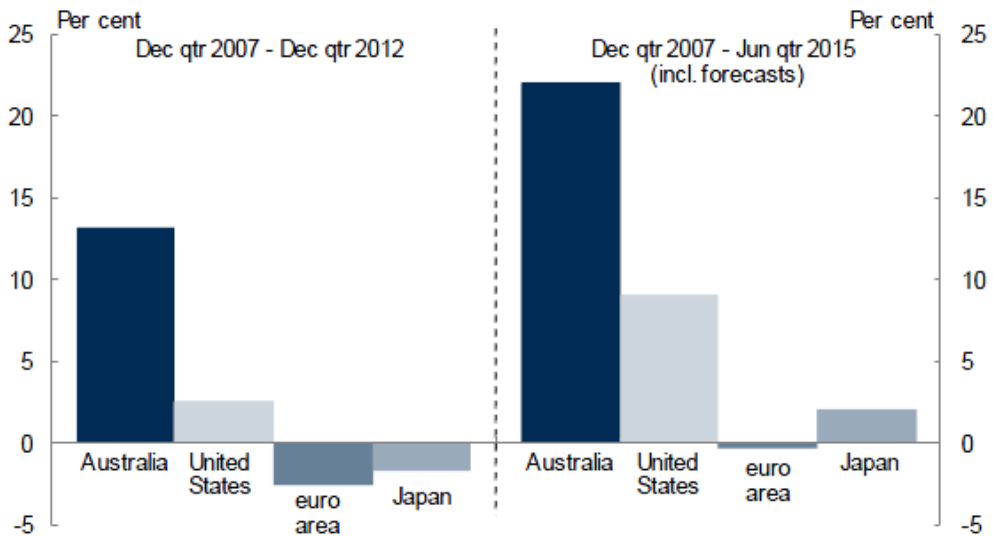
〈표 VI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¹⁾ 전망

(단위: %)

	예측(Forecasts)						전망(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실질 GDP 성장률	3	2.7	2.75	2.5	3	2.5	3	3	3	3
고용률	1.25	1.3	1.25	0.75	1.5	1.5	1.5	1.5	1.5	1.5
실업률	5.5	5.6	5.75	6	5.75	6.25	5	6.25	5	6.25
소비자물가지수	2.5	2.4	2.25	2.75	2.25	2	2.5	2.5	2.5	2.5
명목 GDP 성장률	3.25	2.5	5	3.5	5	3.5	5.25	4.75	5.25	4.75

주: 1) 실질 GDP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2사분기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2013.12.17

[그림 VII-1] 실질 GDP 성장률 주요 선진국 간 비교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나. 재정전망

- 예산안(Budget)에서 FY2014-15까지 예산수지 적자를 예상하였으나, FY2015-16에 균형을 회복하고 FY2016-17에는 흑자로의 전환을 목표
 - (재정수입) FY2013-14에 전년 대비 7.7% 증가한 3,877억호주달러를 기록하고, FY2014-15 이후로는 4천억호주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 FY2013-14에 전년 대비 4.4% 증가한 3,983억호주달러를 기록, FY2014-15 이후 4천억호주달러를 넘어선 후 FY2016-17에는 4,547억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FY2015-16에 균형을 회복한 60억호주달러, FY2016-17에는 108억호주달러로 흑자 전환 예상
 - (예산수지) FY2013-14에 180억호주달러의 적자가 예측되나, FY2015-16에는 8억호주달러로 균형을 회복한 후 흑자를 유지할 전망
 - (순채무) FY2013-14에 1,781억호주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FY2014-15에 정점(1,916억호주달러, GDP 대비 11.4%)을 찍고 이후 감소할 전망
 - 순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정점을 찍은 FY2014-15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의 8분의 1 수준 미만으로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

-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O)에서는 전망기간 동안 총 1,230억호주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 흑자 전환 시기를 예산안보다 1년 연기한 FY2017-18으로 전망
 -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상의 재정수입 전망은 세수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산안 대비 하향 조정, 반면 재정지출 전망은 예산안 대비 상향 조정
 - FY2013-14 재정수지 적자는 418억호주달러로 그 규모가 예산안(135억호주달러) 대비 크게 증가, 또한 선거전재정보고서⁵⁰⁾(255억호주달러) 대비 64% 증가
 - 순채무 규모 또한 예산안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예산안에서는 GDP 대비 10~11% 수준으로 전망한 데 반해,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에서는 12~15% 수준으로 높게 전망
 - 따라서, FY2014-15에는 부채감축과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전임 정부에 의해 악화된 재정을 복구하는 데 집중할 계획

50) <참고 VII-1> 참고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Budget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Revenue) ¹⁾	3,600	3,877	3,739	4,116	3,879	4,381	4,174	4,686	4,450
GDP 대비 비율	23.7	24.3	23.7	24.5	23.8	24.8	24.4	25.2	24.9
재정지출(Expenses) ¹⁾	3,814	3,983	4,121	4,157	4,178	4,310	4,360	4,547	4,571
GDP 대비 비율	25.1	24.9	26.1	24.8	25.6	24.4	25.5	24.4	25.6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203	-135	-418	-63	-315	60	-188	108	-145
GDP 대비 비율	-1.3	-0.8	-2.7	-0.4	-1.9	0.3	-1.1	0.6	-0.8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³⁾	-194	-180	-470	-109	-339	8	-241	66	-177
GDP 대비 비율	-1.3	-1.1	-3.0	-0.6	-2.1	0.0	-1.4	0.4	-1.0
순채무(Net Debt)	1,616	1,781	1,915	1,916	2,311	1,912	2,591	1,857	2,805
GDP 대비 비율	10.6	11.1	12.1	11.4	14.2	10.8	15.2	10.0	15.7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2013.12.17

〈참고 VII-1〉 선거전재정보고서(PEFO;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호주의 경제 및 재정전망을 다룬 보고서로, 총선 실시를 위한 선거시행영장 발부 10일 전까지 재무부 및 재정부장관들에 의해 공개 의무화⁵¹⁾
 - 공개의무 및 수록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공정예산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Part1과 Part7에 근거
 - 최신의 연방예산과 당해 회계연도 및 향후 3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수치와 재정수치의 산정을 위해 이용된 경제수치를 포함
 - 또한, 경제수치 변동에 따른 재정수치의 민감도, 재정수치에 대한 위험요소(우발 채무, 앞으로 발생할 정부의 채무 등)도 수록
- 지난 2013년 8월 13일, 재무부 및 재정부장관들은 9월 7일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재정보고서 2013」을 공개⁵²⁾
 - FY2013-14 실질 GDP 성장률은 2.5%로 예산안보다 0.25%p 낮게 전망, 이는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
 - 고용률 또한 예산안보다 0.25%p 낮은 1%의 증가율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는 완만한 임금상승 등에 따라 2%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표 VII-3〉 주요 경제지표 전망¹⁾

(단위: %)

	예측		전망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실질 GDP 성장률	2.5	3	3	3
고용률	1	1.5	1.5	1.5
실업률	6.25	6.25	5	5
소비자물가지수	2.5	2	2.5	2.5
명목 GDP 성장률	3.75	4.5	5.25	5.25

주: 1) 실질 GDP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자료: The Treasury,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 2013.8.13

51)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정책분석 12-02 호주의 재정제도』, p.90

52)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3년 8월 제2호, 2013.8.14

- FY2013-14 재정수입은 3,799억호주달러, 재정지출은 4,015억호주달러 예측
- 재정수지는 FY2014-15까지, 예산수지는 FY2015-16까지 적자 예측
- 순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FY2014-15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전망

〈표 VII-4〉 예산총량 전망

(단위: 억호주달러, %)

	추정		전망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재정수입 ¹⁾	3,799	3,977	4,333	4,646
GDP 대비 비율	24.2	24.3	25.1	25.6
재정지출 ¹⁾	4,015	4,160	4,309	4,545
GDP 대비 비율	25.6	25.4	25.0	25.0
재정수지 ²⁾	-255	-221	18	78
GDP 대비 비율	-1.6	-1.3	0.1	0.4
예산수지 ³⁾	-301	-240	-47	42
GDP 대비 비율	-1.9	-1.5	-0.3	0.2
순채무	1,840	2,121	2,190	2,173
GDP 대비 비율	11.7	13.0	12.7	12.0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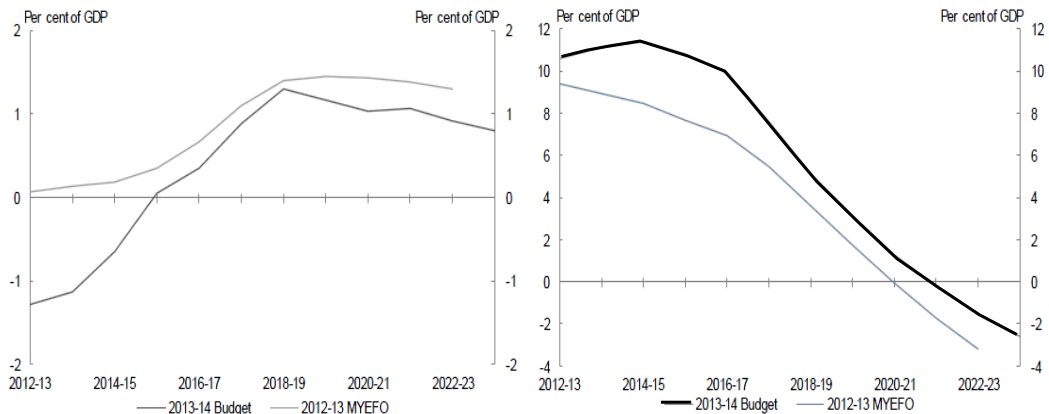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The Treasury,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 2013.8.13

- 한편, 정부는 FY2008-09부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안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 Strategy)을 유지하고, 흑자 달성을 위한 추가적 조치 시행
 - (중기재정전략) ① 평균적으로 예산흑자 달성, ② 조세부담률 FY2007-08 수준(GDP 대비 23.7%) 이하로 유지, ③ 중기적으로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개선
 - (추가적 조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상황 회복 및 재정흑자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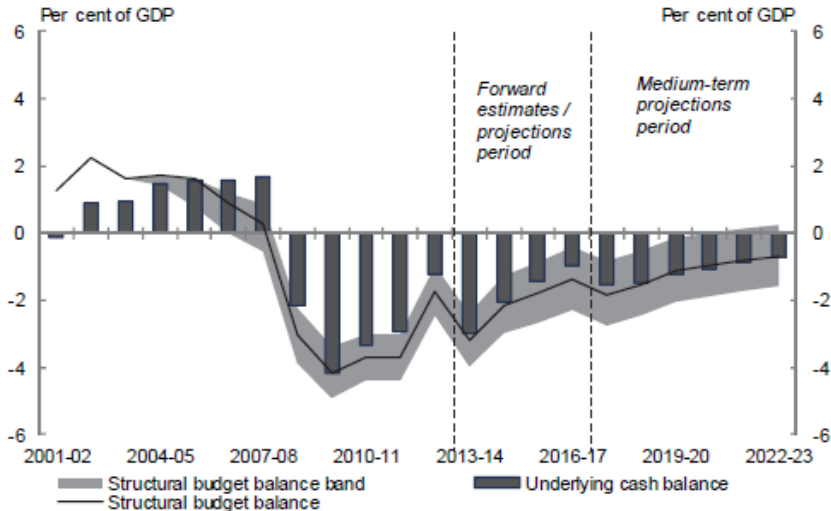
- GDP 대비 세수 비중 평균은 FY2007-08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에 따라 자연적으로 현금징수액(Tax Receipts)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
 - GDP 대비 1%의 재정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2%로 유지함으로써 흑자 증가를 위해 노력
-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기재정전략을 반영하여 FY2016-17부터 예산수지 흑자를 전망하였으나, 구조적 재정수지는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예산수지) FY2018-19에 GDP 대비 1.3%(약 270억호주달러)의 흑자 최고치를 달성한 후, 흑자폭의 감소로 FY2023-24에는 214억호주달러의 흑자 전망(예산안 기준, [그림 VII-2] 참고)
 - (순채무) 예산수지 흑자폭의 증감에 따라 FY2014-15에 GDP 대비 11.4%로 최고점을 찍은 후, FY2021-22에 0%대로 감소 전망(예산안 기준, [그림 VII-2] 참고)
 - (구조적 재정수지) FY2007-08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FY2022-23까지도 흑자로의 전환은 어려울 전망(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 기준, [그림 VII-3] 참고)

[그림 VII-2]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그림 VII-3]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자료: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2013.12.17

2. 예산기조

- FY2013-14 예산안은 FY2016-17까지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성장, 스마트한 국가 및 공정사회 건설을 추구
 - 경제성장 강화(A Stronger Economy)
 - 경제활성화를 위해 철도 및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 건설에 적극 투자
 - 국내 및 해외로의 취업확대 지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포함한 고용 창출계획(A Plan for Australian Jobs) 실시
 - 스마트한 국가 건설(A Smarter Nation)
 - 미래사회의 고임금·고기술 일자리를 위해 어린이 교육 강화
 - FY2014-15부터 6년간 교육개선 패키지(National Plan for School Improvement) 실시로 연구 활성화
 - 공정사회 구현(A Fairer Society)
 - 장애복지기관(DisabilityCare Australia)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및 지원 확대

- 국가건강개혁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농촌지역 돌봄, 의료 및 지원서비스 강화
- 교육, 장애복지, 국가건설,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중점 계획(Key Initiatives) 제시
 - 교육투자(Historic Investment in Australian Schooling)
 - 미래 생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개혁 명목으로 6년간 98억호주달러 투자
 -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에 11억호주달러 투자
 - 장애복지기관(DisabilityCare Australia) 운영
 - 핵심적인 사회정책 개혁에 7년간 149억호주달러 투자
 - 장애복지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추가부담금(Medicare Levy) 0.5%p 인상
 - 차세대 국가건설(The Next Wave of Nation Building)
 - 인프라 구축 명목으로 FY2008-09부터 FY2018-19까지 약 600억호주달러 투자
 - 브루스 고속도로(41억호주달러), 멜버른 지하철(30억호주달러), 시드니 고속도로(18억호주달러) 등을 포함한 도로 및 철도 건설에 투자
 - 주요 의료서비스 투자(Investing in Key Health Services)
 - 암 예방, 치료 및 연구 등에 약 2억호주달러 지원
 - 의료혜택제(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를 통해 만성신경통, C형 간염, 파킨슨병 등에 대해 5년간 약 7억호주달러 지원
 - 혁신, 교육, 기술 및 연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Boosting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Education, Skills and Research)
 - 고용창출계획(A Plan for Australian Jobs)에 따라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호주달러 투자
 - 구직수당(Newstart Allowance) 인상을 포함하여 이직을 위한 구직자들에 대해 4년간 3억호주달러 지원
 - 지방에 대한 지원 확대(Supporting Stronger Regions)
 - 태즈메니아 주에 대한 지원으로 약 3억호주달러 할당
 - 곤란에 처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농가수당(Farm Household Allowance)으로 약 1억호주달러 배분

- 연금체계의 강화 및 공정화(Making Our Retirement Income System Stronger and Fairer)
 -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을 2013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9~12% 증액
 - 10년 동안 20만호주달러까지 자산조사면제(Means Test Exemption)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자(Age Pensioners) 지원

3. 예산안 내용

가. 재정수입

- FY2013-14 예산안(Budget)의 재정수입은 3,877억호주달러(GDP 대비 24.3%)로 전년 대비 7.7% 증액
 - 조세수입은 3,667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액
 - 자원세가 전년 대비 96.6% 대폭 증액, 이는 FY2012-13 자원세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세수추정에 있어 가정에 따라 증감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원세의 특성 때문
 -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를 보이는 세목으로는 판매세, 소비세, 관세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5.6%로 나타남
 - 그러나 '12년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FY2013-14 전망치 3,820억호주달러와 비교하면 153억호주달러가 하향 조정되어 3.8% 감소한 상황
 - 이는 원자재 가격 약세와 호주달러의 저환율 지속 등의 영향으로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
 - 임금의 완만한 상승과 경직된 소비로 개인소득세 또한 감소
 - 세외수입은 211억호주달러로 FY2012-13이나 '12년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 전망 대비 큰 변화는 없음

〈표 VII-5〉 FY2013-14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¹⁾

(단위: 억호주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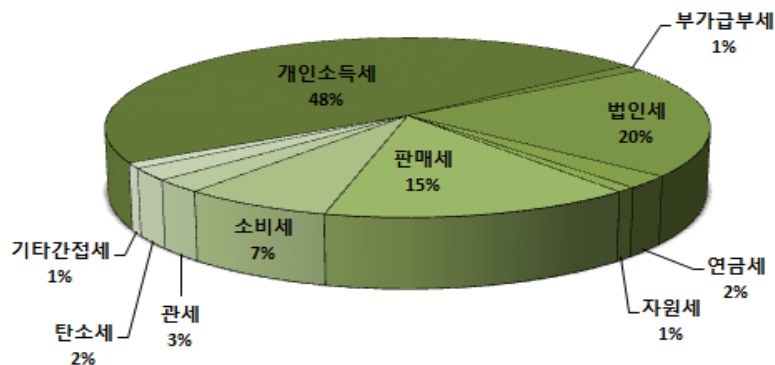
	2012-13 (a)	2013-14		증감(b-a)	
		'12 MYEFO	Budget(b)	금액	비율
재정수입(Total Revenue) (GDP 대비 비율)	3,600 (23.7)	4,031 (25.0)	3,877 (24.3)	278 -	7.7 -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GDP 대비 비율)	3,387 (22.3)	3,820 (23.7)	3,667 (23.0)	279 -	8.2 -
개인소득세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ation)	1,609	1,786	1,754	145	9.0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39	45	43	4	11.1
법인세(Company tax)	681	805	740	58	8.6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78	93	85	7	8.7
자원세(Resource rent taxes)	17	66	34	17	96.6
판매세(Total sales taxes)	514	549	543	29	5.6
소비세(Total excise duty)	256	265	261	5	1.8
관세(Customs duty)	85	90	88	4	4.3
탄소세(Carbon pricing mechanism)	75	87	83	8	10.6
기타간접세(Total other indirect taxation revenue)	33	35	36	3	9.3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GDP 대비 비율)	212 (1.4)	211 (1.3)	211 (1.3)	△1 -	△0.7 -

주: 1) 발생주의 기준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27

[그림 VII-4] FY2013-14 예산안 조세수입 구성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 한편, '13년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는 재정수입을 예산안 대비 3.6% 감액한 3,739억 호주달러로 전망
 - 조세수입은 예산안 대비 4.2% 감소 전망
 - 전 부문에 걸쳐 세수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특히 연금세와 자원세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세외수입은 예산안에 비해 14억호주달러 증가한 225억호주달러로 전망

〈표 VII-6〉 FY2013-14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재정수입 비교¹⁾

(단위: 억호주달러, %)

	2013-14		증감	
	Budget	MYEFO	금액	비율
재정수입(Total Revenue) (GDP 대비 비율)	3,877 (24.3)	3,739 (23.7)	△138 -	△3.6 -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GDP 대비 비율)	3,667 (23.0)	3,514 (22.3)	△152 -	△4.2 -
개인소득세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ation)	1,754	1,680	△74	△4.2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43	41	△2	△4.2
법인세(Company tax)	740	704	△36	△4.8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85	70	△15	△17.6
자원세(Resource rent taxes)	34	24	△10	△29.8
판매세(Total sales taxes)	543	538	△4	△0.8
소비세(Total excise duty)	261	348	△1	△0.1
관세(Customs duty)	88			
탄소세(Carbon pricing mechanism)	83	73	△10	△12.0
기타간접세(Total other indirect taxation revenue)	36	35	△1	△2.8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GDP 대비 비율)	211 (1.3)	225 (1.4)	14 -	6.7 -

주: 1) 발생주의 기준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2013.12.17

나. 재정지출

- FY2013-14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983억호주달러(GDP 대비 24.9%)
 - FY2013-14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교육분야 지출이 전체의 58%를 차지, 재정지출은 동 분야들의 지출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보건분야 지출이 타 분야의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기능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일반 공공서비스) 전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Δ10.2%), 이는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부담금 증가와 ODA 수준 상향 조정 계획을 FY2017-18로 연기한 데 기인
 - (국방) FY2013-14 220억호주달러에서 FY2016-17 258억호주달러까지 증가
 - 방위체제 지원 강화 및 '13년 국방백서(Defence White Paper)상의 우선순위 정책 지원을 반영한 데 기인
 - (교육) FY2013-14의 교육투자 강화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증가추세 유지
 - (보건) FY2013-14에 64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는데, 이후로도 공공의료서비스 수요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 및 복지) 고령화로 인해 간병인 지급금(Carer Payment) 등이 증가함에 따라 FY2013-14에 전년 대비 4.3% 증가
 - 또한,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동 분야의 지출이 43%를 차지하면서 전체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청정에너지 미래패키지(Clean Energy Future Package) 시행으로 FY2014-15에 89억호주달러까지 증가, 이후 수정된 탄소가격의 영향으로 감소
 - (교통·통신) 도로 및 철도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로 FY2013-14에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이후 주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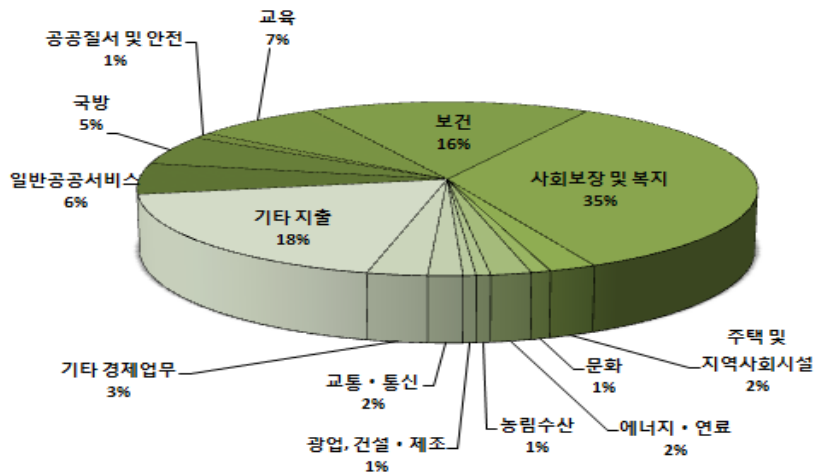
〈표 VII-7〉 FY2013-14 예산안 재정지출 규모

(단위: 억호주달러, %)

	추정			전망		증감(b-a)	
	2012-13 (a)	2013-14 (b)	2014-15	2015-16	2016-17	금액	비율
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	3,814 (25.1)	3,983 (24.9)	4,157 (24.8)	4,310 (24.4)	4,547 (24.4)	169 -	4.4 -
일반 공공서비스	256	230	232	238	255	△26	△10.2
국방	211	220	233	251	258	9	4.3
공공질서 및 안전	40	43	41	41	40	3	7.5
교육	284	297	304	318	340	13	4.6
보건	622	646	681	716	755	24	3.9
사회보장 및 복지	1,324	1,381	1,440	1,499	1,585	57	4.3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69	88	89	65	76	19	27.5
문화	36	37	36	34	35	1	2.8
에너지·연료	62	76	76	77	76	14	22.6
농림수산	26	27	27	30	27	1	3.8
광업, 건설·제조	23	24	27	26	23	1	4.3
교통·통신	50	65	66	60	54	15	30.0
기타 경제업무	104	113	105	104	99	9	8.7
기타 지출	707	736	799	851	924	29	4.1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그림 VII-5] FY2013-14 예산안 재정지출 자원배분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 한편,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에서는 FY2013-14 재정지출 규모를 4,121억호주달러로 예산안 대비 3.5% 높게 전망,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예산안 대비 증가 전망
 - FY2013-14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에너지·연료, 농림수산분야 지출은 예산안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광업, 건설·제조, 교통·통신분야 등의 지출규모는 예산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VII-8) FY2013-14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비교

(단위: 억호주달러, %)

	2013-14			2014-15		2015-16		2016-17	
	Budget	MYEFO	증감률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	3,983 (24.9)	4,121 (26.1)	3.5 -	4,157 (24.8)	4,178 (25.6)	4,310 (24.4)	4,360 (25.5)	4,547 (24.4)	4,571 (25.6)
일반 공공서비스	230	334	44.9	232	234	238	238	255	247
국방	220	226	2.7	233	237	251	251	258	254
공공질서 및 안전	43	44	3.3	41	42	41	41	40	40
교육	297	302	1.5	304	308	318	320	340	340
보건	646	647	0.1	681	676	716	709	755	746
사회보장 및 복지	1,381	1,387	0.4	1,440	1,443	1,499	1,484	1,585	1,568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88	86	△1.7	89	48	65	46	76	46
문화	37	38	3.8	36	36	34	35	35	35
에너지·연료	76	73	△4.4	76	70	77	71	76	72
농림수산	27	26	△0.8	27	27	30	29	27	26
광업, 건설·제조	24	29	18.1	27	27	26	26	23	25
교통·통신	65	74	14.6	66	86	60	72	54	46
기타 경제업무	113	118	4.5	105	112	104	105	99	98
기타 지출	736	737	0.2	799	830	851	935	924	1,029

자료: The Treasury,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2013.12.17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장기 예산절감 시행을 통해 FY2021-22 순채무 GDP 대비 0% 수준 근접 목표
 - 경제·사회개혁에서 우선순위 정책을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해 FY2013-14에 약 21억호주달러를, 향후 4년간 총 442억호주달러를 절감
 - (사회보장 및 복지)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족수당(Family Payment) 체계 개혁
 - 출산장려금(Baby Bonus)을 2014년 3월부터 폐지하고 가족세제혜택A(Family Tax Benefit Part A) 증액⁵³⁾으로 대체 등
 - FY2013-14에 9억호주달러 절감, FY2012-13부터 FY2016-17까지는 54억호주달러 절감 기대
 - (교육) 언어수리평가(Literacy and Numeracy) 등 다수의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교육개선 패키지(A National Plan for School Improvement)로 통합운영
 - FY2013-14에 1억호주달러 절감, 6년간(2014-2019) 30억호주달러 절감 목표
 - (일반 공공서비스) 원조(Aid) 예산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함으로써 4년간 19억호주달러 절감
 - (보진) 국민건강보험 수익명세(Medicare Benefits Schedule)에 대한 물가연동제(Indexation) 변경으로 FY2013-14에 2억호주달러, FY2016-17까지 4년간 7억호주달러 절감

53) 첫째 아이의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해 2,000호주달러, 둘째 아이 이후의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해 1,000호주달러 증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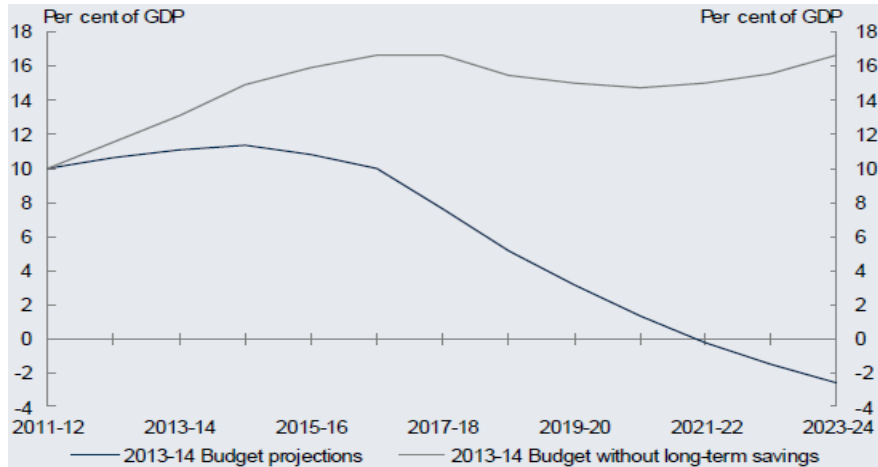
〈표 VII-9〉 주요 예산절감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Total
	\$m	\$m	\$m	\$m	\$m	\$m
Strong and stable funding for DisabilityCare Australia Medicare Levy increase dedicated to disability spending	0.0	0.0	3342.6	3936.5	4273.7	11,552.7
Protecting the corporate tax base	0.0	108.4	895.3	1,499.3	1,693.5	4,196.5
Tightening the rules to prevent profit shifting						
Removal of immediate deductibility for expenditure on exploration rights and information						
Amendments to improve the integrity of the consolidation regime						
Targeting offshore marketing hubs and business restructures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Offshore Banking Unit regime						
Improving the integrity of the foreign resident CGT regime						
Preventing dividend washing						
Funding our National Plan for School Improvement	-1.0	117.9	459.8	966.6	1,060.1	2,603.3
Student Start-up Scholarships as income contingent loans						
2% and 1.25% efficiency dividend for two years only for Higher Education additional funding						
Cap deductions for work-related education expenses at \$2,000						
Not proceeding with the additional increase to FTB Part A	0.0	615.8	623.3	632.0	646.4	2,517.5
Family payment reform	-0.5	154.6	488.7	742.8	976.0	2,361.7
Increase FTB - A to replace the baby bonus from 1 March 2014						
Indexation pause extension for upper income test limits for family payments and supplements until the end of the forward estimates						
Changes to Clean Energy Future package	109.8	191.8	256.6	1542.3	1326.7	3,427.3
ODA - Deferring Australia's Growth Target	0.0	0.0	326.5	688.2	906.5	1,921.2
Sustainable health spending	-0.1	154.8	335.3	506.6	736.8	1,733.4
Increase general threshold of Extended Medicare Safety Net						
Realign indexation of MBS to financial year						
Phase out net medical expense tax offset (NMETO)						
Other revenue	0.0	91.6	538.7	1,494.2	999.8	3,124.3
Monthly instalment payments (PAYG) for large taxpayer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ax incentive savings						
Import Processing Charge - ensuring full cost recovery						
Other	275.0	713.5	2,130.6	3,573.3	4,029.4	10,721.8
Total saves ^(a)	383.3	2,148.4	9,397.4	15,581.6	16,649.0	44,159.8

(a) In underlying cash terms, the Budget delivers savings of \$43 billion over five years.

자료: The Treasury, *Budget Overview*, 2013.5.14

[그림 VII-6] 장기 예산절감(Long-term Savings)과 순채무



자료: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2013-14*, 2013.5.14

- 법인세에 대한 세원잠식과 조세회피 방지(Protecting The Corporate Tax Base from Erosion and Loopholes)
 - 제도상 허점이나 법인세법의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절세전략(Tax Planning Strategy) 차단
 -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발생시키는 조세회피(Aggressive Tax) 구조 개선
 - 자원부문 감가상각 자산(Depreciation Asset) 세제혜택(Concession) 조정
 -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준수 강화
 - 역외금융지점(Offshore Banking Unit)에서의 세수구멍 종식
 - 투자자들의 'Dividend Washing' 차단
 - 해외시장과 기업 구조조정에서 국세청의 관리감독(Compliance Check) 강화

나. 경제활성화

- 미래 성장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 강화
 - 도시 및 특정지역에 대한 주요 인프라 건설
 - 도로 건설에 FY2012-13부터 10년간 410억호주달러를 집중 투자, 우기에도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안전강화 및 침수예방

- 브리즈번강 횡단철도 프로젝트(Brisbane Cross River Rail Project)에 7억호주달러 투자, 이를 통해 도심철도 네트워크의 가용성 확대
- 서부지역 대중교통 프로젝트, 공항직통철도 건설 등에 5억호주달러 지원
- 인프라 자금지원에 민간부문 참여 확대
 -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위해 재무부 내 새로운 자문기능 도입, 이를 통해 민관(民官) 합작 프로젝트 시행 시 자금 지원·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NBN; National Broadband Network) 구축
 - 접근속도 개선으로 미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74억 호주달러 투자
 - 특별히 디지털경제에 참여하고 NBN을 이용할 지방정부, 소기업,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290만호주달러 지원
- 국내 고용시장 보호 계획
 - 국내사업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 지원
 - 5억호주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추진 시 호주산업 참여계획(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Plan) 의무화
 - 반덤핑개혁(Anti-dumping Reforms) 강화
 - 관련 조사를 위해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 신설
 - 호주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비스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반덤핑규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해외 생산자들에 대한 처리 강화
 -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약 4억호주달러 지원
 -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방식 개선
 - 공공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입찰 지원 프로그램에 약 3천만호주달러 지원
 - 기업 간 기술, 수송, 물류, 전문서비스에 대한 정보교류 확대
 - 이외에도 수출확대 소기업 지원, 자원발굴 촉진, 구직자 지원 정책 등 존재

다. 공정사회구현

- 장애복지기관(DisabilityCare Australia) 운영
 - FY2012-13에서 합의된 장애복지기관 운영을 '13년 7월부터 4지역에서 시작하고, '14년 7월부터는 2곳 추가
 - 0~14세 어린이 대상인 북부지역과 15~24세 청년 대상인 태즈매니아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헌터지역과 빅토리아 주의 바윈지역은 '13년 7월 시행지역
 - 수도특별지역과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2014년 7월 시행지역
 - 운영지역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
 - FY2013-14 시행부터 3년간 약 26,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

- 퇴직연금제도 개혁(Reforms for a Fairer Superannuation System)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개혁 시행
 - 퇴직연금자산에 대한 면세 확대
 - '13년 7월부터 60세 이상, '14년 7월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35,000호주달러 납입 시 세금공제혜택 부여
 - '15년 7월부터 일반연금 소득심사를 퇴직연금계좌 소득으로까지 확대
 - 퇴직연금 휴면계좌 잔액분의 국세청 이관 기준금액을 '15년 12월 31일부터 2,000호주달러에서 2,500호주달러 미만으로, '16년 12월 31일부터 3,000호주달러 미만으로 변경
 - 전망기간 동안 약 9억호주달러의 예산절감 전망
 - 향후 변화는 퇴직연금현장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퇴직금관리인협회(Council of Superannuation Custodians)를 설립할 예정